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대응전략 및 기여방안 연구

2002. 2

한 화 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최종보고서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대응전략 및 기여방안 연구

2002. 2

연구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 경 부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용역과제인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대응전략 및 기여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한화진 선임연구위원

연구실무책임자: 김준순 책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강상인 연구위원

김용건 연구위원

조승현 책임연구위원

강만옥 연구위원

정영근 연구위원

문인수 위촉연구위원

김현정 위촉연구위원

김승만 위촉연구위원

2002.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제 목 차 례>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기간	4
3. 연구의 목적 및 체계	4
II. WSSD 관련 논의 동향 조사 및 분석	7
1. WSSD 준비회의	7
1.1 1차 준비회의	7
1.2 2차 준비회의	9
1.3 향후 준비회의 계획	13
2. WSSD 지역회의	14
2.1 중남미와 카리브해지역	14
2.2 서아시아지역	16
2.3 아시아태평양지역	19
2.4 아프리카지역	22
2.5 유럽과 북미지역	23
2.6 5개 지역회의의 종합	25
III. 주요의제별 현황 및 국가대응전략	37
1. 세계화	37
1.1 국외현황	37
1.2 국내현황	38
1.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38
2. 빈곤	39
2.1 국외현황	39
2.2 국내현황	41
2.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42
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43
3.1 국외현황	43
3.2 국내현황	45
3.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46

4. 에너지	47
4.1 국외현황	47
4.2 국내현황	48
4.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49
5. 건강	50
5.1 국외현황	50
5.2 국내현황	52
5.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53
6. 생물다양성	54
6.1 국외현황	54
6.2 국내현황	55
6.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56
7. 담수	57
7.1 국외현황	57
7.2 국내현황	58
7.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59
8. 자원조달 및 확충	60
8.1 국외현황	60
8.2 국내현황	61
8.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63
9. 기술이전	63
9.1 국외현황	63
9.2 국내현황	65
9.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66
10. 관리체제	67
10.1 국외현황	67
10.2 국내현황	67
10.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69
 IV. UN 권고사항 및 대국민 인식증진 방안	73
1. WSSD를 위한 UN 권고사항	73
1.1 개요	73
1.2 선정방법	74
1.3 101가지 방법	76

1.4 국가추진목표(NPT)	143
2. 대국민 인식증진 방안	154
2.1 개요	154
2.2 추진 방법	155
2.3 홍보전략	156
2.4 홍보방법	157
2.5 시기별 추진계획	159
2.6 홍보안 예시	160

V. 결론	171
-------------	-----

참 고 문 헌	173
---------------	-----

[부 록]

부록 I. 제2차 준비회의 의장보고서	177
부록 II. 아시아 지역회의 결과	222
부록 III. 이행사례 및 NPT를 위한 설문	271

<표차례>

<표 II-1> 의장보고서 의제별 주요 내용	13
<표 II-2> 5개 지역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	26
<표 III-3> 주요 의제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32
<표 IV-1> 우수사례 평가기준	75
<표 IV-2> 101가지 방법에 응모한 기관 및 단체	76
<표 IV-3> 단계별 홍보전략안	157
<표 IV-4>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시기별 추진계획안	160

I. 연구의 개요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세기말에 접어들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학계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하여 개최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된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스톡홀름선언(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이 날을 기념하여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한 이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 ‘이동성 야생동물종보전에 관한 협약’(1979)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접어들어서도 대기·해양오염, 기후변화, 오존층·산림 파괴, 생물 다양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WCED)의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에서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제기되었다.

1989년 제44차 UN총회에서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개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니로에서 100여 개국의 정상을 포함한 178개국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정상회의(일명 리우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산림보호, 동식물보호, 기술이전, 인구조절, 환경을 고려한 자연개발 등 7가지 주요의제를 논하였고, 그 결과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종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선언 및 지속가능발전 행동프로그램인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의제21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경제·환경 세 가지

핵심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이 때, UNCED에서는 의제21에 대한 각국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를 유엔총회에 권고한 결과, 1992년 12월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에 UNCSD를 설치키로 결의하였다.

UNCSD는 국제사회에서의 의제21 이행상황, 특히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재정 및 기술지원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구로서 환경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재정, 기술이전, 무역, 생산과 소비, 산림, 담수 자원 등 폭넓은 의제에 대한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0년 제8차 UNCSD회의(CSD-8)에서는 리우회의 이후 10년 동안의 이행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 또는 Rio+10]를 개최할 것을 유엔총회에 상정하였고 이에 2000년 12월 제55차 유엔총회에서는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WSSD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이번 정상회의의 슬로건을 “people, planet and prosperity”로 확정하였다.

2002년 WSSD 준비를 위하여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제1차 준비회의(PrepComI)에서는 의장단(Bureau) 선출을 비롯하여 주요 그룹, 지역, 국가, 권역 및 국제 수준에서의 준비활동 진전사항, 향후 준비회의의 구체적 절차, 정상회의의 의사규칙, 주요 의제, 그리고 주요 그룹의 참가범위 등을 논의하였다. PrepComI에서의 합의에 따라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지역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때, 채택한 지역강령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2002년 1월말에 열렸던 제2차 준비회의(PrepComII)에서는 이러한 지역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의장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향후 무역, 기후 등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의 논의방향은 WSSD에서 협의된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리우회의 이후 국내적으로는 환경정책과 대책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유엔이 정한 지침에 따라 1993년 이후 CSD 국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1994년부터 10년 단위의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자연자원의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제2차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를 5년 계획으로 1997년에 시작하였다. 또한 그 동안 이루어 왔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93), ‘생물다양성협약’(1995), 랍사협약

이라 불리어지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1997) 등의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였다.

민·관·기업간의 파트너쉽과 NGO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리우회의(의제 21, 제28장)에 부응하여 부산광역시에서는 1995년 9월 「녹색도시 부산 21」을 작성하였다. 2001년 12월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16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의제21’ 수립을 완료하였고 46개 지자체가 수립 중에 있다.

1994년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작성을 결정함에 따라 1996년 3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여 10월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을 통합시킨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국가적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린 바 있다. 또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천 년 국가환경비전”을 선포하였다.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0년 9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를 설립하였다.

유엔 권고에 따라 2001년 3월부터 PCSD를 WSSD 국가준비위원회로 지정하고 산하에 실무준비위원회와 3개 대책반(총괄대책반: PCSD, 전략대책반: 환경부, 협상대책반: 외교통상부)을 구성하여 유엔권고사항 이행, 기본방향 설정, 협상전략 마련 등에 대해 각 대책반마다의 역할을 분담하여 WSSD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¹⁾ 2001년 9월에는 「WSSD를 위한 한국여성위원회」가 설립되고 10월에는 산업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최근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2002년에는 각종 지방선거, 월드컵개최, 대통령 선거 등의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국외에서는 2001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계속되는 일본의 경기침체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제공황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범지구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WSSD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한 이행사례(유엔에서는 이를 ‘101

1) WSSD 준비위원회의 운영지침, 구성, 역할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2001b) 자료에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ways'라 칭함)를 선정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추진목표(National Progression Targets: NPT)를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 및 기여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기간: 2001. 11. 7 - 2002. 2. 28

3.. 연구의 목적 및 체계

본 연구의 목적은 WSSD 관련하여 주요 의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수립시 검토요망사항을 제시하고 대국민 인식증진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되기 전에 이미 WSSD에 대한 제1차 준비회의(PrepComI)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회의가 개최된 상태였고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1장인 연구의 개요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의 배경에서는 WSSD가 개최되는 국제사회의 배경과 함께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정황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UN 차원의 논의동향과 지역차원의 논의동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UN차원의 논의동향에서는 제2차 준비회의 의장보고서에서 발표한 의제에 대해 정리하였고, 지역회의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요 의제별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차 준비회의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제2장에서의 논의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국가 입장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과 검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검토사항은 정부부처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제4장에서는 유엔 권고사항의 수행을 위해 그 동안 국내에서 추진하였던 모범적인 이행사례를 발굴하고, WSSD 이후에 추진할 국가추진목표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WSSD를 기해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WSSD 관련 논의 동향 조사 및 분석

II. WSSD 관련 논의 동향 조사 및 분석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의 개최 전에 지역회의와 함께 네 차례의 준비회의를 계획하였다. 지금까지 지역회의와 두 번의 준비회의가 진행된 상태이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별로 구분하여 개략적인 내용과 함께 거론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1.. WSSD 준비회의

1.1 1차 준비회의²⁾

2000년 12월 제55차 유엔총회에서 WSSD를 개최하기로 합의 한 후 2001년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3일 동안 유엔 본부에서 정부대표, 국제기구, NGO를 포함한 주요그룹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차원에서의 1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 지방·국가·지역·국제 차원 및 주요그룹의 준비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준비회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의사규칙을 결정하였다.

9개 주요그룹에서 토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그룹에서는 이해관계자별로 구분된 회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NGO와 정부간의 상호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별 회의방식을 제안하였다. 무역그룹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공하는 win-win-win 전략을 설명하였고, 경제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의 강화를 위한 재원확충, 개도국의 과학기술 능력배양 필요성, 과학과 기술의 정보교환과 윤리의식을 강조하였다.

일반토의에서 UNEP 사무총장은 의제21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리우회의 이후 세계화³⁾로 인한 교역량의 증가,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의 발달,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등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각국에서 개진한 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G77/china를 대표해서 이란은 IEG

2) 출처: 환경부(2001b)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 세계화: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세계화와 지속가능개발)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지만 별도 기구를 창설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EU를 대표하여 발언한 스웨덴은 공공-민간, 선진-개도국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2002년 정상회의는 행동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세계화를 강조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요 이슈로 관리체제(governance)⁴⁾를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개최한 UNCSD-9에서 우리 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비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조사연구, 지속가능전략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마련 그리고 지구 차원의 종합 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황사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요청하여 UNEP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환경부, 2001a).

사무국에서는 참여국에게 차기 제2차 준비회기까지 다음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CSD 제출 국가보고서, 국가보고서, 국가개요서 및 분석에 기초한 모든 차원의 의제21 이행 추세 및 장애요인
- 개도국의 의제21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 또는 지구 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에 지원한 활동
- UNCED 이후 의제21 이행을 위한 주요 그룹의 기여 경과
- 1993년~2001년 기간 중 CSD의 주요결정과 권고사항 이행

빈곤퇴치, 고용, 식량안보, 공공보건, 농촌개발,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 효율적 자원이용에 의한 경제성장과 환경피해의 분리, 세계화, 재정, 의제21 이행수단, IEG, 관리체제 등을 정상회의때 논의할 주제로 거론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환경개선을 중요한 이슈로써 의제21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수단에 관심을 갖은 반면, 개도국들은 빈곤퇴치 및 재정지원과 같은 사회·경제 이슈를 강조하였다.

향후 준비과정 및 정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그룹의 적

4) 20세기 후반 냉전종식 후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리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Global Governance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Global Governance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서 주권적인 권위가 부재한 국제사회에서 정부 행위자와 비정부적 행위자들이 전지구적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협력적인 다양한 방식들의 총합을 의미한다.(<http://www.kaisnet.or.kr/g-01-7.htm>)

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조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행 수단 및 방법에 합의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1.2 2차 준비회의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되었던 5개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근거하여 WSSD 협상문안 초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제 설정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2002년 1월 28일~2월 8일간 뉴욕에서 제2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채택용 협상초안을 작성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주제별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의제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이한 입장을 서로 견지하였다. 선진국은 국내 관리체제의 중요성, 개도국의 선진 자본·기술 도입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기술·재정지원, 세계화, 빈곤퇴치,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패턴, 이행, 국제 관리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무연연료의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 사용, 지구환경금융의 강화, 자원주권의 확립, 월경문제의 해결 등을 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WSSD 개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산·소비패턴과 관리체제를 강조하였다.

선진국은 인권과 합리적인 관리체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하면서 경제성장의 척도인 GDP가 빈곤퇴치와 환경보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기준의 이행과 개도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Global Deal”⁵⁾을 지지하였다.

UN에 속한 몇 개 기구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체제, 환경세, 기후변화, 수자원, 빈곤, ODA, GEF, 에너지 등 다양한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동 준비회의에서는 이들 주요의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제3차 준비회의에서의 협상마련을 위한 의장보고서(부록 1. 참조)를 완성하는 등의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동 의장보고서는 향후 개최될 두 차례의 준비회의와 정상회의의 기본 문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동 의장보고

5) “Global Deal”은 EU에 의해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의 통상논의와 2002년 WSSD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연계하여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되었다. 세부 이행사항으로는 리우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도국 시장접근, 개발원조, 부채탕감,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환경보호, 노동기준 강화, 세계무역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선진국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가시적 기여를 위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노력을 배가하는데 동의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강상인 외, 2002).

서는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분된다:

- introduction(도입)
- poverty eradication(빈곤퇴치)
-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비지속적인 소비와 생산패턴의 변화)
-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경제·사회 발전에 기초한 천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
-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세계화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보건과 지속가능발전)
-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for Africa(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 means of implementation(이행수단)
- strengthen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 위한 관리체제의 강화)

의장보고서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들은 제1차 준비회의 이후에 발표한 UN사무총장 보고서와 유사하며 각 의제에 대해 제안 또는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빈곤퇴치

빈곤퇴치는 국제사회의 협력에 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용이한 의제인 동시에 다른 주요의제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빈곤퇴치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담수, 에너지, 농촌 및 도시 발전, 인간정주, 교육, 질병 등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1) 비지속적인 소비와 생산패턴의 변화

생산과 소비에서 제일 부각되는 인자는 에너지이다.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패턴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4배로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전체 에

6) 제1섹션인 도입부를 제외하고는 9개의 주요의제로 구분된다. 마지막 섹션인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제’는 제3차 준비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였다.

너지 소비의 5%가 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노력과 함께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대중교통수단의 투자, 도시쓰레기 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2) 경제·사회 발전에 기초한 천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

본 장은 물, 해양·연안, 재해, 기후변화, 대기 및 오존층 보호, 사막화방지, 산악, 관광, 생물다양성, 산림, 채광, 총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개도국은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균등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통합관리와 수자원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해양환경에서는 어업협정의 이행,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지원, 효과적인 국제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기후 및 대기에서는 그 동안 합의한 교토의정서의 이행, 몬트리얼 의정서에 대한 개도국으로의 지원, 기후변화 관련 연구의 지원 등을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등을 촉구하였다.

(3) 세계화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세계화가 적절히 운영된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계화 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개도국을 소외시켰으며 불안한 금융체계가 표출되었다. 이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의 타당하고 책임 있는 세계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국가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요청하였다.

선진기업들이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세계화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WTO가 주최하는 도하아젠다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4) 보건과 지속가능발전

건강 악화의 주 요인으로는 물·공기오염, 소음, 혼잡,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등을 들 수 있다.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체계의 강화, 자동차연료 기준의 강화 그리고 다양한 병원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자연요법 치료 방법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것을 언급하였다.

(5)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독립적인 섹션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인 면에서는 대륙에서 떨어져 있어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요소들의 미미한 변화에도 쉽게 피해를 입

을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주변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경제 충격에 대한 피해는 다른 곳보다 크게 받을 수 있다.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생태관광, 지역 단위의 어업관리기구의 설립 등을 지지하였고, 지리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자연자원 취약성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였으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일반 개도국에서 주장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을 권고하였다.

(6)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아프리카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세계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낙후되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대륙으로 인정되어 분리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취약한 다른 대륙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취약성을 인정하지만 자국이 속한 지역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가장 큰 문제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기술이전, 재정지원, 부채탕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질병퇴치와 농업생산량의 증대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7) 이행수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섹션에서는 재정, 무역, 기술이전, 과학 및 교육, 능력양성, 의사결정 정보로 세분화하였다.

재정에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선진국에게는 2010년까지 GNP의 0.7%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GNP의 0.15~0.20% 정도를 저개발국가에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세금체제의 개편과 재정 관련 국제기구의 대출정책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무역에서는 시장왜곡을 야기하는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 철폐를 촉구하였다.

기술이전에서는 특히,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인 EST(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기술개발과 개도국으로의 이전을 강조하였다.

과학 및 교육에서는 능력양성의 제고, 교육과 연구의 강화, 여성의 권한 강화를 촉구하였다. 능력양성에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권고하였다.

의사결정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역 통계 및 분석 서비스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지표의 개발, 위성기술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표 II-1> 의장보고서 의제별 주요 내용

공통 의제	주요 내용
빈곤	- 담수, 에너지, 농촌 및 도시발전, 인간정주, 교육, 질병 등과 연계
소비·생산	- 에너지 강조(화석연료의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의 점유율 증대, 천연가스의 사용 증대) - 매스미디어의 역할 강조 - 개도국으로의기술이전, 대중교통수단의 투자, 도시쓰레기 관리 강조
천연자원	- 물, 해양·연안, 재해, 기후변화, 대기 및 오존층 보호, 사막화방지, 산악, 관광, 생물다양성, 산림, 채광으로 구분하여 언급
세계화	- 균등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 국가보조금 철폐
보건	- 주요인으로 물·공기 오염, 소음, 혼잡,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HIV/AIDS 등을 언급 - 방지대책의 강화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 자연재앙에 취약한 특성을 인정 - 바르바도스 행동계획의 이행노력의 지원
아프리카	- 세계화에 소외되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 기술 및 경제 협력의 강화 및 지원
이행수단	- 재정, 무역, 기술이전, 과학과 교육, 능력형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구분 -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GNP의 0.7%를 ODA로 활용 - 투자와 기술이전의 유인환경을 조성토록 개도국 지원 -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리체제	- 제3차 준비회의 때 논의하기로 결정

1.3 향후 준비회의의 계획

제3차 준비회의는 2002년 3월 25일~4월 5일 동안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준비회의 때 완성한 의장보고서를 완성하고 향후조치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할 것이다.

제4차 준비회의는 각료급 준비회의로서 2002년 5월 27일~6월 7일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때에는 PrepComIII에서 합의된 문서를 바탕으로 정상회의의 문서를 구체화하고 요약문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문서에는 지

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의 필요성, 의제21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전략적 접근법의 필요성, 1992년 리우회의 이후에 나타난 세계화 등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입장 등이 언급될 것이다.

2.. WSSD 지역회의

제1차 준비회의 폐막 후에 UN이 정한 5개 지역(유럽·북미, 중남미·카리브해, 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태평양)별로 소지역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01년 9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지역회의가 진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각 지역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파악하였다.

2.1 중남미와 카리브해지역⁷⁾

정상회의를 위한 동 지역회의는 네 번의 소지역회의를 개최한 후, 브라질에서 2001년 10월 23~24일 동안 열렸으며, 이 때 세계화, 빈곤, 재정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중남미와 카리브해지역은 민족, 문화, 생물자원 등이 다양한 지역이나 현재는 매년 6백만ha의 산림이 손실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해 해안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인구는 멕시코시티와 상파울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국가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한 지역이다. 현재는 취약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4개의 소지역의 예비회담 내용에 바탕하여 원칙과 공약의 재천명, 장애 및 교훈, 현재의 고찰 그리고 미래 공약, 이렇게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⁸⁾

7) 출처: <http://www.iisd.ca/linkages/download/pdf/enb2206e.pdf>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prep_process/regional_docs/plataforma_final_ingles_7dec2001.pdf

http://www.johannesburgsummit.org/web_pages/lac_roundtable_report.htm

8) 출처: <http://www.eclac.cl/dmaah/noticias/paginas/5/8435/platform1.pdf>

‘원칙과 공약의 재천명’에서는 리우원칙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회담에서의 선언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각국의 고유한 환경 및 개발 정책에 의한 자원의 이용은 그 나라 고유의 권리임을 재확인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책임은 차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 및 교훈’에서는 환경과 융화하며 인간이 중심이 된 발전을 강조하면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선진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선진국 중심의 무역체계, 소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고찰’에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와 건전한 세계화의 필요성과 함께 환경정책의 통합 필요성 그리고 정보기술을 포함한 과학 기술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공약’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구조」,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그리고 「행동의 공식화」 이렇게 세 종류의 서브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구조」에서는 지방, 국가, 지역간의 협력체제를 개발하고 환경, 사회, 경제정책의 통합을 촉진하는 기구의 발족과 강화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서는 선진국의 ODA 목표치인 GNP의 0.7%를 재확인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며 GEF에 대해 지지하였다. 「행동의 공식화」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체계 및 국제적인 협력,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지지,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 및 고효율, 그리고 WSSD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추진을 위한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적인 균형, 생태적인 안정, 인권의 향상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과거 10년 동안 시민사회의 증진된 인식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악화되는 원인을 빈곤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함을 강령에 수록하였다. 경제여건이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의 투기자금의 흐름으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면서 건전한 투자와 무역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동등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HIV/AIDS와 같은 질병, 극심한 빈곤,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패턴, 환경악화, 부의 편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장하였다.

인간정주 조건의 개선을 위해 人災(man-made disasters)를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토지관리, 폐기물과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통합수자원관리체계로의 전환,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국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UNFF(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의 산림행동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재생가능자원 활용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공급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혜택이 균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위한 토지와 수계(bodies of water)의 통합 관리를 증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자간환경협정(MEA)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협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교토 의정서 등의 국제협약에 대한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였다.

국가 또는 국제사회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군소도서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의 위험을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의제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GNP의 0.7%에 해당하는 ODA를 출자할 것을 선진국에 촉구하는 한편, 과도한 외채로 고통받는 개도국을 구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개방과 기술이전을 위한 수단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GEF의 추가적인 기금마련을 촉구하였고 유엔의 ICFFD(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는 범세계적으로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체계로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의 다양한 체계와 경제, 사회, 환경 전략간의 일관성을 증대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곡된 국제무역, 투자, 자본흐름, 보조금 등을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였고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국제교역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새로운 환경윤리(new environmental ethic)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핵심주제(central theme)를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화를 향하여”로 정하였다.

2.2 서아시아지역⁹⁾

서아시아지역회의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열린 West Asia Thematic Roundtable 회의(2001. 4. 9~11)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9) 출처: <http://www.iisd.ca/linkages/download/pdf/enb2207e.pdf>

- 적절한 담수자원과 토지관리 결여
- 평화와 안보의 결여
- 믿을만한 정보와 모니터링의 결여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공참여의 결여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는 2001년 9월부터 NGO포럼, 산업포럼, 이해관계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는 2001년 10월 12~22일에 환경과 개발에 대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the Arab Region: JCEDAR) 모임과, 23일에는 환경을 위한 아랍권 장관위원회(Council of Arab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 CAMRE) 모임을 개최하여 일반 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북아프리카 10개국과 중동 12개국으로 구성된 서아시아지역회의를 10월 23~24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지연된 24일 오후에 개최되었고 이 때에는 CAMRE 회의 결과를 승인하는 정도로 진행되어 4시간만에 회의가 종료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CAMRE 의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인 Fahd bin Abdallah Al Saud는 세계화, 시민 참여의 중요성, 환경적 고려사항들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사항들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적, 각료 수준의 Arab council의 설립을 제안했다. 서아시아 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의 Omar Touqan은 그 동안 여성과 NGO의 역할 증대가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장애물로 정치 불안정을 지적하였다.

League of Arab States의 경제분과의 Kamal Sanada는 급속한 국제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세계화로 인해 이익을 보고자 했던 개발도상국들의 실패 그리고 세계 경제와 국제 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상회의가 아랍 국가들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국가간의 협력, 문화를 포함한 환경과 개발의 포괄적인 통합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랍 지역의 입장을 정상회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WSSD 준비 과정에서 G-77/China 등의 지역과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의 대표는 최근 아랍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지적하면서 준비회의와 지역 모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랍지역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은행을 대표한 연설에서 “Johannesburg Summit의 성공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의해 성공하는 것이 아

나라 무엇을 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환경적 논쟁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2002년 1월말에 개최되는 제2차 준비회의 때 제출할 평가보고서에는 건강, 교육, 빈곤, 경제상황, 에너지 소비, 담수자원 그리고 토지개간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였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자간환경협정과 관리체제, 지원된 재정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채경감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였다.

이 때 발표된 선언문에서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구축, 빈곤의 퇴치, 인구성장률의 감소, 인재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청정생산체제의 구축, 시민참여를 구체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핵심의제(priorities)로 지역 및 세계기구와의 협력체제의 강화, 빈곤퇴치, 인구성장 및 도시화에 대한 정책개발,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강조하였다.

군사화는 인력낭비와 함께 공유 가능한 수자원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평화와 안보 확립을 동 지역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민족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의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인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교육, 고용창출, 천연자원의 법률적 사용, 사회구조의 안보, 국가부채, 민간부문(private sector) 그리고 시민사회 등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전략을 지지하였다. 또한 인구성장률 관리와 도농인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인구정책을 주장하였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문맹퇴치, 과학인력의 양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감소와 함께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에너지로의 전환에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건강 및 환경증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음용수 제공, 고형 폐기물 관리, 유전자 변형 생명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에 기인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천연자원의 질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속관리를 강조하였다.

제도와 이행수단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기구 설립과 함께 기존의 유엔기구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DA로써 GNP의 0.7%를 출연하고 GEF의 재원마련에 힘써야 할 것을 선진국에 촉구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표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서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주로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동 지역회의에 국가를 대표한

참석자들 대부분이 환경 관련부처에 종사하고 있다.

2.3 아시아태평양지역¹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일본, 호주 그리고 신생공업국들과 극심한 빈곤국들을 포함하여 대다수 개도국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의제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함으로 인해 대립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각국 대표단들은 2001년 11월 27일과 29일 프놈펜에서 열린 WSSD를 위한 고위급 지역회담에서 그 동안의 지역 내에서의 의제21 이행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WSSD 준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들, 우선해야 할 일, 목표, 제약과 조치들을 확인하였다. 동 회의는 강령에 대한 비공식적 전문가회의와 함께 이해관계자 원탁회의 및 각료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 회의의 2가지 성과는 비공식적 마라톤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프놈펜 지역 강령’과 ‘원탁회의 의장 요약서’라 할 수 있다.

지역회의에 앞서 25일~26일 동안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¹¹⁾에 따르면 리우회의 이후 지난 9년 동안 의제21의 이행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그 원인을 정치지도자의 역량 부족이라 하였다. 한편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인 세계화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7일 개최된 비공식 전문가회의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ODA, 환경문제까지 다루고자 하는 현 WTO 실패, 적절한 기술이전 메커니즘의 필요성 등의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28일 열렸던 원탁회의의 특별 세션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ODA, 재원조달에 있어 민간부문의 소극적인 태도, 혁신적인 금융메카니즘 이행의 부족 등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였다.

고위급 지역회의에서의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대표는 이번 세계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의 관리체제, 세계화, 재원 및 기술지원, 자연자원의 보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각국의 성명발표에 앞서 김학수 사무총장은 빈곤퇴치, 바람직한 세계화 추진,

10) 출처: <http://www.iisd.ca/linkages/download/pdf/enb2208e.pdf>

원문의 번역문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11) 자료: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prep_process/regional_docs/peoples_forum_statement_asian_prepcom.doc

생물다양성 보존과 자연자원의 관리, 관리체제, 자원 등에 대해 강조하였다.

국가별 성명에서 한국은 월경성 대기오염 및 사막화 문제의 해결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의제21 이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빈곤과 불공평을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인정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의제21의 불충분한 이행 등을 지적했다. 북한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가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은 환경의 충격을 감소시키고 자연재난들을 관리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사용, 기타큐슈 선언(Kitakyushu Declaration)과 교토 의정서의 완전한 이행, 남-남(South-South) 협력,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상 규정 개발 등을 주장했다.

이행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다자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제도화, 지속가능발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표와 지표체계 개발 등에 관한 제안들이 합의됐다.

동 지역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프놈펜 지역 강령’(ENR/HRM/WSSD/1/Rev.1)이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은 ① 의제21 이행에 대한 역내 평가, ②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이슈와 선결 과제(여기에는 경제적·사회적 이슈, 환경 및 자연자원 이슈, 공통 이슈(Cross-cutting Issues)로 세분되어 있음), ③ 후속 조치들, ④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금 조달, ⑤ 최종 성명, 이렇게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의제21 이행에 대한 역내 평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당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빈곤인구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만연된 빈곤, 불충분한 자원, 군소 도서 국가의 고립과 취약성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이슈와 선결 과제’에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빈곤타파에 역점을 둔 세계화, 환경보호와 관리, 바람직한 관리체제, 시민참여, 인간개발 등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다루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후속 조치들’은 목적과 목표, 아시아태평양 발의들, 이행 메커니즘으로 세분되며, 목적과 목표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적과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설정한 목표의 달성을 언급하였고 아시아태평양 발의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타큐슈 지역활동계획(Kitakyushu Regional Action Programme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발의(Initiative for a Clean Environment)’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였

12) 프놈펜 지역 강령의 내용은 부록 2.에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다. 이행 메카니즘에서는 정부의 역할, 교육과 보건시스템, 권력의 분산화, 지속가능발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체계와 목표 등의 이행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금 조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 동원의 중요성, 수출시장의 활성화, 민간 자본의 유연한 흐름, GNP의 0.7%인 ODA 달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최종 성명’에서 채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언급된 이슈들과 발의들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을 WSSD에 요청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프놈펜 강령’, ‘Kitakyushu Regional Message to the 10-Year Review of UNCED’ 그리고 ‘지역활동계획 (Regional Action Program)’을 WSSD에 제출한다.
- 국제적 공동체들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다.
- WSSD와 이의 준비과정에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 모든 국가들에게 정상회의에 최고위급 수준에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동 회의에서는 평화와 안보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주요 의제는 빈곤, 세계화, 에너지, 농업, 생산과 소비, 인간개발, 생물다양성, 담수, 기후변화, 관리체제,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이다.

세계 빈곤인구의 2/3가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빈곤인구는 일시적인 빈곤의 상태가 아닌 만성적인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토질의 저하 또한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나 저개발국가는 아직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계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해서는 과소비형인 소비패턴을 줄이고, 실용 가능한 청정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왜곡된 무역정책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RD)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간정주와 관련해서는 대도시 문제의 심각성을 주로 다루었으며 인력개발에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 강조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과 사막화방지협약, 유엔산림포럼(UNFF)의 실행계획들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의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담수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지역협력을 언급하였다.

경제, 사회 및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의사결정 체제와 지속가능발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권력의 분산화 및 지방기관의 강화, 부패척결, 투명성 및 신뢰성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2.4 아프리카지역¹³⁾

동 지역회의에 앞서 2001년 6월 25~27일 동안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개최한 아프리카지역 원탁회의의 내용을 10월에 열리는 지역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UNEP 본부가 위치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2001년 10월 15~18일 동안 개최된 지역회의에서는 평화 및 안보, 빈곤, 세계화, 부채, ODA,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한 의제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고자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을 국제사회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리우회의 이후 자체에서 평가한 아프리카지역의 성과로서 삶의 질 개선, 여성 교육기회 제고 및 지위 향상, 환경 및 자연자원의 훼손위험성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통합 필요성 인식,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빈곤, 더딘 경제성장, 지역비하인식(Afro-pessimism), 부채, 전쟁과 사회불안, 비효율적 경제구조, 자연환경의 악화, 나무, 분노 등과 같은 전통적 에너지 소비, HIV/AIDS 등의 질병, 자연재해의 증가, 정보의 부족, 지속가능발전의 진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결여 등을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인자로 평가하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화, 교육의 제고를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 식량문제, 에너지공급, SOC투자, 평화와 안보를 언급하면서 실행수단으로는 제도적, 사회적 개선과 함께 국내외적인 재정 지원을 제시하였다.

빈곤퇴치와 관련해서는 밀레니엄 선언에서 천명한 빈곤을 줄이고자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계화가 아프리카의 빈곤을 보다 심화시켰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World Solidarity Fund 창설을 제안하였다. 아프리카는 식량자급 잠재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5년 내에 아프리카의 곡물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면서 사막화 방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공업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을 육성해야 함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선진국의 유전자조작식품의 실험장으로

13) 출처: <http://www.iisd.ca/linkages/download/pdf/enb2205e.pdf>

전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HIV/AIDS 등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는 빈곤 감소, 담수의 질 개선 등의 다른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FDI의 증가, ODA의 이행 그리고 부채탕감 등의 국제 사회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향후 10년 동안의 이행을 위한 의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의 강화를 위해 제도개발, 역량구축, 자원관리에 역점
- 인력개발은 역량구축의 핵심으로 교육, 문맹 퇴치, 여성 교육이 중요하며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내 인적자원 활용 방안 개발
- HIV/AIDS 등의 전염병 방지 및 위생설비 증대
- 식량확보를 위한 과학적 영농보급
-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립
- 빈곤층과 빈곤국가를 배려한 천연자원에 대한 형평성
- 농촌지역의 에너지 확보 방안과 재생에너지 활용(필요한 재원과 기술이전이 필요)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기술의 보급
- 지역간의 연대감 강화
- 평화와 안보의 확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조치로는 조세제도의 합리화, 해외거주민들의 본국 송금 권장,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군비축소를 제시하였으며 대외 조치로는 외채 탕감을 요구하고 무분별한 해외자본의 유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세계정상회의가 아프리카의 발전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프리카 신전략(New African Initiative: NAI)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2.5 유럽과 북미지역¹⁴⁾

중앙아시아의 일부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전지역과 미국, 캐나다가 속한 북미가 이 지역에 속한다. 2001년 9월 24~25일 동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과 북미지역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스위스의 외교장관은 균등한 세계화의 추진과 국가간의 불균형 해소를 제안하였다. UNECE(UN Economic Commission for

14) 출처: <http://www.iisd.ca/linkages/download/pdf/enb2204e.pdf>

Europe)에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의 의사결정에 환경문제를 고려할 것과 지방 의제21과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UNEP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global deal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각국의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의무를 인정해 줄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관리체제의 지지, 청정기술의 개발 및 기술이전, 남반구 제품에 대한 시장의 조성, 과학기술의 책임 있는 이용, 의무이행을 위한 강력한 체제의 구축과 기능의 증진, 정보 접근의 확대 등을 촉구하였다.

각료급 선언문은 ‘관리체제와 지속가능발전’, ‘빈곤과 지속가능발전’인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체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협력체제를 강조하면서 선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의 패턴 역시 정부의 협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합리적인 관리체제는 민주주의, 자유, 신뢰, 효율적이고 공평한 제도적 기반, 시민에 대한 신뢰할 만한 권리, 투명성, 그리고 공공참여에 기초한 시스템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경제화 과정에 있는 국가 또는 신생독립국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채무저감 방법의 하나로써 환경질의 개선 정도에 따라 채무액의 일정수준을 절감해주는 debt-for-environment swaps를 지지하였다. 2002년 세계정상회의에서의 핵심의제라 할 수 있는 빈곤의 원인을 전쟁과 무력갈등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global deal의 요소, ODA를 포함한 재정지원,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자원소비에 대한 “ecological footprint”의 적용, 오염자부담원칙과 환경훼손에 대한 책임, 국내 재생에너지활용을 위한 목표설정, 토착민과 구성사회의 인식과정의 등이 논의되었다. 각료선언문에서는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의제로써 빈곤퇴치,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화의 역할, 관리체제 및 민주 절차의 증진, 지속적인 재원조달,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 과학 및 기술 등이 채택되었다.

빈곤퇴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환경과 빈곤, 무역과 인류의 안정간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에서는 깨끗한 물, 공중위생, 해양과 바다, 연안지역, 산, 토지사용, 삼림, 생물다양성, 에너지, 광물과 금속, 건강 및 환경분야에서 구체적인 initiative와 함께 “UN Forum on Forests”의 행동계획의 실행 강화 등의 주장이 있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국가별로 환경보호 목표를 설정 및 촉진, 천연자원을 활

용하는 토착민(북극 지방 거주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MEA를 포함한 국제 법적 기구의 강화된 역할, 산림과 화학물질의 관리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체제 및 민주 절차의 증진에서는 지방의제21 전략의 개발과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환경기구의 기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속발전 재원조달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발전을 위해 국내 자원과 무역자유화 및 민간자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재원조달은 지속가능발전 재원조달회의(UN Conference on Financing for SD)에서 구체화된 내용에 기초하였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있어서 혁신적인 재원조달방식을 개발하며 대부분의 UNECE 국가들은 ODA가 GNP의 0.7% 수준에 도달하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UNEP에 대한 필요한 재원의 제공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었던 의제는 ecological footprint, global deal, ODA targets, 예방원칙 및 오염자부담원칙 등이다. 그밖에도 북반구의 과소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럽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자원효율적이고 오염발생이 적은 산업으로의 전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악화,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손실, 화학오염, 세균 오염의 저감; 경제, 사회 복지의 불균형의 해소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2.6 5개 지역회의의 종합

주로 논의된 의제를 5개 지역별로 <표 II-2>에 정리하였다.

<표 II-2> 5개 지역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

	유럽·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서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경제 / 사회	- 빈곤퇴치 - 세계화 촉구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의 강조	- 빈곤퇴치 - 산업발전을 위한 전지구적 원조를 촉구 - 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선진국의 농업지원 정책의 철회 촉구 - HIV/AIDS의 퇴치 - 여성의 지위향상과 건강 증진 - 인간 정주	- 동등·포괄적인 세계화 - 국제협력의 강화(극빈, 저개발, 비지속적인 소비 및 생산 패턴, 환경악화, 부의 편중, HIV/AIDS, 자연재난) - 인간정주 조건의 개선	- 평화와 안보 확립 - 빈곤퇴치 - 통합적 인구정책 - 청정생산 증대	- 빈곤퇴치, 인간정주, 보건(질병) - 세계화(정보 및 통신기술 중심) -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 - 지속가능한 농업 - 교육 및 인력개발 - 여성의 지위 -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지역 협력
환경 / 자원 / 관리	- 천연자원(담수, 공중위생, 해양 및 연안, 삼림, 토지, 생물다양성, 에너지, 광물과 금속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유지	- 천연자원(해양·연안, 생물다양성, 산림, 공물자원, 담수, 공중위생 등)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지구적 접근을 촉구 -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	- 수자원 고갈의 문제 - 산림행동계획의 이행 촉구 -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공급의 다변화 - 생물다양성의 보전 - 유전자 자원의 편익의 균등 분배 - 토지와 수계의 종합적 관리	- 천연자원의 질 저하 문제 제기 - 수자원, 생물다양성 보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속관리의 필요 - 식량 안보의 중요성	- 사막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제고 - 삼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 해양·연안 자원의 국제적인 관리 - 수자원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등에 대한 지역간의 협력 강화
제도 / 이행	- 관리체제와 민주적 절차의 증진 - 시민, 기업, 산업체간이 파트너쉽 강조 - 제도적 개선 방향 설정 - 자원 조달의 중요성 강조 -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 강조 - MEA에 강한 의무를 촉구 -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적인 발전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사용 촉구 - Global Deal 강조	- 1, 2차 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법률적 지원의 강화 - 재정확충을 위한 국내자원의 활용, 직접투자, 부채탕감의 필요 - 생명 및 통신과학의 중점 육성 - 국제적 원조의 필요성 - ODA의 촉구 - 수출품, 농업, 직물에 대한 보조금 폐지 요구 - 다자간 무역체제의 필요성 - 지구환경금융(GEF)의 증가 요구 - 효과적인 관리체제	- MEA의 이행 - ODA 이행 촉구 - 빈곤국의 부채 경감 - 지구환경금융(GEF)의 증가 요구 - 재정지원 촉구 -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을 위한 제도 강화 - 보조금 폐지 요구 - 환경윤리의 필요성	- 교육 및 인력개발 - 새로운 관리체제의 필요성 - 지역기구 설립 및 기금 마련 - 민간참여 - ODA 이행 촉구 - GEF 기금 증대 - 아랍지역에 대한 지표 및 기준 개발	-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하는 의사결정 체제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개혁 -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 산·학·연 공조체제 - 능력형성 및 기술이전 - ODA에 대한 노력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음의 5가지 사항들이 공통적인 쟁점으로 논의되었다.¹⁵⁾

- 국제사회는 의제21의 신속한 이행
- 지속가능발전의 3개축(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
- 형평성과 포괄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세계화
- 정상회의에서는 이행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정비 강화

지역회의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리우원칙의 이행, 세계화, 빈곤퇴치,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 관리, 농업 및 식량안보, 에너지, 담수와 위생, 인간정주, 건강, 인력개발, 자원, 무역과 시장 접근성, 기술과 능력양성, 관리체제, 의사결정과 정보 등을 논의하였다.¹⁶⁾

(1) 리우원칙의 이행

오염자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차별화 된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였다. 리우원칙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동감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2) 세계화

세계화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 및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몇 지역에서는 무역, 재정, 투자 및 정보기술을 포함한 기술분야에까지 특별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선진국은 환경적·사회적 책임에 따른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다자간환경협정(MEA)과 국제무역체제의 역할을 증진하며, WTO 각료회의에서 new round의 발족을 촉구하였다.

개도국은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한 일부 개도국의 경제악화의 심화와 국가간 또는 국내에서의 빈부격차를 우려하면서 세계화의 초점을 재정지원과 부채탕감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에게 환경적·사회적 책임에 따른 개도국으로의 투자를 촉구하고 특히 세계화에 취약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지원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5) 출처: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prep_process/regional_docs/wssd_regional_outcomes.doc

16) 출처: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prep_process/regional_docs/wssd_regional_outcomes.doc

(3) 빈곤퇴치

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밀레니엄 선언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빈곤이 환경, 무역,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은 빈곤퇴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제라는데 동의하면서 환경과 빈곤, 무역과 인류안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하며, 개도국에게는 빈곤퇴치를 위해 지원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구상 중이나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개도국은 빈곤이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함을 강조하면서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밀레니엄선언 목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debt-for-environment (nature) swaps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농업기술의 이전과 재정지원을 강조하였다.

(4) 생산 및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정량화 작업의 필요성과 함께 환경·천연자원 사용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은 선진국 중심의 과다한 에너지 소비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오늘날의 과잉 생산·소비 행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과 함께 시민단체와 NGO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소비량은 지난 25년 전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하였다. 양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인 소비와 생산의 실현은 선진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금도 개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래천연자원 소비로 인한 생물다양성, 사막화 등의 환경악화에 대해서는 개도국 역시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자원관리

해양, 연안, 산, 토지이용, 삼림, 생물다양성, 사막화, 광물 및 금속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 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몇 지역회의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

선진국은 각국의 자연자원 보전의무 강화를 위한 자연자원의 관리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지구환경자원의 보전을 위해 다자간환경협정(MEA)의 준수

를 촉구하였다.

개도국은 자연자원이 지구차원에서 중요한 환경자산인 동시에 각국의 중요한 경제자산이므로 자연자원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가시적인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5) 농업 및 식량안보

몇몇 지역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RD)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진국은 농업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써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개도국은 선진국들에게는 수출보조금 제도 등 왜곡된 국제교역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용유지 및 식량안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프리카는 식량자급(5년 이내에 농업생산을 2배로 증가)의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아프리카가 농업의 발전과정에서 선진국이 생산한 유전자조작식품의 투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6) 에너지

정상회의에서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생가능하고 실용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진국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와 같은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신기술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개도국은 에너지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임을 언급하면서,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에너지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선진 기술이전을 촉구하였다.

(7) 인간정주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시계획과 관리에 대한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는 대도시(mega-cities) 문제와 함께 도시·농촌과의 연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아프리카 지역회의에서는 거처의 질보다는 거처의 유무를 더 큰 문제로 언급하였다.

(8) 건강

건강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빈곤퇴치, 담수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암, 혈관질환 등의 비전염성질환에 문제가 심각한 반면, 개도국은 HIV/AIDS, 말레리아 등의 전염성질환이 심각하다.

선진국은 국제사회의 동참에 의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개도국은 건강이 질병, 빈곤, 수질 악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9) 인력양성

인력양성에서는 교육, 훈련, 고용, 성, 청소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남성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에서는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미래의 주체인 청년층을 위한 기술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또한 인력양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강을 언급하였다.

재원

현재 지구환경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2002년 3월 멕시코의 Monterrey에서의 ‘개발재원조달에 관한 고위급회의’(UN High-Level Meeting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재원조달을 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재정과 관련하여 WSSD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제기되면서 회담결과에 따라 재원확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충당방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개념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을 겨냥해서는 지원된 자금을 대한 투명한 운용을 촉구하였다. ODA 목표치인 GNP 0.7%를 이행한 몇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ODA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기본입장만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개도국은 선진국들에게 UN이 제시한 ODA의 목표치인 GNP의 0.7%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자본의 이동, 무역체제 확립과 같은 선진국의 세계화, 표준화, 정형화 움직임에 대하여 사회통합,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프라와 생산능력 제고에 필요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하면서 최빈국의 부채탕감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역 및 시장접근

제품, 특히 개도국에서 생산한 농업 및 섬유 제품 등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왜곡된 시장보조금 폐지와 함께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보조금폐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밖의 내용들은 세계화 의제에서 논의되었다.

(10) 기술과 능력양성

그 동안 산업발달과 함께 발전된 기술은 인류번영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아직 기술혜택을 받지 못한 개도국들이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이전과 능력양성을 위한 교육기회를 개도국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상회의에서는 기술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에 대해 논의되어야 함을 공감하였다.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기술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도국 역시 아직 기술을 이전 받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개도국은 능력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미래의 주체인 청년층들의 기술교육의 강화를 강조하고 선진국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전을 촉구하였다.

(11) 관리체제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에 대해 토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럽·북미지역과 아·태 지역회의에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주요그룹과 정부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였고 합리적인 관리체제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진국은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한 관리체제를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관리체제를 강조하였다.

(12) 의사결정과 정보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화 기술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진국은 투명한 정보 및 의사결정 체제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체계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이들 주요의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구분하여 <표 II-3>에 나타내었다.

<표 II-3> 주요의제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주요의제	공통	선진국	개도국
세계화	- WTO와 연계 - 개념과 성격 규명	- MEA와 연계 - 인권 등의 사회적 측면 고려	- 균등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빈곤퇴치	- 재정, 기술이전, 농업 등의 이슈와 연계	- 자생적 기능 강조	- 재정지원, 기술이전
생산 및 소비	- 에너지 소비	- 개도국과 민간의 동참 촉구	- 공정한 분배와 균형 - 전통지식의 중요성
자연자원관리	- 관리와 보전을 위한 협력 강화	- 관리의 강화 - MEA의 필요성	- 자원이용의 권리
농업 및 식량안보	- SARD	- 산업으로의 접근	- 빈곤퇴치의 기여 수단
에너지	- 재생자원활용	- 고효율, 신기술 개발 - 교통	- 빈곤, 생산 및 소비와 연계
건강	- HIV/AIDS, 빈곤	- 기후변화, 대기오염	- 빈곤, 수질오염
재정	- 지속가능발전의 전제 조건	- 지원된 자금의 투명한 운용	- 지역편중, 부채탕감
기술이전	- 필요성 인정	- 개도국의 미흡한 여건 - 민간섹터의 어려움	- 포괄적인 기술이전 - 실질적인 이행촉구
관리체제	- 경제, 사회, 환경 고려 - 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너쉽	- 환경에 큰 비중	- 경제에 큰 비중

5개 지역에서의 회의를 바탕으로 지역마다 보고서가 UN에 제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UN에서는 2001년 12월에 사무총장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⁷⁾

17) 출처: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documents/no170793sgreport.pdf>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prep_process/regional_docs/wssd_regional_outcomes.doc

동 보고서에서는 금번 세계정상회의는 의제21의 재협상이 아닌 의제21 이행의 강화와 「세계화」와 「관리체제」같은 새롭게 등장한 국제이슈를 추가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화, 빈곤퇴치,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그리고 범지구 차원의 윤리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의제21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인을 다음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의 노력
- 보전보다는 이용을 선호하는데 따른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 패턴
- 정치에 있어 금융, 무역, 투자, 기술 등과의 연계성 및 장기적인 시각의 결여
- 의제21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의 부족과 기술이전 체계의 미흡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92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세계화, 정보기술의 발달, AIDS 등과 함께 의제21 이행을 위하여 이번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세계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 실질적인 이행, 강력한 파트너쉽을 토대로 체계적인 이니셔티브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열 가지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였다.¹⁸⁾

- Making Globalization 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Livelihood
-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 Promoting Health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 Access to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 Sustainable Management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 Managing the World's Freshwater Resources
- Finance and Technology Transfer
-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for Africa
- Strengthening the System of Inter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8) 출처: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documents/no170793sgreport.pdf>

유엔에서 제작한 WSSD 브로셔에서는 가난, 세계화, 소비·생산, 에너지, 건강, 담수 여섯 종류를 세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의제로 제시하였다.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brochure/final_brochure.pdf)

Ⅲ. 주요 의제별 현황 및 국가 대응 전략

III. 주요의제별 현황 및 국가대응전략

본 장에서 다루는 주요의제는 유엔사무총장보고서와 제2차 준비회의 결과인 의장보고서에서 언급한 주요의제 중에서 아프리카 및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10개의 이슈에 대해 국외·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입장 수립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¹⁹⁾

1.. 세계화

1.1 국외현황²⁰⁾

KIEP(2001)는 세계화의 촉진배경을 신자유주의의 대두, 교통 및 ICT의 발달, 냉전체제의 붕괴,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 다국적기업의 활성화, 대외, 지향적 국가들의 성장과 외환위기라 하였다.

세계화는 무역, 투자, 정보통신의 발달과 활성화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세계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함께 최근에는 GATT와 WTO 주도의 다자간 무역주의와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M&A와 국제 금융시장의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과 투자에 집중된 세계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을 한 나라도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그로 인해 심각한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 말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또한 경제 중심의 세계화로 인하여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환경훼손 등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세계화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향후 균등하고 포괄적인 방향에서 세계화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EU에서는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자는 “Global Deal”을

19) 재정과 기술이전은 구분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20) 본 내용은 대부분 왕윤종 외(2001)의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제안하였다. “Global Deal”에서는 자유무역, 개도국을 고려한 시장의 여건개선과 함께 국제적 환경 및 노동기준이 제시되었으나, 국제적 환경 및 노동기준의 설정 문제는 다수 개도국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제4차 WTO 각료회의(도하개발아젠다) 선언문의 합의 과정에서 “Global Deal”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인도 등 환경의제 포함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Global Deal”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세계화와 관련된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조직적으로 일고 있다. 반세계화의 주체는 넓은 의미의 NGO라 할 수 있다(KIEP, 2001).

1.2 국내현황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나라는 세계화의 중요한 수단인 무역을 통해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1992년도의 수출액이 766억\$, 수입액이 818억\$였으나 2000년에는 수출액이 1,723억\$, 수입액이 1,605억\$로 교역량이 두 배를 초과하고 수출액이 수입액을 능가하였다. 1995년도에는 일인당 GNP가 연 1만\$을 초과하였고 그 이듬해인 1996년에는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세계화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1997년 말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는 우수한 국내인력을 해외시장으로 유출시켰으며, 해외 이민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외 인력시장의 확대, 해외 노동인력의 국내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국내취업 국외노동자에 대한 고용, 관리 및 보호 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세계화 의제가 “Global Deal”의 개념에서 2002년 WSSD 논의의제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세계화로의 대세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되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균등하고(equitable) 포괄적인(inclusive) 세계화(globalization)와 선진국에서 내세우는 「Global Deal」의 개념과 목적이 유사함을 알린다. 이러한 개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체계 방안의 마련

없이 불가능하다.

국제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개도국의 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배의 문제로 인한 국가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국제사회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시장중심적인 자원배분에서 개도국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분배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 물적자원 중심의 세계화뿐 아니라 인적자원에 의한 세계시장의 개방은 개도국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의 IT산업의 발달은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정보의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21세기 세계 IT산업의 주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는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향후 세계정보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빈곤

2.1 국외현황²¹⁾

빈곤의 문제는 굶주림으로 인한 인간의 영양결핍이나 기아뿐만 아니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환경훼손에 의한 지구생태계 파괴 등을 동반한다.

1990년 29%였던 전세계의 빈곤율(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을 얻는 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23%로 감소하였다. 인구수를 비교하더라도 1990년에 빈곤인구가 13억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12억명으로 감소하였다.

빈곤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아시아와 중남미이다. 빈곤층이 가장 많은 지역인 남아시아의 빈곤인구는 5.22억명, 동아시아가 2.67억명을 차지한다. 남아시아의 전체 빈곤인구는 증가하였으나(1990년 4.74억명에서 1998년 5.22억명) 빈곤율은 1990년 44%에서 1998년에는 40%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의 빈곤율은 1990년 28%에서

21) 본 내용의 대부분은 유엔자료인 WSSD 관련 사무총장보고서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documents/no170793sgreport.pdf>)와 <http://www.un.org/esa/sustdev/poverty.htm>에 기초하였다.

1998년에는 15%로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절대 빈곤인구 역시 1990년 4.18억명에서 1998년에는 2.67억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된 원인은 높은 경제성장(연평균 6.6%의 GDP 성장률)을 했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빈곤율은 1990년 17%(7,400만명)에서 1998년에는 12%(6100만명)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 남부사하라 지역은 빈곤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곳으로 전체 인구의 48%가 빈곤층에 속한다. 이 지역의 빈곤인구는 1990년 2.17억명에서 2.91억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빈곤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1990년 접어들면서 구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는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빈곤인구는 1987년 100만명에서 1990년에는 700만명, 1998년에는 인구의 4%인 1,8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소련의 경우에는 1998년 당시 하루 평균소득 2달러 미만인 국민이 전체 국민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을 얻는 절대빈곤인구 이외에도 빈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영양결핍, 아동사망률, 초등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영양결핍(undernourishment) 인구는 감소추세이며 1996~1998년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영양결핍 인구는 8.26억명으로 이 중 약 96%인 7.92억명이 개도국 국민이다. 아프리카 남부사하라 지역은 전체 인구의 34%가 영양결핍 인구로 집계되었다.²²⁾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1980년에는 13.5%였으나 1998년에는 7.9%로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아프리카 남부사하라 지역의 아동사망률은 15%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범세계적으로 고소득국가 20%에 해당하는 나라의 소득과 저소득국가 20%의 소득을 비교하면, 1991년에는 60배 차이가 났으나 1994년에는 78배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저소득국가 20%의 소득은 1991년에는 세계 소득의 1.4%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에는 1.1%로 국가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빈부의 격차가 줄어든 나라로 보고되었다.

초등교육은 2015년까지 전세계에 의무 초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초등교육의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초등교육이 일반화되었고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94%, 중아시아와 북아프리카는 87%, 남아시아는 77%, 아프리카 남부사하라 지역은 60%가 초등교육을 받는

22) 본 자료의 출처는 <http://www.un.org/esa/sustdev/poverty.htm>이나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전세계 인구의 약 30%가 영양결핍(malnutrition) 인구라 하면서 이중 50%인 약 10억의 인구가 5세 미만인 개도국민이라 하였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개도국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초등 교육의 기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WSSD를 위한 UN 사무총장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을 도시빈곤 및 농촌빈곤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빈곤은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의 문제와 함께 다루는 반면, 농촌빈곤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농촌빈곤과 도시빈곤을 연계하여 설명하였는데 농촌빈곤 인구의 이동이 도시빈곤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도시 슬럼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농촌빈곤의 탈피 수단으로 제기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의 발전(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RD)을 위하여 토지이용, 벌채, 사막화, 용수 및 관개시설, 생물다양성, 생명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의 전환을 모색 중에 있다.

도시빈곤 역시 아프리카가 심각한데, 아프리카는 도시인구의 40% 이상이 절대빈곤층이다. 중남미는 아프리카보다는 덜하나 도시의 여성이 가장인 가계의 36%가 빈곤층에 해당한다. 농촌빈곤 인구는 세계 빈곤인구의 75%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촌 빈곤인구를 현재 수준인 75%에서 2025년까지는 현재의 60%로 줄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1996년 World Food Summit에서는 전세계 각처에서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일 것을 결의하였고, 2000 Millenium Summit에서도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고통받는 인구들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2.2 국내현황

우리 나라에서의 절대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수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수는 199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1997년 말에 불어닥친 IMF로 인해 1999년 기준으로 빈곤율이 1996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IMF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우리 나라 역시 농촌지역의 빈곤과 낮은 고용기회는 전체 사회구조에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가격지지제와 같은 농업지원정책뿐 아니라 농촌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다.

특히 '90년 이후 쌀 이외의 거의 모든 농산물이 완전개방되고 WTO체제에서 농업의 시장개방폭이 가속화되면서 농업 고용인력의 노령화 및 탈농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촌에 빈곤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80% 수준이고, 농가부채는 연간 농가평균소득의 87%에 이른다.

몇 년전부터 정부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주민의 교육·의료 및 복지정책 시행과 함께 농촌의 농업 외 소득기회 증대를 위해 최근에는 생태관광과 연계한 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빈곤은 일자리 부재 또는 상실로 인한 실업이 원인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아동학대, 여성학대, 노인의 방기 등이 우려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으로 재취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사회보장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였던 것을 2000년에는 9%로 증액하였고,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기술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1994년부터 보건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빈곤층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부정수급자가 있는가 하면, 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다각도에서 마련코자 모색 중이다.

2.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지금과 같은 효율 중심의 세계화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경제기반이 전혀 없는 저소득국가에게는 오히려 빈곤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선진국가의 빈곤층에 대한 정책은 국내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개도국에서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국외 선진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다. Millenium Declaration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일시적인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농업기술)을

양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도국의 빈곤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지만 지원된 재정의 불투명한 운용으로 인하여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며, 개도국들의 투명한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진산업국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거론하고, 개도국들의 빈곤탈피 과정이 자원소모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의 도움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적으로 빈곤(poverty)인구는 하루 1\$ 미만의 소득을 얻는 자로 정의됨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에서는 1\$ 미만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1\$ 이상의 수입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층이 세계 도처에 많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과 농촌지원은 농촌빈곤 퇴치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전면적인 농업보조금의 폐지는 농촌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농촌의 붕괴는 무분별한 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이는 환경파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3.1 국외현황²³⁾

재화와 서비스의 세계무역량은 지난 10년 동안 60%가 증가하였고 FDI는 4배 증가하였다. 매년 인구는 1.4%, GDP 성장률은 2.9%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1975~1996년의 일인당 또는 GDP 단위당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선진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량의 증가를 염려하는 것은 투입된 자원의 1/2~3/4이 다시 폐기물로 전환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자연자원의 고갈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고소득 상위 20% 국가의 소비가 전세계 소비의 86%를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 하위 20% 국가의 소비는 전체 소비의 1.3%를 차지한다. 산업국가의 소비는 지난

23) 본 내용의 대부분은 유엔자료인 WSSD 관련 사무총장보고서
(<http://www.johannesburgsummit.org/html/documents/no170793sgreport.pdf>)에 기초하였다.

25년 동안 매년 2.3%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이 중 동아시아의 소비증가는 6.1%, 남아시아는 2%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의 소비량은 지난 25년 전보다 20% 감소하였다.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고효율 에너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1999년 6,400kgoe)은 개도국 소비량(620kgoe)의 1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 예로, 북미에서 운송에 사용된 휘발유는 일인당 1,637리터이며, 서유럽은 427리터, 서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는 50리터 그리고 최빈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남부사하라 지역에서는 일인당 31리터를 소비한다.

과다한 소비는 자연자원의 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림을 예로 들면, 1970년에 일인당 11.4㎥였던 산림이 현재는 7.3㎥로 약 30% 정도가 지난 30년 동안에 감소하였으며, 전세계 주요 어장의 70%가 남획으로 인해 어장량이 감소추세에 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세계 곳곳에 건설된 댐과 배수로로 인하여 세계 큰 강의 60% 정도가 단절되었다. 그 결과, 담수생태계가 훼손되고 생물종이 20%가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하였다.

OECD국가들 중심으로 몇몇 선진국들은 친환경적인 생산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비자들의 냉담한 반응과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산업이라 할 수 있는 IT산업이 정착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초기에 기대하였던 운송 및 종이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2010년의 종이 소비량은 지금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부유계층의 소비행태 역시 선진국의 비지속적인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기술개발의 속도는 비지속적인 소비와 생산패턴을 변환시키기 어려운 상태이며,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세계화는 오히려 비지속적인 소비와 생산패턴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ISO14000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환경경영에 대하여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IT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 소비와 생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3.2 국내현황²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에 관한 국제전문가회의"가 정부대표, 국제기구 대표 및 국내외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999년 1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비지속적인 소비패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행태를 위한 제주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그 이후 국내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제품의 제조, 소비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소비되는 자연 자원,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계량화 한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8개 제품군(가정용 전기냉장고, TFT-LCD 모니터, CRT용 유리, 승용차용 타이어, 두루마리 화장지, 휘발유, TV, 자동차용 에어필터)에 적용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및 인증기준을 개발 중에 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마크의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제품을 확대중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법(Eco-design)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환경친화적 건축물(GreenBuilding)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1992년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6년에는 폐기물부담금의 효율체계를 개선하여 유독물요기, 전지, 부동액, 형광등, 1회용 기저귀 등에 대한 효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폐가전제품(2000. 6), 폐형광등(2000. 11), 폐유리병(2001. 2) 사업자단체와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였다.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스틸린계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의 생산 권고제도 등을 도입하여 1993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1995년 가전제품 완충용 및 1996년 음식료품에 사용하는 합성수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과, 포장검사명령제 및 포장표시권장제를 1999년부터 도입하였다.

1995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재활용체제의 미흡으로 인

24) “「의제21 국가실천계획」 검토보고서”(2001)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하여 불법투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1994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를 부여하고 연차별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1994년부터 시행하고 매장면적 33㎡에 이상인 판매업소에서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유상판매를 의무화하였다. 재활용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등 5종으로,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2~4종으로 분리수거를 한다.

정부에서도 국내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업체에게 시설설치, 기술개발 등의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재활용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재활용제품을 소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지금과 같은 소비패턴은 어느 한 그룹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간기업, NGO, 방송매체 등의 체계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선진국의 고형폐기물을 개도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수출국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폐기물은 장기적으로는 개도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비지속적인 소비이다.

제품 포장재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산품을 기업에서 만들도록 국가에서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함께, 환경지속지수와 같이 소비정도를 국가간 비교하고 연차별로 그 경향을 파악하여 국내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환경지속소비지수의 개발을 제안할 것을 검토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세계화와 IT 산업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UN사무총장보고서에 동의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IT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향후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도국에서는 식량공급을 위한 화전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 자원이 파괴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과다생산으로 인해 수확을 포기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지역편중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범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기 위한 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다.

4.. 에너지

4.1 국외현황²⁵⁾

1992년에서 1999년 사이의 1차(primary) 에너지 소비량은 약 10% 정도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연 2%의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의 경제위기, 신생산업국의 성장 둔화를 감안하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소비량의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의 소비량을 줄이려는 감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량은 연 2% 정도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1998년 개도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지구 소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별 차이가 없다. 한 예로 아프리카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북아메리카의 일인당 소비에너지의 90% 정도이다.

하지만 저개발국가의 일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83kw/h인 것에 반해 OECD 국가들의 일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8,053kw/h로 국지적인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크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1차 에너지원으로는 원유가 4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석탄이 25%를 차지한다. 1992년에서 1999년 동안 에너지 소비량의 75%가 석유와 천연가스이고, 18%가 원자력, 6%가 재생자원이었다. 석탄의 경우는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체제 전환에 의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방의 원유생산량은 10년 전까지만 하여도 전체 거래량의 38%였으나 1999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 원유생산의 지역 편중으로 인하여 최근의 국제 시장가격은 생산국의 사정에 따라 변화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세계 GDP의 1.0~1.5%를 투자하고는

25) 에너지 부문은 UN(2001c, 2001d)을 참조하였다.

있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양적인 증가는 비효율적인 사용보다는 생산과 소비패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천연가스로의 전환,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의 개발, 대체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소비행태의 전환, 기술의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에너지효율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낮은 상태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화를 기하고는 있으나 에너지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적게 발생시키고 전세계 전력생산의 16%를 차지하는 원자력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비용효과성,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또는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4.2 국내현황²⁶⁾

우리 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세계 8위, 석유 소비량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에너지소비대국인 동시에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대외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물가를 안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과거 에너지 정책은 공기업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을 중앙에서 배분하고 가격 규제를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수급 현황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차 에너지 소비는 1990년 93.1백만 TOE에서 1999년 179.0백만 TOE(잠정)로 1.9배 증가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다소 감소하여 1990년대의 1차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약 7.5% 증가하였다. 동기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5.7% 성장하였고, GDP 탄성치는 1990년대에 1.32를 기록하였다.

에너지원별 특성들을 살펴보면, 석탄은 국내산인 무연탄의 소비가 점차 감소하는 한편, 수입 유연탄의 사용이 산업과 발전 부문에서 증대하였으며, 석탄 전체로

26) 에너지경제연구원(2000)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는 연평균 3.4%의 지속적인 소비 증가를 보였다. 반면 석유는 1990년대 초 산업부문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소득 증가에 따라 차량 대수의 증가로 인해 수송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1999년까지 연평균 8.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체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원자력과 LNG의 소비가 늘어났다.

1990년대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 10%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최종에너지원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석유는 1990년대에 6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연탄 및 전력의 경우 1990년 전반에 걸쳐 완만하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연탄의 경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는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에너지 정책은 정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공급관리중심에서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재의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인다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에너지 저소비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산업구조뿐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나의 사례로써, 200여 시민단체는 전국적인 연대구조(에너지절약시민연대)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서울시는 처음으로 에너지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다른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PCSD, 2001)

해외개발에 의한 원유공급이 직수입보다는 저렴하므로 정부는 해외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그 비율(1999년 6월 기준: 1.5%)을 높여 나갈 예정이나 아직 이를 위한 여건이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확립을 위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4.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개념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현세대에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개념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원유시장의 안정을 위한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가장 빠른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에너지협력 체계가 미흡한 지역임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국가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간의 건강을 유지·회복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천연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인 에너지는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임을 상기시키면서 아직까지 에너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의 필요함을 지적한다. 현재 개도국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에너지는 매우 비효율적인 동시에 천연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에너지원의 조달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오히려 심화시켜 왔음을 지적하면서 개도국의 재래식 방법에 의한 에너지 공급방법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물설계에 있어 Zero Energy House, 초에너지건물 등의 건축을 장려하며 이러한 선진기술의 이전과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과 수송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은 단기적인 투자나 사업의 확장으로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 기업, 민간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에 바탕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의 개선, 기업은 기술개발과 이전, 민간은 우수한 이행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저소비산업으로의 전환 등의 노력을 해야 함을 지적한다.

각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관리주체의 민영화, 수요위주의 관리 등의 구조개편은 각 나라의 여건에 맞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한다.

5.. 건강

5.1 국외현황²⁷⁾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신체 내부의 문제로 인한 질병과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부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다시 기생충, 말라리아, 암, HIV

27) 본 내용은 UN(2001f)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AIDS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인자와 빈곤, 소음, 환경오염, 스트레스, 열악한 주거공간 등과 같이 간접적인 인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등이 원인이 된다.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이면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건강이 전제되어야 하는 동시에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하였고, 아동사망률은 감소하였다. 개도국에서는 1990년에 38%였던 출산사망률이 1999년에는 19%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2억 이상의 인구가 평균수명이 45세 이하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 선진국의 평균수명이 75.2세인 것에 반해 개도국은 61.4세이며 저개발국가는 49.2세이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5세 미만의 아동 1,000명당 사망자수가 선진국은 11명, 개도국은 81명, 저개발국가는 156명이다.

1988년 세계소아마비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후 소아마비 발병은 급속하게 감소하여 1999년에는 연간 전세계에서 2만명 정도의 발생에 그쳤으며 2005년에는 완전히 퇴치하고자 한다. 소아마비를 포함한 홍역, 디프테리아 등의 질병은 WHO, UNICEF 등의 국제기구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AIDS, 말라리아, 결핵, 폐렴, 설사, 소아마비, 이렇게 총 여섯 가지의 질병이 전체 전염성 질병의 90%를 차지한다. 전세계사망자의 25%(연 1400만명)를 차지하는 전염성인 infectious and parasitic 질병은 열악한 환경과 빈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병균은 HIV/AIDS로써 전세계 인구의 3,600만명이 감염되었으며 이중 95%가 개도국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남부사하라 지역은 1990년대에 평균수명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이 HIV/AIDS 때문이다.

5세 미만의 아동들의 사망원인 중에 1순위는 급성호흡기 질환이다. 전통적인 생물자원에너지를 활용하는 전세계 20억 인구는 실내공기오염과 관련하여 호흡기장애와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약 210만 인구(이 중 개도국 국민이 180만명에 해당)가 재래식연료 사용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의 비율이 80%를 차지한다.

WHO에 따르면 전세계 질병인구의 1/4가 빈곤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UN, 2001c). 개도국의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영양부족은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감퇴시킨다. 반면, 선진국들은 과다영양으로 인한 다이어트 및 저칼로리 음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99년 전세계 사망자의 60%(혈관질환 30.3%, 암 12.6%, 호흡기질환 6.4%)가 비전염성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질환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질환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통사고, 정신이상,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구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역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화학물질과 미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WHO와 FAO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감시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5.2 국내현황²⁸⁾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00년 기준으로 남자가 70세, 여자는 78세(조선일보, 2002.01.31)로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식생활 역시 주식인 쌀의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소비량은 계속 증가하여 단백질과 지방이 주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년의 신장, 체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주요 질병에 대해 살펴보면, 1999년 우리 나라 결핵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6.7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많지는 않지만 세균성이질,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제일 주목받는 HIV/AIDS의 국내 총 감염자수가 2001년 12월말 현재 1,613명이다. 발병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97%)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뇌혈관질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심장질환, 교통사고, 간질환, 위암 순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전의 사망원인은 운수사고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2년의 우리 나라의 다빈도 암은 위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분업의 동기를 마련하였던 약의 오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항생제 처방비율 역시 58.9%로 WHO의 권장치인 22.7%의 2~3배 이상 높게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의 오남용은 다른 질병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질병에 관심을 기울이는

28)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복지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에 기반을 두어 시행해 오던 국민연금제도를 1998년 10월부터는 도시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대도시의 대기오염, 폐기물, 화학물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 오존경보제, 도시교통체계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상당한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TRI)」를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파악·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와 함께 21세기를 위협하는 3대 지구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일 공동으로 환경호르몬 연구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전염성 질병은 국가간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건강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화, 빈곤, 담수, 에너지 등과 같은 다른 주요 의제들과 깊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WHO를 중심으로 한 WTO, FAO, UNICEF 등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질병은 선진국의 자그마한 관심과 지원에 의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므로 민간차원에서 약품이나 의료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빈곤, 열악한 수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6.. 생물다양성

6.1 국외현황²⁹⁾

1992년 5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제고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3대 원칙을 ‘생물자원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그 이익의 공평한 배분’으로 정하였다. 또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LMO³⁰⁾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리우회의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당사국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제5차 회의에서는 카르타헤나 의정서 후속 이행조치, 유전자원 접근권 및 이익공유문제, 산림·해양·내수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 외래종에 의한 위해성 저감 및 생태계 보전방안,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 공유 문제, 재원 및 재정 메카니즘 검토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환경부, 2001c). 이와 같이 생물다양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은 의제 중의 하나이다.

전세계 보호지역의 면적은 육지면적의 8.8%인 1,300만km² 정도로 면적 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이 4년여만에 발표한 Red list³¹⁾에 따르면 파충류와 영장류를 포함한 많은 종의 군집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멸종의 우려가 생각해왔던 것만큼 심각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권경자, 2000). Red list에 속한 종이 1996년에 5,205종이었으나 2000년에는 5,435종으로 증가하였으며 포유류의 24%, 조류의

29) 출처를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UN(2001c)와 UN(2001e)에 기초하였다.

30) 제6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LMO란 현대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Living Organism)라고 정의하였다.

31) Red List의 범주(Categories)는 Extinct(EX), Extinct in the Wild(EW), Critically Endangered(CR), Endangered(EN), Vulnerable(VU), Lower Risk(LR), Data Deficient(DD), Not Evaluated(NE), 총 8개로 구분된다. Critically Endangered(CR)나 Endangered(EN), Vulnerable(VU) 범주에 속하게 되면 멸종위기종이라 한다.

12%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IUCN는 발표하였다. 특히, 담수 생태계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의 생물다양성 유지 역시 육지 생태계 못지 않게 중요하며 종들의 멸종 위험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어류의 4분의 1의 거처를 제공하는 산호초는 바다 어류의 생태다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육지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산림의 보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어류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서도 산호초 보호가 요구된다. 그러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산호 서식처의 58% 정도가 훼손 위험에 처해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각국은 생태계·종·유전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잠재가치를 인정하면서 본토 고유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 신품종보호권 등을 통한 식물유전자원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6.2 국내현황

우리 나라는 1994년 10월에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였고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96년에는 국가실천계획과 1997년에 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 실시하는 제2차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에 생물다양성 조사부문을 강화하였다. 1999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로써 국가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효율적 관리에 의한 국가능력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산림청은 10년을 주기로 전국산림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2000) 역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43종, 보호대상 야생동식물 151종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³²⁾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한편, 자연공원과 생태계보호구역, 조수보호구, 천연보호림, 야생 동·식물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동·식물 자원의 감소는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랑이와 표범이 국내에서는 멸종되었고, 여우, 늑대, 대륙사슴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32) 국내 야생 동식물의 종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약 10만종이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환경오염, 각종 개발행위, 남획, 새로운 생물종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정신이 반영되고 이에 따른 관리기반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내용들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행과정에서 적용하기 힘든 것이 문제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며, 셋째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으로 다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하여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하여 보상 및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조승헌 등, 1999).

백두대간에 대한 관리범위를 지정하여 국내 다양한 동식물의 보호와 함께 이를 중심으로 전국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인간의 간섭이 적었던 비무장지대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방안을 수립하였다.

6.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을 위해 개도국에서는 빈곤퇴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제의 확립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에 명시된 원칙들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의 보전·관리 기술의 지원을 촉구한다. 특히 월경성 동물의 서식지 유지를 통한 이동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최근의 LMO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생물종 개발에 대한 주의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이라는 단어 역시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sustainable biodiversity)’으로 어구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MO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조속하게 법령 체계 및 위해성 평가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담수

7.1 국외현황³³⁾

물은 생태계 및 인류의 생존과 함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물의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담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수량과 수질의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전세계 물 사용량의 70%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나머지 30%가 가정용수와 산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12억 인구가 안전한 식수의 부재 속에 살고 있으며 25억의 인구가 부적절하게 정화된 물을 마시고 있다. 그로 인하여 매년 5백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UNEP, 2001). 특히, 개도국의 경우는 인구증가와 함께 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 강의 반 이상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거나 고갈되고 있다.

2025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수량의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구가 현재의 6.5배 정도인 3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의 밀레니엄 선언문에서는 현재 물의 공급부족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구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수자원의 공정한 분배, 안정적인 공급, 수자원의 질과 생태계 관리를 위한 이해집단들의 역할과 실천계획과 함께 민간부문에서의 물분야 투자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 단편화된 수자원 관리에 머무르고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재정, 인력양성, 정보의 공유와 기술이전 등의 국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NGO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33) 출처: UN(2001c)와 UN(2001h)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물 사용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물 관련 제도나 법이 없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GIS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바탕이 마련되었으나 재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12월 3일~7일에 독일 본에서 개최된 「담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선포한 5개의 핵심이슈는 다음과 같다.

-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물의 이용 가능성을 충족
- 국가정책과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분산화가 필요
- 물의 이용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힘은 새로운 파트너쉽의 필요
- 지류를 포함한 유역에서의 자연과 사람들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의 필요
- 더 강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체제 형성이 필요

7.2 국내현황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세계 평균 973의 1.3배 이지만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계절별, 수계별 수자원의 편중현상이 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인구밀도가 높아 일인당 강수량은 2,705m³로 세계 평균 26,800m³의 1/10에 불과하며 한국은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물 사용량은 1,470m³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극히 높다(PCSD, 2001a).

물 사용 목적에 따라 농림부,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나누어져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대도시의 하천은 교통난의 해결방안으로 하천복개가 늘어나 하천기능을 상실해 감에 따라 도심자연생태계 구조가 이미 거의 파괴되었으며 복개천에 흐르고 있는 하천 역시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

향후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DB화 작업을 통한 GIS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기업, 주민 그리고 NGO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신뢰가 강화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이용실태, 부존량, 개발 가능량, 오염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2001년 7월에 “2020년까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2001년 12월에 “댐 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

며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 노후 상수도 교체, 중수도 도입, 빗물이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수 자원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한강을 포함한 4대강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수도법 개정(2001. 3)을 통한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3대강 특별법이 제정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질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도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아 국민 일인당 물 소비량은 소득 수준에 비해 선진국보다 높다. 따라서 수량과 질의 확보와 함께 물의 가격합리화에 의한 수요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7.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현재 오염된 물로 인해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3가 물 부족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UN의 예상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량과 수질의 문제는 건강, 빈곤 등 인간의 기본 생활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3대강 특별법”과 수질과 수량에 대한 종합 물 대책(중수도 관리 포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수계 중심의 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절대 물 부족 국가의 경우 지속적인 수자원개발 노력과 함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산림이 녹색댐의 기능을 담당하고 건강한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물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할 수 있는 조세개편이 필요하다

8.. 자원조달 및 확충

8.1 국외현황

국제적인 자원조달 방법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³⁴⁾와 FDI(Foreign Direct Investment)³⁵⁾로 구분할 수 있다.

ODA는 1992년 583억\$에서 2000년 현재 531억\$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1992년 GNP의 0.35%였던 ODA가 2000년에는 0.2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개도국의 지원이 최대 50%까지 감소하였다. ODA의 지원금이 감소한 이유는 자발적인 형태의 지원금이므로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개도국 지원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다.

자연자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활용되었던 ODA의 비중이 1996년에는 25% 정도였으나 1999년에는 17%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998년의 ODA의 사용 목적은 1990년과 비교하면 환경 부문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개국만이 ODA의 목표치인 GNP의 0.7%를 이행하였다.

FDI는 개도국 자본조달의 주요 공급원이다. 총투자액은 1992년 300억\$에서 아시아경제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200억\$로 연 2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주요 몇몇 개도국에 집중되었다.

1996년 180개국의 승인에 따라 과중부채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2001년 11월을 기해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HIPC에 속하는 24개국에 부채완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그 밖의 나라에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수혜국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가난저감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를 작성토록 권하고 있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개도국의 지구환경관련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해

34) ODA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기관 또는 이들의 집행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유무상으로 제공한 자원흐름 중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제시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원의 흐름:

- 1) 자금제공주체가 국가, 지방단체 등의 공적기관 또는 그 집행기관일 것
- 2) 자원공여의 주목적이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일 것
- 3) DAC가 인정하는 개도국 및 다국간 기구에 제공된 자금

출처: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KOREA/Data/K_NEWS/p082902.html)

35) FDI는 외국인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무상원조 및 장기 저리의 양허성자금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표방하며 1990년 10월 UNEP, UNDP, World Bank에 의해 자본금 13억\$로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³⁶⁾이 설립되었다.

총 32개 이사회그룹으로 구성된 GEF 이사회를 집행기구로 1998년 3월 현재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총 20억\$(1994~1997)의 기금을 가지고 세계은행(IBRD/IDA) 용자대상국이나 UNDP 기술지원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수자원보호, 생물다양성보호, 오존층보호, 사막화 및 산림황폐화방지사업 등의 지구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적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조달과 관련한 2002년 3월 Monterrey에서의 정상회의는 재원확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8.2 국내현황³⁷⁾

1987년 3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여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차관제공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원조 공여국 역할을 시작하였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족되면서 개도국으로의 ODA 원조가 본격화되었다.

우리 나라의 ODA 실시체계를 보면, 수혜국에 변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 원조인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개발 차관 즉,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자금협력은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이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³⁸⁾

우리 나라 국제협력의 규모는 1999년 317백만\$ 수준으로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던 해의 57백만\$ 규모보다는 5배 이상의 큰 폭으로 신장되었다.

1999년에는 총원조액이 317백만\$로 이중 41%인 131백만\$가 한국국제협력단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양자간 원조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59%인 186백만\$는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양자간 원조 중에서 무상원조금액은 39백만\$ 규모이며, 유상과 무상의 원조금액

36) <http://kiss2000.co.kr/environment/endb/dong/dong-3/dhd-00.htm> 참조

37) ODA 자료의 출처는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or.kr>)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FDI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8)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or.kr/webapp/plsql/komsr002>)

비중이 각각 70%, 30%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유상원조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NP 대비 ODA 비중은 1991년 0.02%(57백만\$)에서 1999년 0.08%(317백만\$)로 증가하였으나 국제수준인 0.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³⁹⁾

FDI는 외자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경영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자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투자형태는 신규주식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들의 투자유치 활동, 한국투자환경 홍보 등을 목적으로 1998년 4월 산업자원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존투자조직이 통합되어 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설립되었다.

1998년 7,769백만\$이었던 직접투자액이 2000년에는 18,215백만\$로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직접투자 업종의 비율은 2001년 5월 현재 99.8%로 선진국 수준이다.

한국의 해외투자액은 1998년에 1,179백만\$이었던 투자액이 2000년에 1,147백만\$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월 중 외국인투자 규모는 전년 동월(415백만\$)에 비해서 52.8% 증가한 634백만\$이며 특히, 전자, 금속, 화학업종 등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투자 유형은 기존의 주식보다는 신주 취득이 대부분(95.7%)을 차지하며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전체 투자의 86.4%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는 1994년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⁴⁰⁾에 가입하여 1995~1997년간 제1기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기금으로 400만SDR⁴¹⁾(전체 기금의 0.28%), 1998~2001년 역시 약 400만SDR(전체 기금의 0.27%)를 연차별로 출연한 반면, 지금까지 지원 받은 사업은 두만강 환경보호 전략계획 및 국경간 진단사업(사업비 520만\$)과 황해 광역 생태계 조사 사업(사업비 1,130만\$)에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지원을 받았다. 또한 국내 습지보전사업을 위해 1년간 예비사업비로 35만\$을 받은 상태이다.⁴²⁾

39) OECD의 22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가입국가 평균수준은 0.24%이다.

40) GEF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개도국의 지구환경 관련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사업에 자금을 원을 목적으로 1994년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으며 의제21 이행에 필요한 재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행기구로는 UNDP, UNEP, World Bank 등 3개 기구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한다.

41) SDR: 미·영·프·독·일의 화폐 환율 평균액(1SDR은 미화 약 1.5\$)

8.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우리 나라의 ODA 지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선진국의 지원규모와 비교하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의 국내 여건상 ODA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ODA는 아직 목표치인 GNP의 0.7%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나 십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총액 기준으로는 6배 정도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ODA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단기사업보다는 장기사업으로,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의 형태로 지원노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차원에서의 북한의 지원사업을 국제사회에서 ODA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1년도에는 개도국 NGO에 대해 15개국 26개 사업을 위해 89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점차 그 지원액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힘으로써 개도국 NGO의 호응을 얻을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FDI 유치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설립한 것과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홍보한다.

그러나 FDI는 본래 단기적인 투기자금의 성격은 적다고 하나 투기성자금 유동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만한 국제기구 차원의 체제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DI의 수혜를 얻는 국가가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선진국 기업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9.. 기술이전

9.1 국외현황⁴³⁾

리우회의 이후 기술의 개발과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BT)의 발달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것, 그리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념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42) 참조: <http://kiss2000.co.kr/environment/endb/dong/dong-3/dhd-00.htm>,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내부 자료

43) 출처: UN(2001c); UN(2001g)

1990년대 말의 두드러진 변화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달이라면, 2000년대는 BT 기술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아직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의 도구로 BT기술을 적용할 단계는 못되지만, 몇몇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산업으로써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2001년 2월에는 미국 등 6개국 합동연구팀이 인간게놈지도를 완성하였으며 11월에는 인간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기술의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제21에서 언급한 환경친화적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EST)은 오염을 적게 배출하고 폐기물의 활용 기술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생산과정뿐 아니라 조직의 운영 및 관리까지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친화적기술의 도입이 물론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을 갖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기술의 도입은 효율적인 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청정기술은 기업의 수요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이들 기업의 수요 유발은 그 나라의 국가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UNIDO-UNEP, World Environment Center, U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의 국제기구는 청정기술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술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비록 기업이 청정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재정 상태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기술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술이전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의 부재
- 기술 습득과 사용에 있어 부적절한 국내·외투자
-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기술이전이 어려움
- 기술을 응용하고 조작할만한 인적자원의 부족

교토의정서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청정기술이전을 위한 재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아직도 복잡다단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소유권의 대부분은 민간기업, 특히 벤처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상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이전은 대부분이 FDI의 형태로 기업과 기업간에 이루어진다. FDI의 수혜를 받은 개도국 기업들은 발생한 여유자본을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하여 새로

운 기술을 개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에 투자한 선진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술을 자연스럽게 개도국에 이전한다.

EST 이전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개발과 연계의 필요성을 의제21에 강조함에 따라 현재 청정생산을 위한 지구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IT기술의 발달은 분명 생산의 효율과 분배의 공평성을 개선할 여지가 많으나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9.2 국내현황⁴⁴⁾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IT산업과 함께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청정생산기술, 바이오기술에 대해 국내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는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사업,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1999년 Cyber Korea21 등의 수립, 추진을 통해 현재는 인터넷 이용자 2,400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700만 가구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한 국가라 할 수 있다.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 4.5%였으나 1996년 14.1%, 1999년 32.8% 그리고 2000년에는 50.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수출(2000년 기준)은 수입대비 약 33%가 많은 512억\$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인구 역시 총 노동인구의 50%를 넘는 1,200만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체제의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의 변화, 기술인력 등이 필요하나 아직 청정생산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는 청정생산기술개발 및 이전확산을 위하여 19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3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청정생산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G-7의 후속사업으로 Eco-Topia사업을 계획하여 환경관련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1년 한국생산기술원의 국가청정센터가 UNIDO/UNEP의 NCPC(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선진청정생산기술을

44) 자료의 출처는 IT는 정보통신부, 청정생산기술과 바이오기술은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국내에 이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모든 연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의 일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IT산업 이후에 BT산업에 급속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활발한 연구활동이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3년에 수립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개 부처의 계획이 아닌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6년 동안 총 5조1,620억원이 투자될 것이며, 이번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투자 중 BT비중을 2001년 현재 8.0%에서 2007년 1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통한 부처별 조정을 강화하는 등 정책수립 및 집행체계를 정비해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2000년 현재 생명공학 분야 연구인력은 총 1만명 정도로써 미국(30만명), 일본(13만명)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이다.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9.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가 청정생산기술 이전에만 편중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도국 입장에서 필요한 농업기술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기술이전에 관심을 갖도록 지적한다.

향후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목적(예: 기후변화, 수자원 확보, 농업생산량의 증대 등), 대상(청정생산기술, 바이오기술, IT기술 등), 기술이전의 주체 그리고 지역적(Regional) 협력방안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도국은 선진국들의 투자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지적한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SO 14000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 및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 IT기술의 성과와 높은 인력 수준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관심을 갖도록 정부차원에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10.. 관리체제

10.1 국외현황

리우회의 이후 지구차원에서의 국제협의를뿐만 아니라 이해를 같이하는 나라 또는 민간기업 등의 연합 및 결성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 특징이다.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인한 순기능과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들 이해집단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다루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사결정에 있어 민간의 참여뿐 아니라 경제, 사회 및 환경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가지속발전위원회(National Counci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NCSD)는 약 70개국에서 발족하여 운용되고 있다. NCSD는 민간의 참여 확대, 경제, 사회, 환경 이슈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구협약의 이행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IT기술의 발전은 또한 국가간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의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IT기술의 발달과 지표 개발에 있어 개도국은 기술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외된 상태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10.2 국내현황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자 2000년 9월 20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PCSD는 정부 개발부처와 환경부처의 장관들 및 실무국장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책임은 없다.

최근 정부부처의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지속가능성 검토제도의 도입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11개 분야)의 수립 등으로 개발과 환경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한 노력과 역할이 가시화되고 있다.

PCSD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지역 환경개선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보교류, 상호협력,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의 지방의제21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수평적 연계망(network)의 역할을 위해 2000년에 결성되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우리 나라는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60%인 14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19.4%인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 중에 있어 79.4%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제도지표 항목별로 2001년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수화 작업을 검토중이다.

지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아직도 환경에 국한한 지속가능발전에 머물러 있으므로 인해 포괄적인 방향에서의 국가 및 지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국가정책은 물론, 각종 개발부처와 환경부처들이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부처들의 통합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개별 부처 내에서의 환경을 고려한 개발 또는 개발을 고려한 환경이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및 황사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협력프로그램간의 연계 부족, 재정부담체계 및 구속력 있는 협력의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

10.3 향후 입장 수립시 검토요망 사항

지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환경에만 국한하여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그룹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의과정이나 정보의 공유에 있어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파트너쉽과 함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마련과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 구분 없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창구(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국가단위의 NCSD를 발족하여 국가간의 Network 구축을 통한 국가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특히, 월경문제)하고 지역환경 관리체제로서의 동북아 환경협력의 결과인 한중일 3국 장관회의와 지역환경협력프로그램의 성과를 소개하여 지역협력의 적극성을 알린다.

환경과 개발을 통합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NGO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환경관리체제(IEG)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구체적인 관리나 운용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UN 권고사항 및 대국민 인식증진 방안

IV. UN 권고사항 및 대국민 인식증진 방안

1.. WSSD를 위한 UN 권고사항

1.1 개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합의한 많은 내용들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평가하면 초기에 합의한 내용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UN에서는 이번 WSSD를 계기로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포스터와 수필 대회를 개최할 것과, 92년 리우회의 이후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공헌한 이행사례인 101가지 방법과 향후 이행목표인 국가추진목표(National Progression Target: NPT)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현재까지 '101가지 방법'을 선정하여 통보한 나라는 핀란드와 아르메니아뿐이다. 핀란드는 “스포츠와 환경”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아르메니아는 의제21을 알리는데 기여한 몇몇 방송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핀란드 자료는 부록 3. 참조) NPT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발전목표나 이행계획을 발표한 국가는 아직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리우회의 이후 정부부처와 민간단체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발전 국가추진목표 역시 구체화 된 것이 없다.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목적은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대국민 홍보와 함께 2002년에 개최되는 WSS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외적으로는 선정된 과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게도 다른 나라의 우수사례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우수사례를 자국에 적용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제사회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우수사례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단체와 국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UN에서는 우수사례 선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권고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행사례와 NPT의 선정과정에 있어 주요 그룹을 포함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실제 우리 나라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수용하기 힘든 많은 요구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나라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의 적극적인 노력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향후 WSSD에서 우리 나라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정방법

‘101가지 방법’과 ‘NPT’의 내용은 법과 제도의 개발에서부터 포괄적인 자료의 수집계획 또는 새롭고 혁신적인 재정체계의 도입까지 그 범위가 넓다. 각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해 지금까지는 WSSD 관련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향후 많은 나라들이 우수사례 내용을 제출하면 우수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준비회의 또는 WSSD 2002 본회의에 전시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01가지 방법’과 ‘NPT’의 선정 방법은 유사하다. 선정방법은 평가기준과 선정절차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기준과 절차는 UN에서 권고한 내용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른 나라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함께 이행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내용도 선정 가능하다.

NPT는 5년 또는 1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정부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UN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의 내용⁴⁵⁾을 토대로 다음 다섯 종류로 구분하였다.

첫째, 차별성 및 독창성이다. 과제의 목표와 결과가 참신하고 혁신적이며 그 이행결과가 다른 과제와 비교할 때 차별적이고 독창적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사례의 목표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45) http://www.johannesburgsummit.org/web_pages/101_ways.htm 참조

둘째, 과제수행의 내용이나 성과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번 WSSD 개최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우수사례 역시 포괄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나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다. 의제21에서도 밝혔듯이,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 전반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하에서 일이 추진되었거나 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한다.

넷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부합한 내용인지에 대해 평가한다.

다섯째, 과제 이행의 목적, 목표, 성과가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지에 대해 판단한다.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에만 한정된 것이고 경제, 사회를 포괄한 개념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내용 역시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들 각각의 평가기준을 표현하면, 독창성(specialty), 구체성(implementation), 협력성(cooperartion), 합목적성(purposiveness), 포괄성(inclusiveness)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IV-1> 우수사례 평가기준

평가기준	내용
독창성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목표와 결과
구체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
협력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합목적성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
포괄성	경제, 사회, 환경 3축의 포괄적인 영향

선정절차는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모양식을 작성한다. 공모양식에서는 우수사례에 선정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평가기준, 작성방법, 선정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작성방법을 제시할 때는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양식을 제시한다. 이렇게 완성된 공모양식(부록 3. 참조)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환경부 명의로 배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변화, 지방차원의 프로젝트, 공동체의 파트너쉽, 방송캠

페인, 학교 프로그램 등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NGO, 전문위원, 방송매체, 교육기관 및 교사, 개인 등의 다양한 이해참여그룹 또는 개인 등이 작성하여 응모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접수한 내용에 대한 검토 과정이다. 검토에서는 PCSD가 주관하여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 환경부 등의 관계자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에서 언급한 평가기준에 준하여 내용을 검토한다. 이 때는 ‘101가지 방법’과 ‘NPT’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다양한 참여그룹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PCSD의 WSSD 국가준비위원회에서 최종작품을 선정한다. 이행사례인 ‘101가지 방법’은 하나만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NPT’는 3내지 5개까지 선정할 수 있다.

1.3 101가지 방법

우수한 이행사례로 ‘101가지 방법’에 응모한 단체는 5개 중앙부처, 4개 지자체⁴⁶⁾, 6개 민간단체, 총 15개 단체가 27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 IV-2> 101가지 방법에 응모한 기관 및 단체

구분	응모 기관 또는 단체
정부부처	건교부(3), 해양수산부(1), 환경부(4), 기상청(1), 산림청(1)
지자체	경기도(6), 대구시(1), 서울시(1), 인천시(3)
민간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1), 여성환경연대(1),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1), 환경보전협회(1), 환경정의시민연대(1)

()는 응모한 작품수

응모한 과제에 대해 ‘배경 및 필요성’, ‘목적(목표)’, ‘활동 및 규모’, ‘이행성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46) 「경북 아젠다」로 응모한 이행사례가 있었으나 제목만 표기되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에 평가에서 누락시켰다.

(1) 건설교통부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 배경 및 필요성

- 국토는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크게 훼손되어 왔다. 또한 성장중심적 개발이 남긴 국토의 불균형 개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공간 개발에 나서서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그 과정에서 삶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관심은 공간의 훼손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우리의 국토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보전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국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은 성장중심의 개발이 가져올 폐해를 우려하여, 실제 도시개발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목적(목표)

- 국토의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방향의 국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 우리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빌린 우리 도시를 모든 인간과 생명체가 살기에 좋고 공생하는 도시로 만들어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위한 도시평가는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도시계획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을 위한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수립·집행하게 하는 한편 도시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특성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 활동 및 규모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난 1년간의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친환경, 참여, 자족(2회부터는 도시관리로 변경), 정보화, 녹색교통, 문화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2000년 제1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1년까지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은 국토·도시계획학회 및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중앙일

보사 등 3개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하여 진행하였다.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위한 도시평가 작업에 있어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경실련 회원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위한 지표를 연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중앙일보사가 담당하였다.

□ 이행성과

- 이 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 전국수준의 언론기관인 중앙일보 등이 참여함으로써 평가결과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어 타도시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시에는 직·간접적인 잇점이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 도시평가과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발전이 비단 성장중심의 개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도시의 개발에 있어 기반시설의 수준에 따라 개발규모를 차등화하고 과밀 개발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최종 단계인 제도적 수준의 변화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과 같은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 향후 추진계획

- 운영주체가 순수 민간단체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담당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언론기관과 중앙 행정부처의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두 차례의 도시평가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수정해 가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지방도시간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중점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 1월부터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2) 건설교통부 : 친환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광역화는 계속 진행되며 국민소득의 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시근교로의 이주패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의 준도시화가 가속될 것이다. 결국 도시에서의 압출요인과 농촌에서의 흡입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장래 국토공간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경계는 불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세기 산업화 시대는 국토를 생산활동의 수단으로만 활용했던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러나, 20세기 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개발 우선전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야기된 국토 난개발, 신도시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의 문제, 이외에도 백두대간 훼손, 생태계 파괴로 국토가 대책없이 파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으며, 정부는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친환경적 국토이용체계개편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목적(목표)

- 정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 첫째,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며, 둘째, 기반시설과 개발을 연동화한다. 셋째, 기반시설연동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개발계획 및 밀도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고 투명한 국토관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 활동 및 규모

- 국토이용체계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교부내에 학계, 업계, 경제계, 환경단체 등 50명으로 국토정비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교부

국토정책국, 토지국, 주택도시국 소속 직원으로 국토체계개선팀을 구성하여 행정절차 수행등 국토정비기획단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 아울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전문가 그룹은 개편안 마련에 참여하였으며,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 이행성과

-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공동주체가 되어 법안을 만들고 추진하였기에 균형있는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국토도시기본계획에 환경보전 및 관리, 경관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에 환경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계획설명서를 작성토록함으로써, 환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도시개발이나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토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 새로운 법은 기본 이념을 자연환경 보전에 두고 있는 만큼, 법 구석구석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기존 제도가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주로 거주환경의 고밀화 허용,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부족 및 경관악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은 ‘선계획·후개발’, ‘난개발 방지’, ‘계획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내세움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즉 도시와 비도시 계획체계의 일원화를 통하여 비도시지역도 도시 못지않게 세밀하게 관리토록 하였으며, 계획 없는 개발을 억제하고, 기반시설의 공급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 향후 추진계획

- 2001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2003년 1월 시행을 위하여 금년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지침을 제정할 것이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법률제정 작업과 같이 전문가,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시범사업을 실시 등을 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을 사전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3)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 수계별 댐 연계운영에 의한 효율적 수자원 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인구의 40%가 만성적인 물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도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전체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인 6~9월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대부분 바다로 유실되고 있어, 실제로는 전체 수자원 총량 1,276억㎥중 26%에 해당하는 331억㎥만이 용수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여름철에는 홍수에 대비하고, 겨울과 봄에는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 도시화와 이상기후에 의한 대규모 홍수피해의 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래 물부족과 항구적인 홍수예방 대책을 위한 수자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댐개발 적지의 부족, 보상비 양등으로 인한 댐개발 단가 상승, 환경보전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댐개발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신규 수자원개발 여건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물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중소규모 다목적댐의 개발, 지하수 개발, 기존댐 재개발, 지하댐과 우수 및 하수의 재이용 등 다양한 신규 수원 개발의 추진과 아울러 기존 수자원시설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 목적(목표)

- 한강수계 댐 연계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과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연계운영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추가적 댐의 건설없이 기개발된 댐만으로 부족한 댐의 용수공급 능력과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궁극적으로는 댐 연계운영을 통해 이수·치수·환경 측면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동일한 규모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신규 수자원 시설물 건설에 따라 소요되는 1조원 이상의 대체시설 투자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다.

□ 활동 및 규모

- 신규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홍수와 물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건설되어 관리중인 다목적댐과 발전목적으로만 운영되어오던 수력발전댐을 연계운영함으로써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관리하는 수력발전댐에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의 다목적댐 기능을 부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다목적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5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중 한강 및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다목적댐간의 연계운영은 다목적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관할기관이 서로 다른 댐들간의 연계운영 제도는 수력발전댐과 다목적댐이 공존해 있는 한강수계에 1999년 5월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 댐운영은 「하천법」을 근간으로 하여 1999년 5월 건설교통부 장관 훈령으로 제정된 「댐통합운영규정」의 제도안에서 이루어진다. 동 규정에 의한 댐통합운영의 원칙은 수계내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우선으로 하되, 각 댐의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본 기능 및 각 댐관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강수계내 수문상황, 각 댐의 저수량, 유입·방류상황, 전력계통 상황 및 용수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인 연계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운영한다.
- 댐관리자는 정부부처, 수량 및 수질관리기관 등으로 구성된 “댐통합운영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댐통합운영계획에 따라 댐을 운영하되, 각 댐의 수문 상황, 전력수급상황 또는 용수수급 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운영계획의 범위내에서 댐통합운영자(한국수자원공사)와 상호 협의·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행성과

- 장래 물부족과 수해방지 대책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수계별 ‘기존댐 용수공급능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수계별 댐 연계운영에 의해서 한강수계 4.6억m³, 낙동강수계

0.47억㎥, 섬진강수계 0.93억㎥ 등 연간 6억㎥의 용수공급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홍수조절용량을 2.3억㎥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 댐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 시스템으로 수계별로 ‘댐군 최적 연계운영시스템’이 개발되었다.

- 6억㎥의 용수공급 증대 수량은 사회적으로 서울시 인구 1천만명이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 2.3억㎥의 홍수저장 능력은 홍수기 한강 인도교 지점 수위가 24cm 낮아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제도화하여 활성화하고자 1999년 5월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수계별 댐 연계운영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훼손의 우려없이 약 1조원 이상의 대체댐 건설 효과를 가져왔다.
- 이러한 사실은 막대한 예산절감 뿐 아니라 신규댐 건설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각종 환경적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가뭄상황에서 댐군 연계운영에 의한 수량 확보를 통해 하천의 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변환경 개선 및 가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 향후 추진계획

-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한 국가 수자원정책의 방향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누수율 저감 방안, 절수기기 설치, 중수도 설치 의무화 등 수요관리를 법제화하는 방안과 범국민적 물절약 운동의 지속적 추진 방안 및 기존댐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 이 중에서도 기존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댐 연계운영 체제의 정착과 안정화』는 국가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계운영 체제는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역을 중심으로 한 수자원 관리 체제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4)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
(Building Marine Alliance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Government, and Research Organization : MANGO Project)

□ 배경 및 필요성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및 소비행태의 변화로 해양오염의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민의 소득증대에 따른 해양공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등하였다.
- 현행 국가주도 해양관리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관련 지역단체 중심으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전문가 및 정부가 지원·협력하는 효율적인 해양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 목적(목표)

- 해양환경관련 지역단체 중심으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전문가 및 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 민·관·연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반국민의 해양환경보전의식 제고,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민간의 실천활동 활성화 및 역량 제고를 통해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 활동 및 규모

- 민간단체로는 연안보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3개 전국단체 및 20개 지역단체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 민간단체는 지역 모니터링 요원(학생·시민) 교육, 월 1회 해안폐기물 모니터링 수행, 해안폐기물 수거, 자료의 산출, 지역단위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연구기관은 민간단체 실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민간대상 홍보자료 개발, 해안폐기물 모니터링 자료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전국 연대기구 창설을 위한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민간단체 활동 및 전문 연구기관 활동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 1999년 10월부터 해양수산부, 녹색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사업기획안을 마련하여 여러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민·관·연 협력형 해양보전실천기구의 구성을 추진하였다. 그 외 각 참여기관에서는 해안폐기물 모니터링 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해안폐기물 수거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이행성과

- 해안폐기물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해안폐기물의 연간발생량(2만 9천톤) 산정이 이루어져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해안폐기물중 육상기인 및 해양기인의 비율, 발생폐기물의 구성 등이 17개월동안 매월 연속모니터링을 통해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자료의 산출, 참여자의 인식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해안정화에 기여하였다.
- 해안폐기물 발생량, 발생원인, 폐기물의 구성에 대한 자료 축적으로 정부의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에 활용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교육홍보자료의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해양보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게 되었다.
- 민간단체 실무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육상중심 환경보전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적극적 해양환경보전활동 수행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민간단체, 행정기관,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안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 지역주민(어민, 해안지역 소재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을 강화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사업의 지역확대 등을 통해 연안지역 폐기물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를 추진하며,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식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민간단체 실무지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및 학교교사 및 어민에 대한 집중적 교육을 시행하며, 홍보대상과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 민·관·연 협력기구가 '02. 5 출범하여 모니터링, 교육홍보, 자발적 실천활동 활성화,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 한·일간 해안폐기물 공동조사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이를 양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반영하며, 국제행사에 민간단체 실무자,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력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한다.

(5) 환경부 환경경제과 : 건축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 인증제도 시행

□ 배경 및 필요성

-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소비의 40%, CO₂ 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주거공간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주택난 해소를 위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양적인 공급을 위주로 하여 획일적이고 특색없는 주거공간과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간생활의 다양성이 무시되는 실정이다.
-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건축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건축물로 인한 에너지 사용과 CO₂ 배출 등의 저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거주자의 환경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입주생활자의 건강을 고려한 설계 개념을 도입한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목적(목표)

-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한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Life Cycle Assessment: LCA)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건축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환경악화를 최소화하고, 용수, 전력, 난방연료 등 에너지와 자원절약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적절한 녹지공간의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물 관리비용 절감, 유해성이 적은 환경자재의 사용에 따른 건강증진 등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활동 및 규모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은 환경부가 '99년 10월부터 1년간 1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빌딩 시범인증사업과 건교부가 2000. 4월부터 1년간

서울·수도권 지역 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 사업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 아울러, 국제 공통의 그린빌딩 인증기준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는 국제적인 그린빌딩 협의체인 GBC(Green Building Challenge)에 우리나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홍보 및 국제 인증기준 개발과정의 지속적 참여 등을 위해 정부·민간·학계·연구원을 망라한 환경과 건축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국가팀을 결성하였다.
- 우리나라 지역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이행성과

- 그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통합 시행지침 마련을 위해 환경부, 건교부, 시범인증기관, 산·학·연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10여차례의 관계자 회의를 거쳐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인증심사기준(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및 시행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 또한, 그린빌딩의 기술개발과 보급역할을 위해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한국그린빌딩협회를 2000년 4월 설립하여 그린빌딩의 신축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개보수 및 리모델링 등의 보급추진역할을 하고 있다.
-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건축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여 지구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유도하기 위한 일반적인 환경가치 및 인식제고의 효과와 건축물의 환경영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의 연구개발활동의 축진이 기대되며,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게되어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 향후 추진계획

- 2002년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건축물 보급확대계획을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국제적인 컨소시엄 GBC에 우리나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제인증기준 개발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에 대한 그린빌딩 기술 이전방안을 모색하여 국내기술의 향상 및 적용확산 유도에 노력하는

- 등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인증기준 보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국가팀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성과 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건물을 선정, GBC평가체계인 GBTool에 따라 건물의 성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01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될 예정인 SB2002 Conference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6) 환경부 환경경제과 :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환경경영 활동 수행

□ 배경 및 필요성

- 오늘날 광범위한 환경문제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경제주체로서의 기업 환경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환경과 연계된 무역규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를 중심으로 환경경영 국제 규격을 제정하는 등 기업경영에서 환경이슈는 Global 경제 환경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기업 스스로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기업의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기업의 환경문제에서부터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단일기업 차원의 대응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 목적(목표)

- 중소기업에 환경관련 기술의 전수와 보급 및 환경친화기업지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 환경친화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공동노력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을 활동을 전개하며
- 환경친화네트워크(www.ef21.co.kr)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정보의 축적보다는 흐름을 중시한 지식기반 경제의 디지털 환경정보 교류를 통하여 회원사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 국가 환경경영 민간 대표기구로 활성화하여 대정부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 및 신기술 보급이전 창구역할 수행을 통한 “국가 및 지구 환경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 활동 및 규모

- 국가차원의 환경친화적인 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문의 각계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차년도에는 전국에서 28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12월말 현재 126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 '95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시행 초기에는 각 기업들이 개별 활동으로 환경사회활동을 시작하였으나, '97년부터는 지역사회와 유관기관들의 필요에 부합한 지역별 친화기업 협의회를 창립하여 지역사회별 특화된 환경 보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 6월에 각 지역별 자체 활동중인 친화기업간 정보 교류 활성화 및 국가차원의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회 실무자 및 정부 관계자간 협의를 거쳐 2001년 5월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를 창립하여 활동중이다.

□ 이행성과

- 선진국 수준의 환경친화경영을 추구하는 대기업은 투자 및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97년부터 전문화된 환경관리 및 환경경영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국가 환경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그린 파트너로의 상생관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밑거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경인지역 환경친화기업협의회는 수원시청 및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와 공동으로 『Clean City Suwon』 만들기에 참여하여 수원 지역내에서 시내 주유소 및 버스회사를 최근 3년간 총 36개 업체를 지원한 결과 환경오염 저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제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수원시와 지역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2001년 6월에는 국제환경상품전에 참가하여 환경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 및 친화기업 지정상담을 실시하였고 환경친화기업협의회 및 친화기업 네트워크, 환경 사이버 교육 교재 등을 전시 및 홍보하여 다양한 계층별 환경 인식을 제고하였다.
- 중소기업 5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로 인한 환경질 개선 및 경제적 가치창출, 환경친화 경영이 국내에 파

- 급·확산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인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자매 부대의 환경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기반시설의 환경친화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사랑 콘서트 및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 개최로 인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현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 대국민홍보 및 환경친화기업간의 관련정보 및 환경부와의 원활한 정보 채널이 없이 각 지역별로 국한되어 활동이 추진되어, 환경친화기업 협의회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기업환경보고서 시범사업 참여로 기업의 환경신뢰성 증진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투명경영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Eco-Design)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의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활성화 및 “Global Green-marketing”접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향후 추진계획

- 『www.ef21.co.kr』을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사이트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내용추가를 통해 디지털 종합환경정보 네트워크의 면모를 갖춘 사이트로 운영할 예정이다.
-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보전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환경보전 계몽활동으로 추진 예정이다.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Web기반의 실시간 기술상담 및 지원 등의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확대지원 한다. 또한 군부대의 폐수처리시설, 소갈로, 폐기물보관장등 환경시설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 친화기업 회원사별 녹색구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친화기업의 대한 홍보를 실시하며, ISO/TC207총회 환경보고서 부문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외 정보 공유 및 국내 기업들의 환경정보공개를 독려한다.

(7) 환경부 환경경제과 : 환경성적표지제도 시행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소비 활성화 도모

□ 배경 및 필요성

-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점차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요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선택·사용토록 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환경라벨링제도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국제규정으로 제정하여 각 국가에서 도입·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목적(목표)

-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연자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동 오염물질이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환경성적표지를 근거로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즉,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제품의 선택을 가능토록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의 소비를 통한 환경보전을 하는 사전오염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및 규모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규격으로 정하고 있는 환경라벨링제도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제3유형인 환경성적표지제도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행성과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00. 2. 8)하여 환경성적표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1차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으로 가정용 전기 냉동·냉장고, TFT-LCD 모니터, CRT용 유리, 자동차용 휘발유, 승용차용 타이어, 두루마리화장지 등 6개 제품을 선정하고 인증기준을 개발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TV, 자동차용 에어필터 등 2개 제품을 2차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인증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 환경성적표지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소비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8) 국립환경연구원 : 반달가슴곰 자연복원 실험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경제개발의 그늘에 가려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보전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밀렵으로 인하여 반달가슴곰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1996년 이러한 반달가슴곰의 위험상황에 대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진 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가기관과 환경운동연합, 지리산생태보존회 등 NGO를 중심으로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지리산에 설치되어 있는 울무 제거작업이 진행되어 수천개의 울무가 제거되었다.
- 또한 1997년부터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정확한 서식실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의 개체군에 대한 지역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결과, 5마리 정도가 고립되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로는 개체군의 자연복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입 또는 인공증식을 통한 자연방사로 복원시킬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또한 지리산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안으로 다양한 관리방안들에 대한 예상결과와 요구조건들을 시뮬레이션화하기 위하여 2001년 4.18~21일 동안 서울대공원에서 세계보전연맹(IUCN)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보전번식전문가그룹(Conservation Breeding Specialist Group, CBSG) 및 곰전문가그룹(Bear Special Group, BSG/SSC/IUCN)과 국내 관련단체 및 학자들과 함께 개최된 지리산 반달가슴곰개체군 및 서식지 존속가능성 분석 워크숍(Population and Habitat Viability Assessment Worksho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상황에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군은 멸종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군을 존속가능한 개체군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야생 개체군으로부터의 이입(translocation)이나 사육개체를 이용한 지리산에 재도입(Reintroduction)이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2001년도에 새끼곰을 이용한 자연복원기술의 개발 및 국내 적용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지닌 인공증식된 생후 3개월생 새끼 4마리를 대상으로 자연적응훈련 및 자연방사실험을 실시하였다.

□ 목적(목표)

- 이 사업의 목적은 인공증식된 새끼곰의 자연복원기술 개발이다.

□ 활동 및 규모

- 본 연구사업은 환경부의 G7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연구비 150,000천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 야생동물과에서 연구의 전과정을 주관하였으며, 지리산생태보존회, 반달곰사육협회, SBS 등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다.

□ 이행성과

- 지리산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생후 3개월된 새끼 4마리를 반달가슴곰 사육장으로부터 선발하여 지리산 현지에 조성된 약 1ha면적의 방사적응장에서 약 2개월간의 자연적응훈련을 거쳐 자연방사한 결과, 3마리가 건강한 상태로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여 동면에 들어감으로써 새끼곰을 이용한 자연방사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이로써 동물원이나 사육농장에서 선발된 새끼곰을 이용하여 곰복원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러한 기술은 매년 새끼를 생산할 수 있고 새끼의 사망률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입을 통한 개체의 번식보다도 빠른 시간내에 높은 개체군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성비 및 유전적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비용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특정 지역에 새끼곰들을 방사하는 것으로 종을 최소생존개체군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 또한 새끼곰의 자연적응훈련과정 및 자연복원의 전과정을 S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하여(2002. 1. 11~12일) 국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곰과 같이 대형 식육동물의 복원사업은 학계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선진국에서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여 왔으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복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추진방향

- 자연적응에 성공한 3마리 개체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행동패턴, 서식지 이용 등 생태적 정보와 지리산에 현재 살고 있던 야생곰들을 만날 수 있을지 또는 이들 개체와 새로운 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는 장기적인 곰복원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9) 기상청 : APEC 기후네트워크 (APCN) 구축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아시아-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엘니뇨, 라니냐의 발생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의 발생 증가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경감을 위해서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원 국가간 기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지역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목적(목표)

-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APEC 회원국간에 실시간 기후정보를 교환할 수

- 있는 기후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상선진국에서 생산되는 고비용의 기후예측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고품질의 정보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제공한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상기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국제협력을 통한 이상기후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연재해의 최소화와 지역국가의 산업·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경제적 손실경감을 통하여 공동번영이라는 APEC비전을 달성한다.

□ 활동 및 규모

- APEC 회원국간 기후예측정보 교환을 위해 21개 전 회원국이 참여하여 2000년 10월 APCN 실무그룹을 결성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 이상기후 발생시 국가간의 실시간 기상정보 교환을 위한 첫 단계로 Dynamic Multi-Model Ensemble 예보를 생산하여 최적의 계절예보를 위한 근간을 마련한다. 특히 예측의 가장 어려운 여름철 강수량 예측에 중심을 두고 각국의 국가기상센터 및 연구센터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계절예보 공동생산을 위한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간 모델간 앙상블 예측 실험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캐나다(MC), 중국(CMA, IAP), 대만(CWB), 일본(JMA), 한국(KMA, METRI), 러시아(Roshydromet, MGO), 미국(NASA, NCEP, IRI) 등이 있다.

□ 이행성과

- 기상청이 제안한 『APEC 기후네트워크(APCN) 구축』 사업이 제17차 APEC 산업과학기술실무단회의(1999. 8. 미국 시애틀)에서 신규과제로 채택되었다.
- 10개국 16개기관 및 세계기상기구(WMO) 대표 등 40인이 참여한 APCN 제1차 실무단회의를 개최하여 이상기후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감시 및 예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 위해 APCN사무국을 기상청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 5. 서울)
- 기후관련 연구방향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Krishnamurti교수(미국), Sumi교수(일본), Meleshko박사(러시아) 등 11인의 세계적인 기후전문가들로 구성된 APCN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1. 10)
- APCN사업은 이상기후에 의한 기상재해의 경감과 지역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국가간 협력사업의 성공사례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기후전문가로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APCN 사업 정책 결정, 발전방향 제시 및 공동연구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APEC 기후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기후예측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과학자 그룹을 구성하여 보다 향상된 기후예측을 위해 회원국간 멀티-모델 앙상블을 실시하고 모델 결과 공동분석 및 분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APCN 사업은 실험단계(Experiment phase)와 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실험단계에서는 Multi-Model Ensemble 예보기법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며, 실행단계에서는 Multi-Model Ensemble 자료를 실시간으로 생산하여 참여국에게 분배한다.
- 각국의 기술력을 집약하고 실무단의 활동능력을 향상시켜 APCN 사업기반을 확고히 하며, APCN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 6월 APCN 제2차 실무단 및 제1차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추진한다.

(10) 산림청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국토의 65%는 산림인 반면 산에 심어진 숲은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려면 30~4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또한 목재자급률은 6%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뽕뽕히 들어선 나무들로 인한 광선 차단으로 산림토양·하층식생 미발달,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로 산림의 환경·생태적 편익의 효과가 미흡하였다.
- 지난 30년간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녹화한 청년기의 산림에 대하여 잘 가꾸어 주기만 하면 목재자원과 같은 경제적 가치는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수원함양·탄소고정과 같은 산림의 환경적 편익은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충분히 숲을 가꾸어 주지 못하였다.
- 이런 미진한 원인은 급속한 이촌향도(移村向都)로 인한 농·산촌의 인력 부족, 산림분야의 투자예산 부족 때문이며, 그 바탕에는 민둥산이 없어져 토사유출·산사태 방지, 수원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발휘되기 시작하여 “급한 불은 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97년

IMF라는 경제위기가 숲가꾸기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이 시기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통한 6~7%에 육박하는 실업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했다.

□ 목적(목표)

- 경제적으로는 6%에 못 미치는 목재자급률을 2050년까지 80%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280천ha 숲을 가꾸어 줌으로써 해외 목재자원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목재 수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한다.
- 환경·생태적으로는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토양 개선, 하층식생 촉진, 산림경관의 개선으로 수자원함양, 탄소고정, 야생동·식물 서식지환경 개선 등 산림의 환경적 편익을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환경의 기반을 조성한다.
- 사회적으로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함으로써 산림이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노숙인, 실직 건설일용근로자의 귀농 유도 등 도시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숲가꾸기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인한 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단위	1998년	2030년	2050년
평균입목축적	m ³ /ha	56	131	162
30년생 이상 나 무 분 포	%	20	74	71
탄소저장량	백만TC/년	174	461	569
수자원함양	억톤	180	237	252

□ 활동 및 규모

- 산림청은 한국의 산림행정의 총책임부서이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총괄 부서로서 직원은 총 1,400여명이며 연간 집행되는 예산은 8,600억원(2001년 기준)이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의 자원화와 보호, 산림생태계의 보호, 국유림의 직접경영, 임업의 촉진, 산촌의 진흥, 산림문화·휴양, 산림·임업관련 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98. 2. 28 「산림사업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 같은 해 3월 11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를 통해 같은 해 4월 6일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232개시·군·구)에서는 일반행정 이외에 숲가꾸기와 관련하여 공유림과 사유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은 산림·숲과 관련한 시민단체로서 1998년 3월 18일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회원수 약 11,000명, 10개 지역의 지역조직과 4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발족하였다. 144개의 지역조합, 조합원 5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은 2,255명이다. 연간 집행되는 예산은 96백억원이다.

□ 이 행 성 과

- 산림청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실행하면서 '98년부터 '01년까지 1,831명의 노숙인, 3,326명의 실직 건설일용근로자, 25,997명의 지역실업자 등 총 31,154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도시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87천ha의 국유림 숲가꾸기를 통하여 생태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기반을 조성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8년부터 '01년까지 23,775명의 지역실업자 실업자를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그린투어리즘, 산촌진흥, 도시숲가꾸기, 경관림 조성 등 지역별 특색있는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공유림·사유림 180천ha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생태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환경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생명의숲가꾸기 국민운동은 1998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발의부터 정부와 함께 실업대책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숲가꾸기 사업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 실업자들과 함께 숲을 가꾸어 시범림을 만들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시자로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숲가꾸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체험교육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산림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사유림·공유림 숲가꾸기에서 축적된 임업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 11,000명을 2주간에 걸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임업분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고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98년이후 연고용 30만명을 고용하여 8,000ha에 걸친 밤나무 임지에 간벌을 실행하여 밤나무의 결실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 이렇게 시작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역사회의 실업자는 물론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노숙인과 건설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되어 버린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숲가꾸기를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2002년에는 700억원의 예산으로 45천ha의 숲을 가꾸어 줄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시 노숙인 300명, 도시건설일용근로자 240명을 포함하여 연인원 총 1,789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하게 된다. 산림청이 직접 경영하는 국유림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사유림·공유림은 각각 20천ha, 시민단체인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을 통한 시범림과 산림조합을 통한 밤나무 임지 각각 2천ha를 가꾸어줄 계획이다.
- 이외에도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실업자 1,100명에 대한 2주간의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기능인으로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분야에서 직업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벌채목 약 50,000m³을 수집하여 목재 또는 톱밥으로 활용하여 용재, 축산폐수 정화, 가축의 조사료, 임산연료 등으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에 활용하게 된다.
-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육림사업과 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매년 28만ha의 숲가꾸기를 통해 2050년까지 3,500천ha의 경제림 조성하여 목재자급률 80%를 달성함으로서 목재수입을 줄이고 지구환경보존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실업률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정책육림사업으로 전환하여 매년 안정적인 면적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어 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양성된 기술인력을 전문기능인으로 전환하여 정책육림사업에서 일일고용형태가 아닌 안정된 일자리에서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을 유도할 계획이다.

(11) 경기도 :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경기도는 인구 9백6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광역지자체로 변모했다. 지리적으로는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실제 규모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있어 도시와 농촌, 산림과 하천, 해안과 산간 내륙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공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주거 및 생활조건에

서 생활하고 있어 도민의 사회적 통합 노력이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 경기도의 이러한 팽창과 다양성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그늘을 담아내는 2차 도시가 아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 이에 경기도는 다양한 이해 그룹이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시급히 극복해야 할 지역 및 환경현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과제가 있다.

□ 목적(목표)

-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는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 노력한다.
- 급격한 개발정책으로 야기된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의제를 개발하고 확정한다.
-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모두가 참여하여 실제적이고 실천가능한 내용을 의제로 담아내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자발적 실천을 통한 구성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 환경과 개발의 조화, 개발 이익의 균등한 배분 등 사회적 평등 실현을 통한 사회 각 부문간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환경친화적 사고를 지니고, 몸소 실천하여 범도민적 환경운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활동 및 규모

-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의제21 추진 주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를 제정, 지방의제21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 도내 기초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지방의제21 추진의지’ 항목 신설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 추진을 독려했다.
- 도내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전문가, 교육인, 종교인, 경기도의원, 언론인, 기업인, 시민 및 공무원 등의 대표 1백32명으로 구성되었다.

-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는 2002년 현재 연간 예산 5억5천만원 규모로 도내 민간단체, 기업내 동호회, 종교조직, 대학 동아리 등과 함께 ‘푸른경기21’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벌임으로써 범시민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 지역 환경대탐사’, 도내 NGO와 환경공무원이 함께 논의하며 정책비전을 마련하는 ‘경기 NGO·GO 환경 한마당’, 의제 실천을 위한 연구·홍보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각종 캠페인을 통해 의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이행성과

- 직면하고 있는 도내 환경현안에 대한 실태 점검과 민·관·기업이 협력하여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8개 분야 21개의 의제로 이루어진 푸른경기21은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의 주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시민과 시민단체 및 기업이 지방의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현재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1개 시·군이 ‘추진협의회’ 또는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21을 작성 또는 실천 중이며, 민간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지방의제21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사무국을 설치한 상태이다. 2002년 상반기 중에는 도내 나머지 10개 시·군 모두 의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뿐 아니라 상업 및 인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도내 민간·환경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30여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사업을 통하여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지 못하거나 추진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하여 민간 스스로 앞장서 사업을 벌임으로써 관이 협조하고 지원하게 만든다.
- 대표적 실천사업 사례를 보면, 성남시 맹산개발계획을 공원화계획으로 변경 시키고, 시흥시의 오이도 갯벌 개발계획에 대한 민간환경단체의 반대에 따라 시흥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후 개발계획을 철회하였다. 안산시에서는 도내 대표적 환경오염지역으로 뽑혔던 시화호에 대하여 수질정화 및 공원화 계획 등을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 지원하고 민간환경단체들이 앞장서 시화호공원화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연천·과주 등에서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경기 북부 지역내 민간환경단체로 하여금

지역축제 개최 및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 향후 추진방향

- 민간환경단체와 행정기관, 그리고 기업, 전문가, 노동조합, 주민조직체 등 지방의제21 주요 그룹들이 모두 참여하여 범도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로 거듭나도록 한다.
-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비전을 만들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 도내 NGO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푸른경기21』을 도민속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사업으로 펼쳐며, 일회성 사업이나 한해 사업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몇 년씩 장기적으로 투자·지원하여 『푸른경기21』이 명실상부한 의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한다.
-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계 방안 모색, 광역·기초간 정보 교류 등을 강화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접목시키는 역할을 한다.

(12) 경기도 양평군 : 양평환경농업-21(YEAM-21)

□ 배경 및 필요성

-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공기·물·흙의 오염으로 동·식물종이 감소되어 가고 인류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할 사명감과 인구 8만중 36%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인 양평군의 21세기 비전은 농업밖에 없음을 인식하여 땅(농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인 환경친화적 농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 목적(목표)

-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및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 환경친화적 농업을 통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식량자급기반 확충

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생산계획 등 농정시책 추진에도 반하지 않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의 정부” 농정의 틀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한다.

- 이에 21세기 안전한 환경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농업과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농업,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케 하는 농업이 『양평환경농업-21』의 최종 목표이다.

□ 활동 및 규모

- 현재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하여 3단계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양평환경농업-21』은 양평군 전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업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는 6개분과 714명으로 1998년 4월에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양평환경농업-21의 방향결정 및 사업구상, 사례연구, 선도농가 및 선도마을 순회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평친환경 농업인연합회』는 2000년 6월에 5개분과 2,105명으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로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실천 및 전파 역할을 한다.
-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21세기 환경시대에 대비하여 양평군의 자구책으로 땅(농업)과 승부를 걸기로 결심하고 “제2의 농업부흥운동”을 선언한 후, 추진 발기인협의회를 개최하고 『양평환경농업-21(YEAM-21)』 명칭을 정한 뒤 선언하게 되었다.
- 메뚜기·반딧불 서식지 만들기, 허수아비 들판 만들기와 제조제·농약·화학비료 사용 안하기의 3가지 하기, 3가지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 또한 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포럼을 개최하여 친환경농업 학술대회, NGO대회 및 결의문 채택, 친환경농산물 이벤트행사 및 현장견학 등의 행사를 가졌다. 그 외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크게 오리 및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제조제 사용억제를 위한 예취기 확대 지원, 수질개선 및 유기질비료 확보를 위한 축산농가 톱밥지원, 산성화된 흙을 양질화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 친환경농업 홍보 및 이벤트 행사로는 반딧불이 체험, 메뚜기잡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을 하고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행성과

-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은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종합방제기술과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등 환경농업 실천 기술을 바탕에 두고 21세기 지식, 정보, 환경의 시대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다.
- 따라서 필요한 양분은 최대한 공급하여 작물생육을 유지하며, 병해충 약제도 포장에서 농약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 농업의 안전성, 환경성, 지속성과 경제력을 갖기 위해 방제에 필요한 최소량을 살포하여 최대의 방제 효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농법으로의 전환을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선도 농업인을 중심으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농법의 기술경험을 축적시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억제로 지력을 증대하여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어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촌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시킨다.
-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는 흙을 살리고 물을 깨끗이 하는 맑은물 사랑을 실천하여 팔당호 수질보전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친환경농업 부문에 계속하여 예산을 증액 투자할 계획이며 국도변에 양평친환경 농산물을 도소매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유통센터(20억6천6백만원)를 건립하고, 양평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현지에서 결정하여 친환경농업 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13) 하남시 : 나무고아원의 조성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하남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 하남시의 전체 면적의 98.4%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었으며, 특히 도로의 건설과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

들이 버려지거나 베어지는 일이 많아 오히려 도심에서의 녹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 목적(목표)

- 나무의 역사성, 상징성, 생명성을 존중하여 시민들의 나무 사랑하는 마음을 유도한다. 도심에서 사라지는 녹지를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대체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관리 측면에 있어 도심 녹화에 이바지한다. 수목의 보호 및 가로수, 정원수 등으로의 재활용으로 예산의 절감을 유도한다. 생태 숲으로 조성하여 환경적 가치의 증진과 함께, 생태체험 현장, 환경교육장,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한다.

□ 활동 및 규모

- 하남시와 파트너간의 환경보전 및 시민의식 개혁 등의 목표아래 『하남나무고아원』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지조성에 있어서는 한강 폐천부지인 하남시 선동 한강변에 100여만㎡의 폐천부지에 나무고아원을 조성하였다.
- 건설공사장, 가정내 버려진 수목, 재해수목, 교통사고 등으로 상처받는 나무 등을 이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나무를 기증받고, 다른 지방정부인 서울시와 군부대, 개인, 회사 등에서 수목을 기증받아 나무고아원에 식재하였다. 그리하여 1단계 17종 5,023본을 이식한 바 전국적인 호응을 얻어 2001년말까지 1만여본의 나무가 이식되었다.
- 비용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회원 실천연합과 환경농업시민가족연대와 하남시에서 서로 담당하였다.

□ 이행성과

- 나무고아원 개원 이후 하남의 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공사 등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나무들의 기증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무고아원으로 인해 자칫하면 소홀하게 여겨져 버려질 수목들을 하나라도 더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고취되었다.
- 전국 각지의 기증자들과의 파트너십의 형성과 하남시가 생태도시로 가는데 있어 녹지의 조성 및 이를 통한 환경교육의 실시, 생태공원으로의 조성 등으로 환경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환경교육의 실시와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다른 지역에서의 견학

등으로 하남시의 사례를 널리 알렸다. 또한, 나무 고아원 내의 수목을 정원수 또는 가로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절감을 유도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하남시가 생태도시로 나아가는데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환경적 지속성 : 나무고아원의 조성은 사라지고 있는 녹지를 보존하고 더불어 이를 활용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하남시의 전체적인 녹지의 손실을 줄이고 나아가 녹지의 면적을 늘이는 동시에,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적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사회적 지속성 : 나무고아원은 가지치기, 나무심기 등을 통해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에 있어 어린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형평성을 유도하였다. 또한 개인과 시민단체, 지방정부, 회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평등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적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였다.
- 경제적 지속성 : 치료 및 재배후 가로수, 시민들의 기념식수, 도시 조경등에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자본의 도입에 있어 시민단체들의 도움과 방문하는 방문객과 자원봉사자들과의 운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부여하였다.
- 하남 나무고아원운영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주변에서 환경훼손의 심각성을 호소하여 버려질 성장이 더딘 나무, 상처받은 나무를 시민단체에서 기증받아 시당국에서 옮겨 심음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으며,
- 나무가꾸기, 가지치기, 농사체험, 가축사육체험등에 시민이 참여하고 영원히 기억이 될 나무 고아원 상징간판제작에 시민이 참여하는 산 교육장역할을 하여 시민참여를 더욱 유도할수 있었으며,
- 한약 비료우드칩 사용, 추후 350만평의 환경생태공원 조성계획등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시민, 시민단체, NGO단체, 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남시의 지원 언론매체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하남시가 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향후 추진방향

- 다른 지방정부인 서울시 및 전국적으로 나무기증의사를 밝히고 있어 2002년 말까지 2만여본 이상의 나무가 이식될 예정이다.
-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산림청 등에서 나무관리기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나무의 치료, 재배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해 훼손될 나무를 재활용·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인 호응을 받고 있으며 나무고아원을 찾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여 농사체험과 나무의 가지치기와 비료주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학생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약 비료 제조와 오리, 닭, 토끼등 가축사육 체험장 등의 운영은 사라져 가는 옛 선조들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상처받은 나무의 외과수술, 가지치기 등의 기법을 시민들에게 산기술의 장을 마련하고 인근한강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산책로와 연계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여가, 레저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14) 하남시 : 검단산 휴식년제

□ 배경 및 필요성

- 하남시 중앙에 위치하고 대한민국 최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가까운 검단산은 1일 이용시민이 3,500여명으로 너무 많고 등산로가 14개소로 산재되어 있어 산림이 날로 훼손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족, 환경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되는 등 시민들이 점차 하남시의 명산인 검단산을 찾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목적(목표)

- 검단산 이용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복원방법을 논의하도록 한다. 또한 등산로 폐쇄 안내등 시민계도와 시 예산을 투입하여 등산로 폐쇄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아 소나무, 철쭉, 억새군락지에 대한 외과 수술 등 보호운동의 실시로 훼손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복원기술을 시공무원에게 전수한 후 향후 시 자체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아울러 시민단체와 등산객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호응 및 참여 속에 동 사업을 추진한다.

□ 활동 및 규모

- 검단산 자연휴식년제 시행 초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4개소나 되는 등산로 10개소를 폐쇄하고 4개소만 운영하자 기존 편리한 등산로를 이용

- 하던 시민들과 폐쇄된 등산로를 이용하던 시민들과 폐쇄된 등산로 주변 상인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으나 시당국보다는 시민단체에 의한 이해와 설득으로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호응을 하게 되었다.
- 아울러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원방법을 강구한 바 한국재해 소나무 군락지 및 한국나무종합병원(주) 및 동원 F&B, 광주임업협동조합의 기술, 재정 인력지원을 받아 나무외과수술, 가지치기, 소나무등 군락지 보호공사등을 실시하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 방제등을 시 예산을 함께 투입 실시하였다.
 - 또한 검단산 환경보존회 등 시민단체와 하남시는 산불예방캠페인,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새집달아주기, 산림 내 쓰레기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황폐된 산림이 점차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 하남시에서 '99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여 등산로 주변에 대한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등을 실시하였으며 100여명의 산림 감시요원을 검단산 등산로 주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산림훼손 행위 단속등을 최근 3년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동원 F&B등 파트너 부분에서 총 48,200천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나무외과 수술등 자연휴식년제 실시 이후 검단산내 수목에 대한 보호작업을 실시하였고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인 캠페인 및 보존활동으로 황폐된 검단산의 복원을 실시할 수 있는 등 행정당국, 기술보유업체, NGO단체에서 각각 역할을 담당 검단산 자연휴식년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 이행성과

- 검단산 자연휴식년제는 시당국의 예산지원 및 노력과 시민단체등의 기술 및 자금지원, 시민캠페인 등으로 자칫 훼손될 뻔하였던 아름다운 산과 수목을 시민들의 휴식처, 여가의 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환경보호의식 고취 및 서울이라는 대도시 주변에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하였다.
- 또한 시주변에 있는 이성산, 금암산, 객산 등 여러 산의 보존대책도 제시하였고 행정당국 단독의 정책 시행보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파트너쉽에 의한 사업추진의 효과가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되살아나는 검단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시민들 사이의 약속이 되고 있다.
- 환경지속성 : 검단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14개소의 등산로가 자연적으로 생

성되었는바 4개 등산로를 제외하고 10개 등산로를 폐쇄하여 숲가꾸기, 자생 수목 및 식물군락지 보호, 동물의 서식처 제공 및 산림보호 캠페인 및 활동 전개로 황폐된 하남시의 명산이 복원되고 있다.

- 사회적 지속성 : 검단산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산림가꾸기 및 경영을 환경보전 측면에서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처 및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민, 시민단체, 기업체, 지방정부가 파트너쉽을 통하여 사회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 경제적 지속성 : 검단산이 황폐하여 홍수가 난다면 3천여 세대 1만명의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산림내 병해충, 기타 오염등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산림보호측면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검단산 자연휴식년제 도입은 훼손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환경을 행정당국 단독으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바 시민의 이해 위에 전문가, 전문회사의 기술과 자본, 참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하남시 나머지 산에 대한 보존, 나아가 대기, 수질 정화운동의 방향 설정 및 추진방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추진방향

- 하남시에서는 한국나무종합병원(주)의 소나무 외과수술의 기법과 동원 F&B의 소나무, 철쭉, 억새보호기법을 산림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습득하게 하여 관내 주요산에 대한 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단산보존회와 비슷한 산림보호 민간단체가 25개 단체 4천여명이 결성되어 쓰레기 수거 및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15) 하남시 :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 배경 및 필요성

- 시전체 면적이 개발이 제한된 지역여건과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화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미흡하고 시민 및 단체·시 당국에서도 의식주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실천계획수립 및 방향제시가 미흡하였다.
-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박람회의 경우 생산성 및 신기술 개발위

주의 박람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 환경박람회의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목적(목표)

- 환경산업 기술 교류를 통한 국내환경산업발전과 대외 경쟁력제고, 세계 첨단 환경기술과 정보 교류의 활성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대전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모델 제시(Eco-city), 최소한의 비용투자 최대한의 성과 계양, 환경에 대한 주민의 산교육장 역할, 하남시의 환경에 대한 노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 활동 및 규모

-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정부, 국회, 환경단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박람회 개최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바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 20억원 경기도에서 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회장사업, 영업수입등 환경진흥회 자체사업을 통하여 약 31억원의 수입과 하남시 지원사업등을 합하여 총 216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UNDP 등 국제기구의 기술과 인력지원 등과 국내의 자원봉사단체, 13만 시민들의 참여로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하남시 중앙부처, 국제기구, 시민단체, 시민등 각 분야의 협조로 개최할 수 있었다.
- 1995년 민선자치시대 이후 하남시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중의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에 시에서는 수많은 시민교육, 간행물의 배부, 시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원을 설득하여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시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발족시켜 박람회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 도시환경정비, 홍보등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UNDP 등 UN기구의 참여로 해외국가, 기업체, 단체에서 환경박람회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동박람회 개최부지를 '88서울올림픽 조정경기가 열렸던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함으로 개최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비용절감 효과를

- 거두는 등 국내외 참여 분위기속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3만 시민이 자원봉사요원이 되어 각 분야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환경! 그 생명 시대의 개막”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첨단 환경산업기술과 정보의 교류등을 통하여 국내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국민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장인 종합환경박람회로 개최하였으며
 - UNDP, UNEP, UN HABITAT가 참여 UN의 환경정책을 국내의 관람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UN사무총장 Mauricestrong 등 다수의 환경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등 세계적인 종합환경축제로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개장전후 2개의 태풍과 232mm의 기록적인 호우, 조직위원회 간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으로 초반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나 곧바로 정상화 되어 91만여명의 관람객과 4천여명의 외국인이 박람회를 견학하였다.
 - 주제관, 환경관, 환경산업 기술관등 연면적 15,000여평의 21개 전시관을 조성하였고 동강 네트워크 등 11개 환경 NGO 단체가 참여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였고, 환경산업기술관에 11개국 147개업체 416부스가 전시 참여하여 16,650만불의 수출상담과 15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으며 내수로서는 1,120억원이 상담과 1,150억원의 계약성적을 올리는 등 국내외 환경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하남시가 UNDP 지정 생태모델도시로 지정받아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전세계에 하남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도시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로 도시발전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행성과

-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국내외 열악한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기술 및 정보의 교류를 통한 국내환경산업발전과 환경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동 산업의 집중발전을 할 계기를 마련하였고 세계 첨단환경기술과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룰수가 있었으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이 개발과 하남시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모델(Eco-city)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적 지속성 : 동 환경박람회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국민환경의 산교육장으로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세계적으로 하남시가 환경에 대한 노력이 부각되었으며 동박람회 시설 및 오폐수 쓰레

기처리, 교통문제 등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 모범적인 박람회였다.

- 사회적 지속성 : 동강네트웍등 국내 11개 환경 NGO단체가 참여하여 NGO 단체의 환경보전활약상을 알리고 동박람회운영 상황을 전세계에 전파시켰으며 13만시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시민 스스로가 환경박람회 개최자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바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경제적 지속성 : 환경산업기술관에 11개국 143개업체 416개 부스가 전시 참여하여 세계환경산업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약 15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는 등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남시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가지 정비로 도시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6) 하남시 : Human, Eco-city로 가는 노력

□ 배경 및 필요성

- 하남시는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와 구리시, 남양주, 광주, 성남시에 인접해 있고, 지리적으로는 서울 중동부에 위치한 상주인구 12만 5천명의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시층격 12년차의 신생도시이다.
- '89년 시 출범당시의 전체 면적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2%도 못미치는 1.41km²에 도시화지역이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시가화지역(1.41km²)에 총인구 125천명 중 약 75%인 94,000명이 거주, 실질적 인구밀도는 66,843명/km²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의 평균 인구밀도 18,000명/km²보다 3배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일부 신 도심지역을 제외한 구도심지역은 주택과 주택사이가 벽과 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규모 공원은 물론 오픈 스페이스(open-space)가 전무한 실정으로서 일반인들이 그린벨트하면 연상되는 녹색 또는 푸르름을 아이러니컬하게 도시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이면서도 구도심지역내에서는 찾아 볼 없는 회색의 삭막한 도시이다.
- 이와 같이 하남시는 교통이 발달하고 거대 소비도시인 서울과 인접한 도시이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은 처녀지가 많고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의 허파구실을 하는 도시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주민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시민의 정서는 서울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고 정주의식이 희박할 뿐 아니라, 거쳐가는 도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도시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목적(목표)

- 시의 도시녹화사업의 기본방향은 원시의 자연환경과 같이 『공생(共生)과 순환(循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도시환경적 여건과 시민간의 상호 이율배반적인 여건을 충족시키면서 21세기를 넘어서 30세기에 도 지구촌의 영원한 테마로 다가올 “환경 또는 생태”라는 테마를 도시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았다.
- 그간의 도시녹화사업은 「공원조성과 나무심기」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도심공원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포위되어 있고 친수공간, 친자연공간과 격리되어 생태의 순환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처 제공의 단순기능에 머물고 있었다.

□ 활동 및 규모

- '99년 이후 방향을 전환하여 검단산, 이성산, 남한산, 한강을 도시녹화의 핵(核)으로 설정하고 도심지를 흐르는 덕풍천, 초이천, 망월천과 도시공원 등을 거점(據點)으로 하여 이들을 녹도, 가로수로 연결시키고 주택지의 조경, 학교와 교회의 공원, 소규모 썸지공원 등을 연결하여 자연적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을 담은 『푸른 하남가꾸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한다.
- 시가 도시발전의 기본전략을 “환경”으로 설정한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한 사업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사업이다. 시가 지향하는 환경도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시스템과 더불어 도시조성의 1차적 책임자이며 첨병인 공무원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 환경개념을 도입시키기 위해 변화시키며, 기술적 행정이 요구되는 추세에 맞춰 행정직 기술직렬 확대와 우대 등의 시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워크숍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와 조경, 식물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생태 환경도시로 가는 생각을 개개인이 갖도록 노력하였다. 환경관련 전시회와 박람회에 총 8차례에 걸쳐 연인원 4,632명이 견학케 했으며 학비를 지원하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마인드와 행정수행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 이행성과

- 도시녹화의 핵으로는 검단산과 한강 보호와 대기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태보호를 차원에서 '01. 5월부터 3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검단산내

자생하는 소나무 군락지 보호를 위해 자체 간벌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변화 차원에서 한국조류협회와 더불어 25천여명의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새집달아주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 도시녹화의 거점 사업으로는 망월천을 기존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친화적 특수공법(Geo green-cell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바닥에 자갈을 포설하는 자연형 하천 공법을 사용하였고, 자생하는 동·식물들을 살리기 위해 본래의 하천이 흐르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하천범람이 없는 시범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도로공사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버려지거나 베어져 버릴 위기에 처한 노거수목과 주민과 독지가들이 기증한 나무 등을 모아 한강 둔치 80,000m²에 ‘나무고아원(Tree-Orphanage, Tree-bank)’을 조성하였다. 또한, 하천복개의 전면금지와 덕풍천에 오·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하였다.
- 도시녹화의 사업으로는 쌈지공원 조성, 국공유 토지의 매각 전면 금지와 관리의 일원화, 교회와 학교의 담장허물기, 노거수(老巨樹) 땅사주기, 도로의 녹지 중앙 분리대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 핵(核)과 거점(據點)과 점(點)을 잇는 생태통로의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생태통로를 위한 가로수의 병렬식재방식과 관수파이프 설치 도입, 생태통로를 위한 축사의 전면적 금지, 한강호안 블럭에 대한 생태공간화로 호안블럭을 동식물이 식생할 수 있도록 30cm 정도 흙을 콘크리트 호안블럭 위에 덮어 육지와 한강과의 경사면을 최대한 완만하게 하여 친수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등 생태복원을 추진해 가고 있다.

□ 향후 추진방향

- ‘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유엔개발위원회(UNDP), 유엔인간정주회의(UNCHS)등 국제기구로부터 전국 최초로 『생태시범도시』로서 지정 받은 이후 급격히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런 시민반응에 힘입어 도시 속에 공원이 아닌 공원 속에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의 문제이다. 나무에 대한 인식에 있어 나무도 인간의 삶과 궤적을 같이 하고 나무를 나무 이상으로 보는 인식과 한그루의 나무는 소아적이고 단순한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 도시를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서, 지구촌의 생명을 지키는 존재로 재인식된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도시녹화의 다양한 노력들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 자치단체의 행정운영 성패는 주민참여가 관건이듯이 이 도시녹화 사업도 소득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 젊은 계층과 연로한 계층간에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시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 등이 도시녹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지름길로 통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 도시녹화의 또다른 중요한 관건은 토목, 건축, 임업등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식이 변해야만 도시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비교견학, 폭넓은 직·간접 경험, 시야를 넓히는 시도가 개인은 물론 시스템적으로나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숲의 도시 또는 환경생태 도시의 지향하는 데 있어서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그린벨트의 조정과 더불어 수많은 개발론자의 인식과 30여년간 그린벨트내의 거주하던 주민들의 욕구분출을 어떻게 환경과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에게 내재된 자연으로의 동경을 이끌어 내고 산업화 도시화를 일찍이 경험한 선진국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초등교육에서부터 실시하여 우리 만큼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현재의 습지복원, 각종 국제협약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글로벌 표준의 제도화가 지속되는 국제적 흐름에도 발맞춰 그린벨트를 21세기를 넘어서 30세기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하겠다.

(17) 대구광역시 :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 배경 및 필요성

- 담장허물기 운동은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를 이웃간에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공서나 민간건물의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부족한 녹지와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 목적(목표)

- 담장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마을가꾸기 운동으로 지구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2001년부터 APT단지 등 신축건물에 담장 대신 가로공원조성을 유도하며, 2002년도까지 모든 행정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개방형 가로공원을 조성한다.

- 2010년까지 각급학교·공공기관에 숲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며, 138개 읍·면·동 단위의 담장없는 개방형 마을을 1개소씩 조성한다.

□ 활동내용 및 규모

- 지난 1996년부터 대구시와 각급기관·단체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6년초에 대구 서구청이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구청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처음 시작되었다.
- 담장허물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와 함께 각 대학 조경학과 교수 및 조경업체 대표로 담장허물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이행성과

- 지난 1998년도에 대구사랑운동실무위원인 대구YMCA 시민사업국장의 자택 담장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시민사회로 접목되었으며, 이에 1999년 대구사랑운동실무위원회에서 담장허물기 운동을 대구사랑운동의 기획과제로 채택하여 민·관협력의 시민운동으로 전개키로 결의함으로써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 1999년도 이후부터 참여분위기가 크게 확산되어, 2001년 말까지 총 176개소 9,230m의 담장을 허물고 128천여㎡의 가로공원이 조성되었다.
- 담장허물기는 도시에 열린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만남과 마음의 벽을 없애므로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도심의 부족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고, 비좁은 도시골목이 쾌적한 마을가꾸기 운동의 시발지로 발전할 수 있다.
- 장기적이며 먼거리에 있던 도시계획을 단기적이고도 가깝게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가로공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쉼터, 대화의 장, 어린이놀이공간, 마을문화 생성의 산실로 정착되었다.
- 신축건물의 경우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자원 절약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담장허물기와 숲의도시가꾸기 등을 통한 도시림 조성으로 무더위를 퇴치한다.

□ 향후 추진계획

- 담장허물기 운동의 본고장이자 민·관협력의 실험적 시민운동의 성공모델로서 앞으로도 보다 개혁적이고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따라서 매년 50개소 이상의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하며, 신축건물, APT단지 담장안하기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담장허물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매년 15억원이상)와 함께 후원자 및 독지가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취향에 맞는 담장허물기 모델동산을 조성한다. 또한 시범마을조성(138개소) 및 우수마을에 대해 선정하여 포상하고, 담장허물기 현장을 견학 및 관광코스로 활용한다.
- 담장허물기 운동이 한국은 물론 전세계인의 인간성 회복운동이자 21세기 지구촌 환경살리기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18) 서울시 :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은 외곽에 병풍처럼 둘러선 산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왔다.
- 그러나,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크게 팽창하였다. 전 국토 면적의 0.6%인 605km²에 불과한 서울에 전체인구의 22%인 1,031만명이 살고 있으며(인구밀도 17,046명/km²) 전체인구의 45%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로 서울의 하늘은 먼지와 매연으로 오염되었고, 하천은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변했으며, 나무가 자라던 자리에는 커다란 회색 빌딩으로 들어차 있다.
- 이러한 서울의 환경을 맑고 깨끗하며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바꾸기 위하여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목적(목표)

- 서울시에서는 그윽한 멋과 따뜻한 정을 지닌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임을 자부하면서 빛나는 문화유산을 고이 가꾸고,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을 길이 보전·창조함으로써 미래의 후손에 대한 오늘의 소임을 다하고, 지구촌의 앞날을 배려하는 슬기로, 서울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기본 방향을 1996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서울환경헌장으로 제정 공포하였다.
- 시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거나 줄이는 예방적 노력에 앞장선다.
- 도시의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 가며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순환사회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활동 및 규모

-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도시계획조례 제정, 도시생태현황도(Biotop Map) 제작이다.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기업·시의 3자 파트너십 기구로서 공동위원장(시장, 시민대표, 기업대표 각 1인)제로 운영하고, 위원도 시민대표, 기업대표, 전문가, 시 간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위원회에는 기획조정위원회와 3개 분야별 위원회 두고, 총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의 주요 실·국장(환경관리실장, 시정기획관, 산업경제국장, 교통관리실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주요정책 및 사업이 경제적 효과, 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되도록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자문 ②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③서울의제21의 실천·이행 상황 점검, 자치구 의제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④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이다.
-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으로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과 도로건설,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계획 수립전 또는 사업 결정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평가시기를 정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업주관부서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대상을 평가 의뢰하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대상선정위원회에서 평가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검토소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서울의제21에서 추구하는 행동목표에 부합되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시 공무원, 시민대표, 기업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토의에 의한 최종결론을 도출하고, 평가결과는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건축법에서 이원적으로 관리되던 건폐율, 용적율, 도시설계 등 도시개발 관련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

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0년 5월 10일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7월 15일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개발위주의 도시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시생태 개념에 입각한 보전 위주의 도시계획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도시생태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생태계 보전을 추진하고자 1998년부터 3년에 걸쳐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였다. 서울시의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7개 대학 생태학 연구팀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고 서울시 도시생태현황 유형구분 및 평가방법을 마련한 후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GIS로 구축하였다.

□ 이행성과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에 따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며,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기업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 서울시는 도시전체에 대한 총량적인 평가가 아닌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계획 수립전에 경제적 효과, 사회적 형평,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통합·조정 추진되어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토록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제정 제도화 하였다.
- 도시계획조례 제정은 과거 급성장시대로부터 물려받은 획일적인 도시관리의 틀을 삶의 질이 중시되는 새천년의 시대요구와 서울의 도시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도시관리의 기본철학은 서울시민과 후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의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 5가지 도시관리원칙을 담았다.
- 서울시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제작방법

및 갱신주기, 자료의 정밀성 유지 등을 위해 새로 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환경성검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서울의 대기오염 주범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한강 및 하천을 살리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또한 꾸준히 생활주변에 공원을 확충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늘리고,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서울을 가꾸고 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늘려 자원이 순환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 특히 환경정책의 성공여부는 환경주체, 즉 시민과 기업 그리고 서울시의 참여와 행동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서는 모든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기업·서울시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여 서울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 제도적으로는 환경기본조례, 법령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조례,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적·효과, 사회적 형평,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 형성을 위한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

□ 향후 추진방향

- 서울시는 위에서 열거한 사업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서울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2001말 현재 2개소)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국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및 보호종 외도 서울에서 사라져 가는 생물종을 관리야생 동·식물로 지정(35종)하여 보호하고 있다.
- 특히 서울시는 가로수 아래 키작은 나무 식재, 공공기관과 학교를 녹화한 후 시민의 녹지공간 제공, 주택밀집지역에 마을 마당 조성, 건물벽면·옹벽·방음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 녹화, 마을 단위의 녹화사업과 생물타리 만들기 사업, 간선도로·하천변에 수림대를 조성 등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로

회색빛 서울을 이제는 푸른 도시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귀중한 녹색자원인 나무를 보전하는 나무은행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환경·교통·재해통합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영향평가 대상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대폭 강화하여 서울의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 인천광역시 : 인천시민 바다 되찾기 운동

□ 배경 및 필요성

- 인천은 바다의 도시이면서도 대부분 해안선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다를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 목적(목표)

- 해안선에 둘러쳐져 있는 철조망을 걷어내고 특성별로 특화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 활동 및 규모

- 사업의 시행시 시민, 기업, 행정이 주체가 되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데 우선 시민은 해안개방에 대한 촉구와 염원을 알리며, 현황 조사와 친수공간 조성시에 의견을 제시한다. 기업은 철조망 없이 해안경계가 가능하고 불순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술 연구를 제시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해안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행정은 해안을 개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시민이 해안을 이용할 시 편리성을 도모하는 특화된 친수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의 자체 재원(인천광역시 지원)으로 진행된 주요 활동은 해안 철조망 실태 조사 및 시민공청회,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과 해안개방을 위한 시민 걷기 대회 및 해안 철조망에 리본매기, 해안 개방의 필요성 엽서 보내기 등의 행사 등이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 지역별 특성을 살린 친수공간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행성과

-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철조망의 제거 및 개방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철조망 제거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 증진되었고, 해안 개방시 이용에 대한 청사진이 수립되었다.
- 새롭게 매립된 송도신도시 지역에 중앙정부가 바닷가에 전체 철조망을 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운동으로 50%내외로 철조망을 치고 나머지는 개방하기로 한 기대이상의 효과도 가져왔다. 따라서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도 해안 철조망 개방 및 친수공간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었다.
- 바다와 해안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인천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시민, 기업, 행정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
- 신규 지역의 철조망 설치 계획이 50%로 축소되고 개방된 부분은 해안 친수공간화 계획이 수립되는 등, 일부 요구는 충족되었으나 아직 대부분의 지역이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과거에도 시민단체, 행정 등에서 부분적으로 해안 철조망 제거와 친수공간화를 주장 또는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금번 인천의제 21의 추진사업은 시민, 기업, 행정이 뜻을 모으고 각자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합된 사회 모습이 구현되었다.
-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면서도 국방과 관련된 문제라 자유롭게 언급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으며,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좀 더 대규모로 시민들의 요구를 나타낼 수 있는 행사의 기획에 한계가 있었다.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해안 철조망 실태와 개방시 친수공간화 계획을 시민, 기업, 인천시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며, 지속적으로 해안 철조망 개방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에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제공과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다.
- 해안 철조망 개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시 중앙정부와 개방 가능성에 대한 재논의를 추진한다.

(20) 인천광역시 : 승기천 살리기 운동

□ 배경 및 필요성

- 인천의 중심가를 흐르는 가장 큰 하천인 승기천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목적(목표)

- 승기천을 되살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과 하천 생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휴식공간으로 하천을 만들어 나간다.

□ 활동 및 규모

- 사업의 진행시 시민들은 하천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하천 복원에 대한 시민의 염원 알리기, 친수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행동을 취한다. 기업은 오염원을 스스로 차단하고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오염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행정은 하천고수부지의 경작을 금지하고, 현황조사 및 친수공간으로의 하천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시민, 기업과 합동으로 바람직한 하천의 모습을 도출한다.
-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자체 재원(인천광역시 지원)을 이용한 주요 활동은 승기천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시민과 기업의 합동 청소대회, 승기천의 생태계, 수질, 오염원 현황 조사, 바람직한 하천상에 대한 여론조사, 수질 복원을 위한 합동 연구 및 토론회 개최 및 수질 복원방안 제시, 생태사진 전시회, 어린이백일장 개최, 승기천 주변의 공단과 연계 오염물질 배출금지 대회, 『승기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 등이 있다.

□ 이행성과

- 사업성과를 보면 승기천의 이용과 복원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승기천 주변의 경작과 오염물질의 유입 감소로 하천 수질이 향상되었다.
- 승기천 살리기 운동을 계기로 인천의 각 지역에서 굴포천 살리기, 공촌천 살리기 등 하천 살리기 운동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하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었으며, 행정에서도 하천을 방

재 개념이 아닌 친수공간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천의 복개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공감대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 과거 관청의 주도 또는 NGO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할 때와는 다르게 하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이 힘을 모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친수공간 계획이 문화·복지부문과 연계되어 지역의 친수·문화·복지공간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한다.
- 우선적으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이에 따라 유지용수가 확보되면 친수공간화를 추진한다.

(21) 인천광역시 : 어린이에게 자연에너지의 가치와 에너지 절약 알리기

□ 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가 풍족한 시기에 태어난 요즘 어린이들에게 미래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연 에너지와 관련한 교육 및 실험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목적(목표)

-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통해 무공해 자연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육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주역들의 행동양식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한다.

□ 활동 및 규모

- 시민들은 어린이들에게 직접 자연에너지 소중함과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시행하고, 교회와 단체 등을 통하여 교육에 참여한다. 기업은 자연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실험기기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제공한다. 행정은 교육청 등과 연대하여 지역 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 5학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자체 재원과 기업들의 기금지원, 인천 영재교

육센타의 실험기구 제작 지원 등으로 시행되었다.

- 5종류의 자연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실험기구를 제작하고, 자연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교재를 10,000권 제작하였다.
- 2000년 인천시내 10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에 교육 실시하였으며, 2001년 인천시 남부 교육청 산하 35개 초등학교 5학년에 교육을 실시하였다.
- 교사 및 학생대상으로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기업들과 연계하여 생태학습관과 인천대공원에 자연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전시하였다.

□ 이행성과

- 어린이 및 인천시민에게 무공해 자연에너지의 중요성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시키고, 지구 온난화 방지의 중요성과 대책을 교육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지역의 오염도 개선에 동참하여야 함과 그 가치를 인식시켰다.
- 실험을 통하여 접근함으로써 어린이와 참여자들의 관심 유도가 훨씬 수월하였고, 행정(교육청)이 일정부분을 담당하므로써 보다 폭 넓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험기기와 기자재의 제작과 전시 등으로 계속해서 방문자들을 교육하고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기기의 관람 등을 통하여 시민, 행정에 알림으로써 함께하는 사회상을 정립하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NGO 및 전문가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했고,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지역의 어린이와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 에너지의 가치와 지구온난화 문제, 에너지 절약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며, 이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 보다 많은 기자재를 만들어 생태학습관 및 공원에 전시하여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 지구 온난화 문제와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실험기기의 다양화 및 지역의 자연에너지 설비 도입에 참여한다.

(22)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소비 · 생산 확산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 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의 소비가 지구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에너지의 사용은 불가피한 것이다.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한 방법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에너지의 소비 ·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또한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에너지의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소비 · 생산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였다.

□ 목적(목표)

- 에너지효율화는 경제적인 발전과 지구환경의 보호,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 소비자에게 에너지효율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효율화정책을 수립 실행하도록 권고하여 에너지효율제품의 생산 · 소비를 확산시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목표로는 첫째, 전문가의 자문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실천 방법을 수립하고 둘째,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생활에서의 에너지효율화 실천을 확산한다. 셋째, 기업으로 하여금 에너지효율,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도록 기업의 에너지효율화 노력을 격려하여 에너지효율제품의 생산을 촉구하고, 소비자에게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효율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여 에너지 효율제품의 소비 · 생산을 확산한다. 넷째,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에너지효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간 연대활동을 통해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보 교류활동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활동을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 활동 및 규모

-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확산 사업은

1994년에 시작되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소비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확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실천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에너지효율화실천운동본부의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자문활동을 해 오고 있다.

- 또한 소비자, 에너지전문가, 국내외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기관, 에너지관련 업체들이 동참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부 등 국내 정부기관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사업을 후원하였다.
-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한 조사 및 교육사업, 가전제품의 테스트를 통한 에너지효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 에너지위너상 캠페인 등과 같은 에너지효율화 확산 캠페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어졌다.

□ 이행성과

- 에너지효율상품 생산·소비 확대 합의식은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의 전환을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이 협력을 한 것으로 에너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여 에너지효율화 방안을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모색하도록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것은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에너지효율화 운동을 단체 중심이나 소비자계층만의 노력에 머물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의 정책적, 실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 에너지위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 생산을 위해 민간단체와 언론, 정부가 함께 주도하였고,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노력에 기업의 참여를 촉구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에너지효율 제품을 생산하도록 격려했기에 의미가 크다. 이 캠페인은 국제기구인 UN ESCAP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한다. 에너지위너 캠페인은 현재 UN ESCAP에 의해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의 소비자단체들에게 민간이 주도한 에너지효율화 실천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화 운동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에너지위너 시상식에 아시아지역 11개국의 민간 및 정부 지도자들을 참석하도록 하여 에너지위너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였다.
- 1996년 5월 소비자에게 에너지절약 실천 정보 및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환경친화형 소비생활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들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실천 감시단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시단 구성원들은 소비자이자 감시자로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생활속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 생활을 실천

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다. 감시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실천하는 소비자로서 바로 서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녹색에너지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그 사업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뛰어나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나라의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개하게 되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녹색조명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여 많은 아파트가 녹색조명으로 개체하는 성과가 있었다.
- UN ESCAP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4회 개최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을 위한 정보 교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도에 본 모임과 UN ESCAP이 공동으로 개최한 『에너지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소비전략을 위한 아시아 지역 포럼』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지난 2001년 11월 프롬펜에서 열린 2002년 세계 지구정상회의(WSSD) 준비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소비자모임은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효율제품을 생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에게는 에너지효율제도 적용 확대를 촉구해 왔다. 그 결과 필요성을 제기한 몇몇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화가 이루어졌으며 에너지효율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소비자, 기업,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비패턴을 변화하여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여야 하고, 정부는 에너지효율화정책, 친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체계에서의 친환경적인 시스템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국민(소비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기술, 친환경적 기술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도록 격려하며,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수립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소비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효율화 실천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기업의 에너지효율 제품의 생산을 계속

촉구하고, 소비자의 에너지효율화 실천 확산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효율화 확산을 위해 'Factor 4' 개념을 한국에 맞게 정착화시켜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화에 대한 연구 활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23)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구축 사례

□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은 1995년 종량제 실시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했으나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는 연간 679만 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의 39%를 차지하고 매년 8%정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일회용품 사용의 일상화로 자원낭비의 생활양식이 확산되고 국민의 환경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특히 이들 포장쓰레기는 매립과 소각처리시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을 발생시켜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결과가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밝혀져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또한 전통적으로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음식이 특성인 한국의 식문화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25%로 연간 471만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처리비용이 15조원에 이르고 있었다.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에 반입되어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켜서 급기야는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어 음식물쓰레기의 대란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와 부지 선정의 어려움도 폐기물 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으로 건강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쓰레기문제가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목적(목표)

-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 환경, 시민, 여성 등 276개 단체가 연계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였다.

- ‘쓰레기’를 핵심적인 사회 문제화하여 해결방안 및 정책을 개발하고, 단일 환경사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연대들을 마련한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시민단체간 협조관계의 정착 및 쓰레기 감량을 통한 정부예산 절감효과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국 276개 단체가 연계활동을 한다.
- 또한 1회용품·포장폐기물 저감 운동,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운동, 생활유해폐기물 적정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각각의 분야별로 목적과 더욱 세분화된 목표를 세웠다.

□ 활동 및 규모

- 주요 사안별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276개 단체가 분과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교육, 실태조사, 감시활동, 캠페인,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간예산은 20억이며, 5억 8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 주요 활동으로는 첫번째 1회용품·포장폐기물 저감 운동으로 1회용품 안쓰는 패스트푸드점 선정, 1회용 봉토 안쓰기 제도화, 그린 오피스·캠퍼스, 플라스틱·합성수지 사용 저감운동, 환경월드컵 등이 있으며, 두번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운동으로 도농간 음식물 자매결연 활동(Food Chain), 지자체의 음식물 처리실태 조사, 시민홍보활동, 환경음식점 발굴,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민관공동협력활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폐형광등 적정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서울시 노원 소각장의 수은배출 계수가 선진국의 1.5배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경기개발연구원)가 발표된 이후 서울시에 폐형광등, 폐건전지의 분리수거를 요구하고, 2000년부터 서울, 울산, 인천, 광주 지역 7개 단체가 폐형광등 분리수거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이행성과

- 쓰레기라는 단일 환경사안에 대해 전국 276개의 환경·사회·소비자·여성 단체가 연대들을 마련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방만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포장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장 쓰레기 등 쓰레기 관련 현안을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부각시켰고, 특히 쇼핑봉투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1회용품 관련법 강화 및 시행을 촉

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사회적인 예산절감효과와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하여 가장 성공적인 연대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4년 활동을 통한 사회적, 국가적, 경제적 성과를 보면, 일회용품(쇼핑보증금 제등) 줄이기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 연 3,000여 억원 국고를 절약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쓰레기줄이기 시민실천의식 확산으로 사회적 부가가치와 효과를 높이고, 일회용품 안쓰는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으로 한국국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사회회적 갈등 요인을 중재를 통해 해소시켰으며, ‘공공의 선’을 위한 전체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제시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산업 육성 운동을 통해서 자원 절약을 절감하여 경제적 상승효과를 가져왔으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로 실업자 고용촉진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비닐류의 분리배출 방안제시 제도 마련 촉구를 위한 캠페인과 『1회용품 안쓰는 패스트푸드점』의 전국적인 확산과 1회용품 규제제도의 개선요구, 국제연대 활동을 통한 쓰레기 운동의 강화로 포장쓰레기를 줄인다.
- 2002년 환경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경기장 쓰레기 저감과 1회용품 안쓰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이 활동에는 공공장소의 쓰레기 관리실태에 대한 입체적인 모니터링과 숙박업소,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그리고 공공장소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등이 속한다.
- 음식물쓰레기의 20% 감량운동으로는 학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 단독주택의 자원화 실현을 위한 모델사례 개발,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위한 활동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실시한다.
- 폐형광등 분리수거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단체들 및 유관단체들과 협조하여 강력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고, 주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여, 그 곳을 거점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24) 여성환경연대 : 녹색가게운동

□ 배경 및 필요성

- '91년, 맹독성 농약과 화학비료가 땅의 생태계적 질서를 파괴하고 농작물을 크게 오염시킨다는 사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생활협동운동(유기농산물 직거래)을 벌이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토의 황폐화와 우리식탁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한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시작된 지역의 공동체모임은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교육의 장이 되었고, 이웃을 만나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기회가 된다.

□ 목적(목표)

- 유기농산물직거래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맹독성 농약으로 오염된 농토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섬과 동시에 도시에서 소비자 공동체를 형성하여 소비자들끼리의 생활협동운동을 전개함으로 농촌과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공존하게 한다.
-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소비의식과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환경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 활동 및 규모

- '91년 6월에서 '92년 12월에는 유기농 생산자와의 만남과 봄, 가을의 정기적인 교육(예:소비자대학)을 통하여 과천지역에 11개의 공동체(회원 60여명)가 구성되었다.
- '93년 1월에서 12월에는 과천지역에서 공동체 수 16개와 회원 수 6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환경의식이 높아진 몇몇 공동체는 '자원재활용 캠페인'이라는 환경활동을 전개하였다.
- 주요활동으로는 녹색가게운동, 장바구니 전시회, 이용자와 함께 하는 재활용 패션쇼, 추억이 담긴 생활물품전 등이 있다.

□ 이행성과

- 1995년 2월, 제1회 '학교 어린이 알뜰장'을 과천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96. 2

월 2회는 관문초등학교, '97년 4월 3회는 청계초등학교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학교 어린이 알뜰장'에는 각 초등학교 전학년이 참여하였는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에게 재활용·재사용 생활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97년 9월에는 세계마당극 행사기간 중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알뜰장을 개최하여 근면절약하는 친환경의식을 폭넓게 확산하였다. 알뜰시장의 성황은 지역주민들에게 재활용상설매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하여 회원들과 함께 시에 공간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회관 내에 무상의 상설 '알뜰매장'이 탄생되었다.
- 알뜰매장 개장 1년 뒤 한국은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고 알뜰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가게확장이 불가피해짐과 동시에 어려워진 한국경제 변화와 맞물려 알뜰매장에서의 중고물품 교환해서 재사용하기 운동은 우리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시의 적절한 환경운동으로 평가받았다.
- '98. 3 서울YMCA에서 연대활동을 제의함으로서 '알뜰매장'이라는 공간명칭을 '녹색가게'로 바꾸고 전국을 대상으로 '녹색가게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현재 과천녹색가게는 5평에서 25평으로 확장 이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녹색가게가 자원봉사자들(약 1,300명)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운영되고 있다.

□ 향후 추진계획

- 녹색가게는 재사용·재활용문화 촉진을 도모하는 지역주민 교류센터, 환경센터로서 지역강좌, 환경관련 모니터 활동, 생태적 대안사회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태기행, 청소년 환경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강좌 등을 개최하여 환경의식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 친환경 지역강좌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수선하여 다시 입는 수선 강좌, 양복·한복감을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강좌, 폐품을 이용한 유아용교구 만들기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공원 모니터 활동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원을 제안하고 재구성하는 일과 생태적으로 모범적인 대안사회를 탐방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모색하는 일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지역 만들기과 생활문화의 변화 및 정착을 이루고자 한다.

(25)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지방의제21 전국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지방의제21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Agenda 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 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작성·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산광역시가 제일 먼저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으며, 1997년 4월에는 환경부에서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보급하고 순회설명회를 갖음으로서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21'의 작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 지방의제21이 자신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자신의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지역사회로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의제21의 전국적 활성화를 권장하고 추진체계 등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국단위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목적(목표)

- 전국협의회는 지방의제21 추진현황 파악 및 분석하여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하고, 지방의제21 추진사례의 정보교류와 지방의제21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교육을 통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 및 규모

- 광역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2000년 6월 16일 전국단위 지방의제21 네트워크인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창립하였다.
- 전국협의회는 3인의 공동회장과 5인의 부회장, 2인의 감사를 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5명의 고문과 20명의 자문위원들이 전국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언을 하고 있다. 공동회장과 부회장은 광역의제21 추진기구 대표자로 구성되었다.
- 전국협의회는 지방의제21전국대회, 지방의제21정책포럼, 여성환경포럼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월드컵을 위한 워크숍 및 한·일 지방의제21 워크숍 등 지방의제21 관련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 약 160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지방의제21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공

모사업(10억 13백만원), 소식지발간(1억 8천만원), 토론회 및 캠페인(2억 9천4백만원), 기타사업(15억 9천6백만원) 등으로 소요되었다.

- 2001년도 전국의 지방의제21 추진 주요 시범 실천사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생활주변 동네산 살리기 프로그램 개발(생태보전시민모임), 고향으로 기억되는 녹색마을 만들기(관악주민연대), 푸른서울만들기를 위한 교회 녹화사업(기독교환경운동연대)등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는 3개동 주민자치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사업(수원 KYC), 시민참여를 통한 생태도시 만들기(분당 환경시민모임), 광교산 보전 네트워크 구성과 땅 한평갓기 운동(수원 환경운동센터), 오이도 생태문화탐방지 조성을 위한 마을의제21 작성 및 실천(시흥 환경운동연합), 주민자치센터의 시민참여 시범사업(군포 환경자치시민회)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서는 아이와 함께 가꾸는 야생화 동산(신모라 창조 어머니 모임), 해운대 장산 입구 장미호수 꽃동산 조성(해운대장산 장미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모임), 시민이 만드는 온천천의 미래(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번째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에는 광주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가꾸기 시민운동(광주녹색교통), 영산강수계 상·하류지역 물분쟁 극복과 공동협력방안 제시(주암호보전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천살리기 운동(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이 있다. 다섯 번째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는 주민이 만들어 가는 녹색아파트사업(대전YMCA), 환경(에코) 가족 운동(대전YWCA), 살맛나는 나눔공동체를 위한 솔밭장터(대전 여민회), 지역통화운동(한밭 레츠(LETS)) 등을 추진한다.

□ 이행성과

- 1999년 제1회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 전체 워크숍을 통해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전국 네트워크를 설립을 논의하였으며, 2000년, 2001년 2차례의 지방의제21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 400여명이 함께 모여 NCSD와 지방의제21의 추진전략을 논의하며 지방의제21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각 지역의 지방의제21 정보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지방의제21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각 영역별/분야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21세기 지속가능발전전략 마련 세미나(2000), 전국환경포럼2000, 지방의제21 정책포럼(2001년, 5회)를 개최하여 평균 100여명의 지방의제21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나라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지방의제21의 시민참

여 강화방안, 2002년 월드컵의 환경친화적 개최 방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PCSD 추진현황과 LCSO 구성방안 모색,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지방의제21 활성화 등을 논의하여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전국협의회는 ICLEI에서 전세계적으로 실시한 지방의제21 설문조사를 위탁받아 실시함으로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추진현황에 대한 최초의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01년 ‘지방의제21 추진현황분석 및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에게 Guide-Line을 제시하였다.
- 전국협의회는 지방의제21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www.la21.or.kr)를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이 지방의제21에 대한 최신정보 및 각종자료를 구하기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제21을 모르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지방의제21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의제21 전국편람을 매년 제작하여 지방의제21 추진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전국협의회는 전국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1세기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동개최 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월드컵으로 개최되도록 월드컵개최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월드컵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활동하고 있다.
- 각 지역의 지방의제21 사업은 각기 자기 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수행기관이 한 개의 단체나 민간단체들간의 연대기구로서, 아직은 행정기관의 주체적 참여가 부족하고, 지역주민들 또한 일회적 참여 또는 동원형 수준에 머무르고있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현재의 주요 실천사업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주민과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과 자기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바로알기 위한 생태체험 학습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학습과 환경교육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이나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등의 분야에서는 현재로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사업은 행정기관과의 협력도 비교적 용이하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먼저 성과도출이 가능했다.

- 지방의제21 전국협회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제21 작성 및 추진이 활성화되었다. 2001년 6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33개 기초자치단체 총 149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으며, 4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중에 있어 약 80%에 이르는 197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 6월에는 지방의제21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중 130개 자치단체만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사무국도 36개소밖에 없었으나 2001년 6월에는 160개 자치단체 추진기구, 56개 독립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제21 관련 예산도 1998년 1865백만원, 1999년 4483백만원, 2000년 6507백만원, 2001년 7902백만원으로 1998년에서 2001년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의제21전국협회는 지방의제21의 전국 네트워크로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도록 지원전략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WSSD회의의 체계적인 참여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WSSD회의를 계기로 지방CSD 도입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 WSSD회의와 지방의제21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간 우수사례, 사업추진방법, 문제해결방안 등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정보수집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의제21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제21의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 작업을 촉진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 특히, 2002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투명한 Governance를 실현하도록 주요Guide-line을 제시할 예정이다.
- 지방의제21 차원의 WSSD회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비와 참여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세계적 동향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사례를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정책포럼, 특성화 워크숍 등 꾸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관계자의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참여방안을 확대할 것이다.
-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전국조직으로 ICLEI, Earth Council, IULA

등 지방의제21 관련 국제기구와의 연대 및 교류를 통해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동향 및 자료를 수집하여 각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26) 환경보전협회 : 환경보전홍보교육관 운영을 통한 어린이 환경보전 교육 프로그램

□ 배경 및 필요성

- 1986년 6월 5일 설립 당시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해결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더욱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고 또한 환경보전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습관 정착유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 또한 일회성이고 단편적인 홍보·교육방법을 탈피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적용·운영함으로써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보전실천 의지를 효율적으로 시민(특히 어린이)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중심이념에 부합된다.

□ 목적(목표)

-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습관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조기에 심어주어 미래의 훌륭한 환경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 어린이 전문 환경보전실천 교육사업,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민간환경단체 및 관련기관, 기업체에 대한 각종 환경정보자료 보급사업, 각종 환경행사에 대한 환경교육자료 무료대여, 사진·비디오·환경서적(기술서적, 일반서적등) 무료열람 및 대여, 기타 환경보전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시행한다.

□ 활동 및 규모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1978년 10월 6일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 비영리 법정법인체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환경요원 법정교

육, 대국민홍보사업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및 국가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재 본회(3부 8과), 11개지회(각2과), 전국 6,200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 홍보교육관은 어린이 환경보전 실천교육, 환경보전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환경자료 및 서적 무료 대여·열람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6,000에서 7,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연 예산액은 인건비, 유지보수비, 임차료 등 약 5천만원이며 전액 자체충당한다.

□ 이행성과

- 2001년도에는 90개 유치원 3,726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관 관람, 환경만화 영화상영, 환경교구 선택활동 등의 어린이 환경보전실천 교육을 하였고, 또한 31개 업체에서 사진·비디오 등의 자료를 625개 대여하였으며, 총 5,099명의 관람객이 홍보교육관을 방문하였다.
- 또한 현재 유치원에서의 어린이환경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와 교육생들의 환경의식 조사를 통하여 교육방향에 대한 개선 및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더 효과적인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01년 3월 23일에서 12월 13일까지 환경보전 홍보 교육관 어린이환경교육에 참가한 유치원교사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홍보 교육관의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나타났다.
- 교육 참가신청의 수시 접수를 통한 연중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폭 넓은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연계한 친 환경적인 생활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설물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어린이들의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을 유발시키며, 일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한 환경보전 교육프로그램 개설 유도 및 교육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연중운영으로 타 단체 단발성 행사 이후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홍보로 일선 수십개의 유치원에 대한 “환경견학” 일정을 신설토록 유도하였다.
- 교육중 재미있고 다양한 환경게임 교구를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자연스런 환경보전실천의식을 높이며, 일선교사들에 대한 환경교구 제작 및 활용방법 지도로 전문성 있는 현장 환경교사 육성에 기여한다.

□ 향후 추진계획

- 교육 참가신청의 수시 접수를 통한 연중 교육시스템운영으로 폭 넓은 환경 교육의 기회제공 및 다양하고 흥미 있는 교육시설물과 프로그램구성으로 교육효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연중으로 어린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로인해 전문화된 교사의 지도에 의한 학습효율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환경교습방법 및 교육기자재를 구축한다.
- 어린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민간환경단체 및 관련기관과 기업체에 대한 각종 환경정보자료를 제공하며, 환경기술서적 및 교양서적 소장과 무료열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 환경교육의 소기 목적은 충분한 투자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갖추어 졌을 때 달성된다. 특히 환경보전교육은 일반 지식교육이 아닌 국민생활교육으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 홍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지원이나 업체의 후원이 요구되어 진다.

(27) 환경정의시민연대 : 하천, 그리고 삶의 공간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를 시작으로 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하천은 각종 오염원의 유입과 상류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직선화 및 콘크리트로 만든 호안을 사용하고 도로 및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아스팔트로 덮어버림으로써 친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다행히도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수자원의 문제는 인류 공통의 현안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 하천 보전 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 이러한 지역·국가간의 노력과 실천운동인 지역하천 살리기 운동은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의 구체적인 구상과 함께 새로운 분쟁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물의 이용과 배분을 둘러싼 물 분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가 필요하다.

□ 목적(목표)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지역 하천 살리기 운동

은 21세기 새로운 분쟁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물의 이용과 배분을 둘러싼 물 분쟁에 대한 미래적 구상을 추진하는 일이 된다.

- 지천별 수질오염 원인과 환경적, 지역적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하천 만들기 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하천 살리기 운동이 여타 지역의 하천 살리기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하천 살리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을 문화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써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동북아 주요국가인 한국과 일본 등에서 양국의 지역보전 사례 중 모범 사례를 발굴·교류함으로써 환경보전의 국가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이러한 사례와 경험들은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등과 같은 인접 국가에 환경문제 해결의 모범적 모델로 제시한다.

□ 활동 및 규모

- 환경정의시민연대 : 각 지역의 하천 지키기 운동이 주민 주도의 지역 환경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 그룹과 지자체, 정부 등과 올바른 해결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내 각 지역과 국가간의 지역의 환경보전 운동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 토지정의 운동 등이 있으며 2002년 현재 회원 수는 1700명이며 예산은 8억 원이다.
- 중랑천 사람들 : 2001년 노원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랑천 사람들’은 중랑천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중랑천에서 시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 조직으로 중랑천을 지키고 보전하는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활동내용을 보면 수질개선 시민운동과 수질·식생조사 및 식목일 식수행사, 하천 지킴이단 활동과 쥐불놀이, 그림그리기 대회등 문화행사, 중랑천 인간띠 잇기 행사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약 3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 정부의 팔당특별대책등 한강 보전 정책에 맞서 싸우던 지역주민 조직으로써 정부와 NGO와의 오랜 갈등과 논의 끝에 지역 환경의 중요성을 이제는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지역 지킴이로써 변모한 한강 상류 지역의 운동 단체이다. 지역 곳곳에서 수질오염 감시 활동과 지역 주민

계몽 운동, 청소년 및 주민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약 3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 수원환경운동센터 : 94년 5월에 "우리의 삶을 맑고 푸르게"를 모토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수원 및 인근지역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로 수원천 살리기 운동을 통해 수원천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수원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 및 하천 교류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수원천 복개반대 및 자연형하천 복원 운동, 팔달산 관통터널 저지운동, 소각장 반대운동, 대기오염도 조사, 각종 교육사업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약 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 노원 놀이마당 사랑회 :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지역 문화단체로 6년 동안 총42회 의 국악 및 민속놀이를 공연하고 있다. 하천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천공간에 활력소를 제공한다. 매회 7명 정도가 행사에 참가하며 등록된 회원 수는 67명이다.
- 그외 '건강한 도립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안성천 살리기 주민모임', '연곡천 지키기 운동(강릉경실련)', '온천천 살리기 운동(부산 연제공동체)', '무심천 살리기 운동(청주환경운동연합)', '부천 경실련, 일본의 야마미치 쇼조(전국수환경 교류회 사무국장), 가와키미 아키라(하천의 모임 나바리 사무국장) 등이 있다.

□ 이행성과

- 하천 살리기 운동은 지역간 정보 교류 및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의 하천 살리기 운동들과 네트워크화를 위한 모임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국가간의 하천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로 인해 각 지역의 모범적인 하천 보전사례 및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을 위한 노력 등을 배우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회를 통한 교류를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와 지형, 사회, 문화적으로 비슷한 일본의 모범적인 하천 보전 사례를 배우기 위해 한·일간 하천 교류 사업을 진행하여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양국의 시민, NGO, 지자체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모범사례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성과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주민주도의 하천 살리기 운동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단순히 환경보전의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 사회, 문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우선,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하천을 복원하여 도심 속의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거액의 재원이 필요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 및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하천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천을 정화하고 복원하여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충분히 수행해 낼 것이다.

□ 향후 추진계획

- 2001년엔 위와 같은 공동의 노력과 운동의 성과물을 정리하여 하천 교육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하천 상중하류 교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2년 현재 매뉴얼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 2002년에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하천보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하천보전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며, 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유역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운동을 전개하여 장기적인 하천보전 운동의 틀을 마련한다. 더불어 미래세대들을 하천지킴이로써 성장시키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하천교육 프로그램을 내놓는 해가 되도록 하며 국내 하천보전 운동의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본의 선진적인 운동 사례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1.4 국가추진목표(NPT)

국가추진목표인 NPT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지자체[광주시(1), 서울시(2)], 여성환경연대, 한국자원재생공사하여 총 다섯 곳에서 5개의 작품을 응모하였다.

(1) 광주광역시 :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방향 설정이 어

럽고 구체적인 환경교육의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구체화를 위한 자료가 적고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하여 교육할 만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푸른 광주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목적(목표)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대상별로 수준과 실정에 적합한 ESSD 교육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 ESSD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에 광주광역시의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환경 자원 및 친환경적인 환경 정책을 반영한다.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대상별로 수준과 실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ESSD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치는 연도별 누계임)

구 분	지 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ESSD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치원용,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공무원용, 기업체용, 여성용, 일반시민용 ESSD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	0개	2개	4개	6개	8개
ESSD 교육 자료 개발	유치원용,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공무원용, 기업체용, 여성용, 일반시민용 ESSD 교육 자료 개발 수	0개	2개	4개	6개	8개
ESSD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가 학교수	유치원용,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ESSD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가 학교 수	0개	0개	20개	40개	60개
ESSD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가 기관/단체 수	공무원용, 기업체용, 여성용, 일반시민용 ESSD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가 기관/단체 수	0개	0개	10개	20개	30개

□ 이행전략 및 계획

- 이행주체는 시민, 기업, 행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시민은 1992년 지구정상회담 및 UN의 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ESSD 이념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 등에 적극 협조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일반시민 대상 ESSD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에 광주광역시의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

- 자원 및 친환경적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ESSD 이념 교육 기회에 적극 참여한다.
- 기업은 1992년 지구정상회담 및 UN의 환경교육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기업체 대상 ESSD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에 적극 협조하며,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체 대상 ESSD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에 기업체 활동의 우수 사례 및 친환경적인 환경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매월 ‘환경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의식을 고취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ESSD 이념 교육 기회에 적극 참여한다.
 - 행정은 광주광역시내 각급 학교의 실행 가능한 환경 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학교별로 실정에 적합한 ESSD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ESSD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학교별 및 수준별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조 및 활동한다. 또한, ESSD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에 광주광역시의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환경 자원 및 친환경적인 정책을 반영하여 수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활동한다.

(2) 서울시 : 미세먼지 저감대책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의 '95년 미세먼지 오염도는 $78\mu\text{g}/\text{m}^3$ 으로 높았으나, 도로청소 강화·자동차배출가스 단속·경유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그 동안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65\mu\text{g}/\text{m}^3$ 으로서 서울시환경기준($60\mu\text{g}/\text{m}^3$)은 초과하지만 국가환경기준($70\mu\text{g}/\text{m}^3$) 보다는 낮았다.
- 최근 IMF 이후 경제여건이 호전됨으로 인하여 급격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건축활동(공사장 등)의 증가, 기후조건 악화(황사 증가, 건조한 기상조건) 등으로 먼지증가 요인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목적(목표)

-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먼지오염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활동 및 규모

- 도로 물청소를 대폭 확대하여 도로먼지를 저감시킨다. 세부 활동으로는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 보도 청소 강화로 도로변 먼지 저감, 도로중앙분리대·가로화단 먼지저감 등이 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경유차량 중점), CNG버스 보급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시행, 먼지발생공사장 및 사업장 관리 강화, 특별관리공사장 등 건설공사장 관리 강화, 먼지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단속을 한다.
- 생활주변 먼지저감에는 소규모 공사장 관리, 공터 및 나대지 관리,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 먼지저감 교육·홍보로는 먼지발생 공사장 관계자교육, 먼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기대성과 및 효과

- 도로에 침착되어 있는 먼지가 자동차 통행에 의해 재비산되는 것을 억제하여 시정거리를 늘리고 청정공기의 유지를 통해 시민의 체감 오염도를 개선한다.
- 호흡기계통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오염도를 2007년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한다.

(3) 서울시 : 물 절약 시민운동 추진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83mm로 세계 평균인 973mm보다 1.3배 정도 많으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2,705m³/년으로 세계평균 26,800m³/년의 11%에 불과하며, 유엔 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는 한국을 물 부족국가군으로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 : 1000 ~ 1,700m³) 분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2001년에는 전국 각지방에서 90년만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식수부족, 농업용수 부족,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부족하다는 것과 물 절약의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물 수요의 대부분이 가정용(약 70%)이며, 한강과 팔

당담에서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물 부족을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의 가장 큰 수요지역인 서울에서의 물 절약은 국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물 수요를 줄임으로써 한강 상류에 추가적인 댐 건설의 필요를 원천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목적(목표)

- 서울시에서는 시민운동추진을 통해 2000년 현재의 1인당 1일 물 소비량 291ℓ를 2007년까지 1인당 1일 물 소비량을 서울의제21에서 제시하고 있는 243ℓ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다. 2007년까지 서울시 물 소비량을 목표치까지 줄인다면 연간 1억8천만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한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청평댐의 저수량과 같은 엄청난 양으로 물 절약만으로 댐 하나를 건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물 절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직접적인 비용만 해도 수돗물 생산비용(662원/㎥)과 하수처리비용(45원/㎥) 절감 등을 통해 연간 2,01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댐의 추가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활동 및 규모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시·NGO·기업 3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조례로 만든 3자 파트너십 기구이다. 각 부문별 대표·전문가 등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기업 실천단을 통한 실천활동과 아울러 대시민 환경교육·홍보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물 절약 시민운동을 총괄하고 지휘하며 물절약 시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서는 물 절약 시민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행·재정적 지원함은 물론이고 공무원실천단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소속기관 및 각 가정에서의 물 절약 실천을 주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의제 21 관련 공무원 2,500여명으로 구성된다.
- 다수 시민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시민·환경단

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실행력 및 파급력을 확보한다. 물 저축통장의 보급, 대 시민 물 절약 캠페인, 물 절약 실천 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 시행 등 역할을 수행한다. 물 절약 범국민운동 본부 소속 단체 및 물 아껴쓰기 중앙회 등 물 절약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단체이다.

- 자치구 시민실천단은 서울의제 21의 실질적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조직한 시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조직으로 약 5,0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거주지 주변 작은산 살리기, 대기오염 저감, 하천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물 절약 시민운동의 중심 주체 및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1인당 10가구 이상의 물 절약 주부서명 확보 및 물 저축통장의 보급·작성 등을 한다.
- 기업실천단은 서울의제 21의 기업단위 실천을 위해 서울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중심으로 약 30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친환경적 경영 프로그램 실천 및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에 공동 협력하며, 기업내 중수도·절수기 설치 등 시설적 측면과 아울러 교육·홍보를 통해 소속 임·직원의 물 절약 생활화를 장려한다.

□ 이행전략 및 계획

- 서울시는 서울시·NGO·기업 3자의 파트너쉽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회의와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물에 대한 시민의식 및 절약형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 절약 시민운동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또한 물 절약 워크숍과 인터넷을 통한 물 절약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관련단체와 주부, 시민들의 활발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인 물 절약 시민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활발한 자문회의, 워크숍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효과적인 물 절약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대상그룹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가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과 잠재적 교육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3학년생을 물 절약시민운동 주체로 육성키로 하였다.
- 물 절약시민운동 주체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주부들에게는 물 절약 저축통장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는 물 절약일기장을 제작하여 나눠주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물 절약의 중요성과 물 절약 일기장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물 저축통장과 물 절약일기장에는 물과 관련된 토막상식, 속담, 통계자료도 함께 실었다.

□ 기대성과 및 효과

- 환경·시민단체(YMCA,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주부 중심의 여성단체(YWCA, 대한주부클럽, 새마을부녀회 등)회원들이 물 절약 실천 서명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 절약을 실천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절약 관련 서울시 주요시책 등 물 절약 관련 내용을 특화해서 게재하는 등 물 절약 대시민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토록 한다. 이를 위해 환경·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 수도법 개정으로 목욕탕·숙박업소 등 물 다량 사용업소에 2002년 9월 29일까지 절수기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업소들의 절수기기 설치 수요 및 현황 등을 조사해서 기한내 설치토록 독려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련협회 등과 협의하여 절수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한편 이용자의 협조를 구하는 안내문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물 절약 관련 환경·시민단체 공모사업을 시행, 물 절약 시민의식 개선운동, 공공기관 물관리 평가, 물 기근 체험 캠프 및 Water Tour, 어린이·학생기재단 활용, 물 절약 홈페이지 운영, 1인 1컵 갖기 운동, 물관련 작품 공모전 개최, 물 절약 대시민 홍보, 물 절약 실천 종합 평가 시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4) 여성환경연대 : 녹색가계운동

□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는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였고, 가까스로 극복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치와 소비지향 문화, 일회성 낭비문화가 그대로 잔존하여 언제 또 다시 제2, 제3의 위기를 맞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이러한 과소비,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는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이에 지속적인 녹색가계운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과 지역사회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목적(목표)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리더가 되고, 새로운 소비형태의 창출자가 되어 지구환경을 지키는 실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구체적 목표로는 2010년까지 회원 수를 100명, 녹색가게 이용자 수를 1만 명으로 늘리며 녹색가게 공간과 교육장을 포함한 '지역환경센터'를 건립할 것이다. 월 1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며 주부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꾸준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200여 개 녹색가게에 발전적 내용들을 제공해주며 타 지역의 녹색가게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내 주요한 환경활동가 20여명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

□ 활동 및 규모

- 참여그룹에는 주부 자원봉사자 그룹, 청소년 자원봉사자 그룹, 이용자 그룹(어린이~노인)이 있다.
- 주부 자원봉사자 그룹은 녹색가게 봉사를 담당하며 더불어 지역환경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성장 발전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그룹은 녹색가게 봉사 및 교내 환경활동 참여한다. 또한 이용자 그룹은 녹색가게 이용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루며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 회원수는 현재 자원봉사자가 45명, 이용자가 3,600명이며 향후 2010년에는 자원봉사자가 100명, 이용자가 10,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예산은 현재 약 1,500만원이며, 2010년에는 약 1억원으로 증액 될 것이다.

□ 이행전략 및 계획

- 홍보전략에는 녹색가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활동에 대한 자료배포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녹색가게 내에 현수막이나 포스터 게시, 지역주민 대상의 전시회 및 작품전 개최, 지역신문을 이용한 홍보, 아파트 단지별 게시판 홍보, 각종 후원행사를 통한 홍보 등이 있다.
- 이행계획을 보면 녹색가게 운영시스템의 다양화 시도, 회원 수 확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 교육 시행, 다양한 내용의 재활용 강좌 개최(매년 2~3회), 환경친화적인 캠페인 개최와 지역 네트워크 조직, 전국 녹색가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환경행사 진행 등을 들 수 있다.
- 재원은 후원금과 시보조금이 각각 전체의 15%, 회원회비가 20%, 나머지 재원은 공무사업비로 조달한다.

□ 기대성과 및 효과

- 환경운동의 중심 주체인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지역의 리더로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발생시키며 전자와 후자가 향후 친환경적 변화의 주역들로 지역 환경, 더 나아가 친환경적 삶의 주체자가 되게 한다.
-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과 실천적 삶을 유도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으로 의류수선강좌, 조각천을 이용한 모자만들기 강좌, 폐품을 이용한 생활소품만들기 등의 지역 재활용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직접 만드는 수고를 통해 재활용·재사용물품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며 옛 것, 싫증난 것을 다시 고쳐 사용하는 친환경적 생활양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5) 한국자원재생공사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구축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폐기물문제는 국민보건 및 생활환경과 직결되어 있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여부가 쾌적한 환경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건이 된다.
- 우리 나라의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유해물질 방류·방치 등의 불법처리로 전 국토의 환경오염은 물론 폐기물의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 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을 천명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 및 폐기물 적정처리장치로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 목적(목표)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이 구현되면, 전국의 모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폐기물

재자원화율의 증가와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유해물질 방류·방치 등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동 시스템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여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 활동 및 규모

- 환경부(국가)에서는 지정폐기물 관련 각종 현황 통계분석과 GIS를 활용한 지역별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적법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폐기물 정책 수립 및 적법처리시스템 운영여건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개정한다.
- 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업체의 기초정보 신규 및 변경 등록, 사고인계정보 처리, 관할업체의 지도 및 단속 후 결과등록, 강화된 처리증명 해당 업체의 인계정보 확인 및 등록 등을 시행한다.
- 시스템 사용업체(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사용업체의 인계정보 등록, 오류인계정보 수정, 관리대장·실적보고 확인 및 등록, 배출자의 폐기물 인계 및 처리과정 확인감시 등을 한다.
- 전산처리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법령 개정시 법령 기초정보 DB를 갱신하고, 시스템 사용자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전산처리기구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인계정보 등록 마감처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각종 민원처리 등의 작업을 한다.

□ 이행전략 및 계획

-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까지 전국의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목표	1단계 (2000~2002)	2단계 (2003~2004)	3단계 (2005~2006)
2006년까지 전국 사업장폐기물 대상 확대 시스템 구축	폐기물적법 처리입증정보 시스템구축 (시범운영 포함)	Dual system 도입 및 전체 지정폐기물 대상 시스템 구축	전체 사업장폐기물 대상 시스템 구축

○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억 원)

세부 추진과제	2000-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재원조달방안
폐기물적법처리입증 정보시스템 구축완료	11.5					11.5	정보화촉진기금 (기 집행 완료)
Dual system 도입		11.91				11.91	환경개선특별회계
전 지정폐기물 대상 확대 시스템 구축		12				12	환경개선특별회계
전 사업장폐기물 대상 확대 시스템 구축				12		12	환경개선특별회계
합 계	11.5	23.91		12		47.41	

□ 기대성과

- 행정기관(환경부·지방환경청 등)은 폐기물 인계서 접수, 취합, 대조확인 업무 경감 및 비용 절감, 폐기물 배출현황과 처리과정의 실시간 감독이 가능하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 분석·검토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 인허가시에는 정책활용 정보획득이 쉽고,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방지가 가능하다.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인계서 작성, 실적보고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배출 폐기물의 적정·투명한 처리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폐기물 투명성 확보 및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 인계서 작성 전·후 비교표

인계서 작성시	전자 인계정보
- 수작업 전표작성 · 보관 · 발송	- 인터넷을 통한 입력으로 대체
- 인계서 작성 · 비교 · 검토의 어려움	- 실시간 On-line 비교 · 검토
- 폐기물 불법처리 · 방치 개연성 상존	- 전자정보를 자동 전자취급 및 관리 폐기물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므로 적정 · 투명처리 강화
- 대장관리 및 서면 실적보고 업무 과다	- 각종 대장작성 및 실적보고 자동생성
- 과다한 행정력 및 비용소모	- 행정업무 최소화 및 비용절감

□ 기대효과

- 폐기물관리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전국의 폐기물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가 확립된다.
- 효율적인 폐기물관리업무 수행 및 불법투기 예방으로 환경오염이 예방된다.
- 폐기물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며, 전산처리기구로부터 지도단속 정보를 전송받아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폐기물 처리능력을 상실한 배출·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추출·관리함으로서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량이 82% 감소 및 처리비용이 약 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수 15만개 기준시)

2.. 대국민 인식증진 방안

2.1 개요

2002년 개최되는 WSSD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관련 이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지금까지의 비지속적인 인식과 생활패턴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데 홍보전략 수립의 목적이 있다.⁴⁷⁾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부처마저도 환경이라는 국한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환경만을 내세우는 정책과 방안은 부처간의 협력은 물론, 대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와 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 이들 세 가지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며 더구나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WSSD는 다양한 주요그룹들의

47) 박기순 외(2001)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전략에 대해 “일회성이나 일과성의 PR활동이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인 PR 효과나 목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공중의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군사작전처럼 수행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PR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정부 홍보가 일반 기업들의 PR활동과 다른 특징은 목표지향성, 시간제한성, 쌍방커뮤니케이션, 일반국민을 겨냥, 공익성, 학습성을 들 수 있다.

참여를 전제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국한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 경제,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지속가능발전으로의 개념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포괄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목적, 목표,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행동 주체인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협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의 기본방향은 현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에 적용하고자 한다. 즉, 과거 10년 간 우리 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진행사항과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10년의 예측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에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 경제, 사회적인 주요 지표를 활용한다. 국민의 인식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계측할 수 있는 조사·평가의 후속조치도 함께 계획하여 가정이나 개인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얼마만큼 이바지하는 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제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WSSD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에서 지금의 국내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제를 우선 실천 대상으로 설정한다. 선정된 대상별로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지에 대해 홍보전략을 수립한다. 이 때 중요한 한계 요인은 시간과 자금이다.

최종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제의 이행과정과 성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2 추진 방법

정부에 의한 홍보는 일반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쌍방향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홍보는 방송매체와 관련 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등을 매체로 하여 이루어졌다(박기순 외, 2001). 일방향적인 밀어붙이기식 홍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힘들며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내용에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실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홍보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투자비용과 홍보기간은 홍보전략의 전제조건이다.

아무리 좋은 홍보전략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투자비용이 부족하다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투자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으나 기대성과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홍보기간은 투자비용과 연계하여 정해질 수도 있으나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외생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WSSD 홍보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투자비용은 기대성과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고려하지 않았다. 홍보기간은 WSSD 본회의가 폐막되는 9월까지로 한정하였다.

WSSD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홍보대상은 전국민이지만 대상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홍보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대성과에 따라서도 홍보대상을 개인, 가정, 기업,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홍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나 본 홍보전략에서는 학교라는 조직 규율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초중고생, 이들을 포함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이버계층 그리고 이들 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TV 혹은 라디오 등인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일반 국민, 총 세 집단으로 홍보대상을 구분하였다.

2.3 홍보전략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하는 홍보대상에게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의제의 실천을 위해 홍보한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와 이해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홍보전략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되어야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 정립을 위한 홍보에 치중한다. 이 때, 한국 사회에 적용하였을 때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들을 총체적으로 지적한다. 또한 WSSD의 목적을 함께 설명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동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협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제고를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지정한 저해 인자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룬다. 인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팜플렛이나 리플렛 등의 책자에서의 홍보 순서는 환경과 관련한 인자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인자 선정에서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陸海空의 개념에서 접근한다. 陸은 육상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海는 바다와 담수로 구분할 수 있으나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들의 협력은 담수를

대상으로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담수는 수자원 관점에서 수량과 수질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공기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한다. 주요 환경인자들의 홍보가 끝나면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경제, 사회 인자들을 홍보한다. 인자별 홍보내용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지적한 지속가능발전으로 결론지어야 한다. 이들 인자에 대한 홍보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의 지속가능발전지수를 평가하도록 한다. 평균지수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 한 예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표 IV-3. 단계별 홍보전략안>

단계	내용
1단계	-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되어야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 정립을 위한 홍보 -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 소개
2단계	- 저해 인자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룸(수치통계정보 중심으로) - 인자의 선정은 공간적으로 구분(陸: 산림, 海: 담수, 空: 대기오염)
3단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국민 협력방안을 제시

2.4 홍보방법

일반 기업들의 홍보는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방송매체, 옥외광고, 배너 광고 등에 의존하는 반면, 정부의 홍보방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대표적인 홍보방법은 일반기업들의 홍보방법을 포함하여 언론보도, 여론조사, 포스터, 성공 사례 발표회, 세미나 및 전시회, 슬로건이나 표어 공모, 팸플릿이나 리플렛 배포, 특별교육, 기획특집 방영, 각종 토론회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UN에서 권고한 포스터 및 수필 대회는 이미 개최되어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우수 이행사례인 '101가지 방법'과 국가추진목표를 공모하여 선정작업 중에 있다. WSSD의 논의동향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하여 2001

년 하반기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환경부에서는 대응전략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WSSD 관련 대국민 홍보전략의 일환이다.

8월까지 행할 수 있는 그 밖의 홍보 방법은 언론보도, 포스터, 팸플릿이나 리플렛 배포, 옥외광고, 배너광고, 슬로건이나 표어 공모, 특별교육, 기획방송 등이다.

언론보도는 정부정책이나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할 때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언론보도는 사실만을 제공해야 하므로 WSSD 준비회의 결과나 논의동향에 대한 내용만을 보도한다. 총론적인 보도내용은 외교통상부가 담당하고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언론기관들에게 WSSD 본회의의 현지취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팸플렛·리플렛의 작성에서는 배포 대상에 따라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팸플렛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선정된 포스터 및 수필, 이행사례 및 NPT 등의 내용으로 부드럽게 구성한다. 리플렛에서는 만화나 그림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요령이나 방법 등을 제시한다.

포스터, 슬로건, 표어는 단순하고 절제된 내용으로 목표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 해야 한다. 내용 역시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한 일반 대중에게 공모함으로써 광범위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포스터는 환경관련 행사, 월드컵, 지자체선거, 학교 및 관공서 안내판, 지하철 광고(서울, 부산, 인천, 대구 지하철 등)판을 이용한다.

인터넷광고는 우리 나라와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에서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며, 특히 사이버계층을 겨냥해서는 좋은 홍보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WSSD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접속건수가 높은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형식으로 홍보한다. 월드컵경기 기간에는 월드컵조직위원회,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의 배너광고로 삽입 가능하다.

특별교육은 집단으로 구성된 특정한 조직에게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홍보대상의 특성에 따라 내용의 구성이나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특별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공무원연수, 민방위교육,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공개수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획방송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송은 「환경스페셜」 또는 「세계는 지금」이 있다.

팜플렛, 책자, 방송, 옥외광고 등의 홍보방법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한을 받으므로 적절한 홍보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2.5 시기별 추진계획

시기별 홍보 추진계획은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홍보만을 전담하기 위하여 환경부 주관 하에 국정홍보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와 방송광고공사, 인터넷벤처기업, 신문사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칭 WSSD 홍보기획단)를 발족한다. 기획위원회는 정해진 예산과 범위 내에서 홍보할 주제, 매체, 방법, 시기별 전략 등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획위원회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게 분담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업무는 3월말까지 완성한다.

두 번째 단계 시기는 4월에서 월드컵이 시작 전인 5월말까지로 정한다. 우선 4월말인 지구의 날까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환경을 주제로 한 陸海空 개념에서 홍보하고 국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단계 시기는 월드컵 기간으로 한다. 세계의 이목이 우리 나라에 주목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계기로 환경월드컵이라는 표방에 어울리는 각종 홍보를 기획한다. 월드컵 경기 휴식시간을 이용한 방송광고 시간을 할애하여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내용들을 홍보한다. 또한 월드컵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2002worldcupkorea.org/>)를 활용하여 ‘환경월드컵’이라는 배너를 추가하여 홍보하며 외국어 사이트에는 접속건수를 확인하여 가치가 인정되면 함께 추가한다. 이 기간에 중요 행사인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 단계는 월드컵대회가 종료 후부터 WSSD 기간까지인 7월, 8월, 9월 동안 수행한다. 이 때에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있는 주요 경제와 사회 이슈를 홍보한다. 국민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주요 이슈로는 소비패턴의 변화, 관리체제 등을 들 수 있다. WSSD 기간에는 TV를 통한 기획특집을 2부작으로 마련하여 1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홍보내용들을 종합하고 2부에서는 WSSD와 관련하여 개최되었던 각종 지역회의, 준비회의를 소개하고 WSSD에서 도출된 결론의 의미를 홍보한다. WSSD 개최 전에 1부를 방영하고 종료 후에 2부를 방영하도록 계획한다. WSSD에서 국가추진목표를 발표하였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주제와 선정된 국가추진목표의 내용을

신을 수 있는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홍보기간 동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제정한 주요 기념일은 세계 물의 날(3. 22), 세계 결핵의 날(3. 24), 세계 산림의 날(4. 29)이고, 국가에서 제정한 기념일은 기상(3. 23), 식목일(4. 5), 보건의 날(4. 7), 장애인의 날(4. 20), 과학의 날(4. 21), 정보통신의 날(4. 22), 노동자의 날(5. 1), 발명의 날(5. 19), 방재의 날(5. 25), 바다의 날(5. 31), 환경의 날(6. 5), 제헌절(7. 17)을 들 수 있다.

이들 기념일과 관련한 학술대회, 세미나, 공식적인 기념행사에 올바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WSSD를 소개한다. 이들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은 기념사나 축사에 언급하거나 행사 기념 책자나 팸플릿을 활용할 수 있다. 각종 국가행사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 또는 기획위원회의 주관 하에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표 IV-4>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시기별 추진계획안

단계	시기	추진계획안
1단계	3월	- 정부부처와 기관(방송, 신문사) 홍보기획위원회 구성(가칭: WSSD 홍보기획단)
2단계	4월~5월	- 4월~지구의 날: 지속가능발전 개념 홍보 - 지구의 날~5월말: 산림(陸), 담수(海), 대기오염(空)
3단계	6월	- 월드컵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4단계	7월~9월	- 그 밖의 경제, 사회 이슈와 정상회의 홍보

2.6 홍보안 예시

■ 지속가능발전 팸플릿안

제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인간활동과 자연의 균형이 점차 붕괴된다!

- 현재 세계인구는 60억에 달하며 지구상의 자동차 대수는 약 6억8천만대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사용은 2차 세계대전말 이후 4배나 증가하였다.
- 20세기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계인구, 산업혁명이후의 경제성장에 결부된 에너지사용의 지속적인 증가, 과도한 개발과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지구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있다.

[이 부분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다 시각화함]

- 1999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였으며 엘니뇨 현상의 위력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초래한다.
- 이러한 기상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 세계인구의 상당수가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며 이러한 빈곤층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개도국 빈곤층의 인구증가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자연환경의 황폐, 빈곤 및 질병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한다.
-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 환경문제는 지구전체 인류의 사회, 경제,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 현재와 같은 생산과 소비패턴 추세를 유지한다면 전지구상의 인간활동과 자연의 균형은 점차 깨질 수 밖에 없다.
-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사회적인 안정과 건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시이소처럼 collapse된다.

*** 인간활동 \ 자연의 균형 깨진 그림**

시이소를 두고 자연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도형화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자연자원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현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개발 또는 발전”을 의미하며 경제, 환경, 사회적 목표를 통합하는 발전전략임

(2) 지속가능발전을 보장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자연보전, 환경보호를 통한 기본적인 환경수요의 충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빈곤, 질병, 여성지위 개선 등의 사회적 이슈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며 환경·경제의 효율성(eco-efficiency) 제고 등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추구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 이러한 전 지구의 인간활동과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필요에 따라 생산을 무작정 늘려 소비를 해서는 불가능하다.
 - 현재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만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대 내에서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에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전 지구차원(global)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공통된 이념이 담긴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 된 책임원칙으로 자원을 공평하게 활용하도록 경제, 사회, 환경적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이 시급하다.
- 지구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전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지역의 입장차이로 경제, 사회, 환경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과거 경험은 경제, 사회, 환경 이 들 세 개의 축에서 일부만이 중심이 되어서는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세 개축의 우선 순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 개의 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지가 미래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이다.

3개 축을 원형으로 균형된 그림 제시

-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 개 축의 조화를 최종목표로 언제, 어떠한 계획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가 개최된다.

(3) WSSD는 어떠한 회의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

- WSSD는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을 비롯한 UN 189개국 회원국 대표가 모여 미래의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로서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다(WSSD 자세한 정보: www.johannesburgsummit.org; 남아공화국 회의장안내: www.joburgsummit2002.com)
- 1992년 세계정상들은 지구정상회의를 통해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고 21세기

- 에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구촌 온 인류가 실천하여야 할 행동 강령인 「의제21」을 채택한 바 있다.
-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 10년을 돌이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각국 및 지역의 주요 성과를 평가, 반성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다시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 「의제21」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상급인사의 참석과 함께 고위의 정치적 공약, 실천적인 단계 조치 및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 WSSD에서 논의될 구체적 실천방안들은 미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와 후 세대들의 행동전략이 된다.
- WSSD의 논의 결과는 향후 세계의 경제, 사회질서 및 환경이슈를 재편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WSSD 본 회의에 상정될 최종적인 의제를 준비하기 위해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으로 각국에서 지역차원에서 그리고 지구차원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WSSD를 위한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의 준비

- 국가 차원의 준비
 - * 국가별로 「의제21」 이행성과 평가
- 5개 지역 준비회의

(유럽과 북미, 중남미와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와 태평양, 서아시아지역)

 - * 지역차원의 의제 21 이행성과 평가, 지속가능발전 실천 장애요인 도출, 지역차원의 실천전략 마련
- 지구차원의 준비회의(Prepcom 4차례)
 - * 국가, 지역차원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WSSD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지구차원의 실천전략(안) 마련
 - * WSSD에서 채택될 정치적 문안(political document), 전세계이행 관련 문안(global implementation document) 초안 작성

- 이번 WSSD에서는 정부 고위급회의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간 대화 회의와 각국 주요 그룹의 지속가능발전 성공 실천사례 등을 홍보하는 각종 부대행사가 열린다.

(4) 세계정상회의에서는 무슨 이슈가 다루어 질 것인가?

-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의 준비회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치들이 국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1992년에 있었던 정상회의 「의제21」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특히 오염자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 된 원칙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지금까지의 수사(말잔치)에서 벗어나 그 동안 전 지구차원에서 논의된 밀레니엄 선언 등 각종 국제회의와 포럼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목표 및 시간계획이 포함된 실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지구차원의 제2차 준비회의(2002년 1월 28일~2월 8일, 뉴욕)에서 마련된 WSSD에 상정할 지구차원의 이행협상문안 초안에서는 앞으로 경제, 사회, 환경 3축의 조화를 위해 전 지구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주요 과제를 분류해 놓고 있다.

→ 크게 경제·사회적이슈, 천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관리이슈, 관리체제 개선 및 이행수단 이슈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이슈	주요 과제
경제·사회	세계화, 빈곤탈피, 비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건강
천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관리	담수, 바다·해안·연안, 지구온난화 및 재난, 기후변화, 대기 및 오존층, 토지 및 농업관리, 사막화, 산악생태계, 관광개발, 생물종다양성·유전자원, 산림, mining,
제도정비·이행수단	-재정, 무역, 기술이전, 과학 및 교육, 능력형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국가, 지역, 국제수준에서의 관리체제(governance) 개선

(5) 우리 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환경이슈로만 국한한 편협된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
- 환경이슈에서 출발은 하였으나 점차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된 이슈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경제, 사회로 확대하는 인식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결국 경제, 사회, 환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속가능발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good governance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구성되어 WSSD 준비는 물론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www.pcsd.go.kr).
- 전 지구차원에서 논의되는 동향 파악에 적극 참여,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참여와 협조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장기적으로는 WSSD에서 최종 채택되는 지구차원의 이행문안을 기초로 향후 10~20년 우리 나라에서 실천해야할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논의 상황을 주지하고 이에 준비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정부, 국민, 기업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정부

- 지속가능한 국토, 교통관리체계 구축
- 자연생태계의 보전 강화
- 지속가능 실천교육 강화
- 대기, 수질,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성 관리 강화
- 청정산업 육성과 청정기술 개발 지원
- 충분한 정보제공
- 경제, 환경, 사회통계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 국민

- 환경부가 환경교육교재로 발간한 ‘국민생활과 환경보전’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현한다
- 생활인으로서 환경을 고려한 물품의 구매, 사용, 폐기 활동을 통한 녹색소비의 구현
-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환경오염 감시활동 강화
- 공동체 의식의 제고

□ 기업

- 청정생산공정 개발 및 제품생산
- 환경기술 개발 강화
-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투자
- ISO14000인증, 에코라벨링 획득 노력 등

■ 물의 날 관련 홍보전략안

(1) 원칙

- 올해를 UNEP에서 “Water for Development”의 해로 정하였다. 하지만 ‘Development’라는 원문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개발의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명한 용어로 번역하여 그 의미와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예: 지속발전(번영)을 위한 물]
- 8월말에 개최되는 WSSD 대 국민홍보를 3월의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하는 것은 WSSD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기적으로 이른다. 우선 ‘물의 날’ 행사와 관련한 대 국민홍보(광고현판, 공모전)는 WSSD보다는 “Water for Development”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과 물」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요행사 관련

□ 기념식

- 기념사 내용 중에 UN 메시지로서 WSSD까지 포괄하여 언급한다. 물(담수자원)은 우리 후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 그 이유로 물은 건강, 빈곤,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 금년 8월말에 개최되는 WSSD에서도 물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임을 기념사 또는 연설문에서 강조한다.
 - **학술세미나**
 - “Water for Development”를 대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소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의 역할’과 ‘Water for Development in WSSD’로 구분하여 물, 지속가능발전, WSSD를 연계토록 발표주제를 정한다.

(3) 슬로건(안)

- 1) 물 부족, 물 부족만이 아닙니다.
- 2) 후세 사랑은 물 사랑부터
- 3) 생명의 물, 고갈의 물
- 4) 물의 주인은 당신인가요? or 물, 당신만의 것인가요?
- 5) 물 절약, 발전의 원동력(시작, 출발)입니다.
- 6) 나라는 물 관리, 우리는 물 절약
- 7) 내일의 발전은 물 절약에서(부터)
- 8) 나의 물, 우리의 물
- 9) 물 부족은 생명의 고갈입니다.
- 10) 물, 이젠 우리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 11) 물, 당신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4) 팸플렛 내용 순서(안)

- 1) 소개: 물, 지속가능발전, WSSD 언급
- 2) 물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현 상황(예: 물 부족국가, 수량, 수질, 시설 등)
- 3) 물 소비 습관에 대한 4~5가지 질문에 의한 자체평가와 결과 해석
-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관리란?
- 5) 현 물 관리 정책의 핵심과 방향 소개
- 6) 물 절약 방법(실천사항) 소개

■ WSSD 관련 홈페이지 구축 체계

-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ssd.kei.re.kr/>
- 주소 첫 화면은 한국어를 초기 화면으로 하여 영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영어와 한국어 모두 내용의 체계는 'WSSD', 'SD Korea', 'KEI Project', 'Contact'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 'WSSD'에서는 WSSD에 대한 소개와 그 동안의 논의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관련된 해외 웹사이트로 이동이 수월하도록 구성하였다.
- 'SD Korea'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이행노력 등을 소개하고 국내 PCSD와 연계토록 하였다.
- 'KEI Project'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Contact'에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 있도록 webmaster, 관련 기관의 전자메일 주소를 수록하였다.

0. 결론

V. 결론

이번 2002년 WSSD의 개최 목적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합의한 내용들이 국가, 지역, 지구 차원에서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향후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몇 차례의 준비회의와 지역회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합의한 의제21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이미 내린 상태이다.

거론된 주요 의제들은 세계화, 천연자원 관리, 빈곤, 생산·소비패턴, 건강 등의 현안문제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무역, 기술이전과 같은 이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리우회의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차 준비회의 결과인 의장보고서에 나타나듯이 앞으로 남은 제3차, 제4차 준비회의와 정상회의는 미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회의는 각 의제에 대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만약 WSSD에서 이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의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 협의한 내용과 상치한다면 국제관리체제의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행수단에 대해서는 의제와 관련 있는 WTO, WHO, FAO 등의 국제기구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체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WSSD 이후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각국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기보다는 자국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여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우리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한으로 부각하도록 노력하는데 있다. 주요 의제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있다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느 편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에 선진국 또는 개도국에서도 동일한 의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한다면 차선책

으로 지역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또는 동북아 지역의 입장에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탄력적인 정부의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준비회의와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본 보고서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UN에서 권고하는 ‘101가지 방법’과 ‘NPT’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101가지 방법’은 이행결과에 대한 홍보와 다른 국가의 벤치마킹을 위해 긴요한 정보이다. NPT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목표이나 향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국민 인식증진방안을 위한 홍보에서는 국민들의 협력도출이 가능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협력을 담당하고,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정된 NPT와 WSSD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일개 정부부처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전세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WSSD가 환경에만 국한하여 열리는 회의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대응전략과 이행사례 공모를 정부부처나 민간단체에 알리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환경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의 전환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WSSD에서 21세기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상인 외, 200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이행 이니셔티브”,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권경자, 2000, <http://wildlife.re.kr/column/contents/column-20001130.htm>
- 박기순 외, 2001, PR 캠페인, 한올아카데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새천년을 향한 에너지산업의 도전
- 왕윤중 외, 2001, 세계화와 지속가능개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승현 외, 1999,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환경부, 2000, 환경백서
- 환경부, 2001a, 제9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참가대책자료집
- 환경부, 2001b, 20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논의동향 및 대책(회의
자료)
- 환경부, 2001c, 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 PCSD, 2001a, 「의제21 국가실천계획」 검토보고서
- UN, 2001a, Global status of biological divers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UN, 2001b,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UN, 2001c, Implementing Agenda 2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UN, 2001d, Energy and transpor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UN, 2001e, Global status of biological divers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UN, 2001f,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UN, 2001g,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biotechnolog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UN, 2001h, Water - a key resou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